

총여보관용.

또 다른 선언

... 우리는 존재하는 것,
혹은 존재해온 것이
가능한 모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우리는 냉정한 의식으로 꿈을 꾀다.



■ 주 관 : 「선언」 학술제 준비모임

■ 주 최 : 문과대 학생회 / 신방과 학회 꿈지락, 문과대 학회 딜레마, 중앙동아리 묵하, 제2대학
/ 제10대 총여학생회, 총학생회 환경위원회,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
13번째, 자치신문연합

■ 후 원 : 제35대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또 다른 선언

『당산당선인』 150주년 기념 학술제

그때로 또 새로운 시작

『당산당선인』 150주년 기념 학술제	1
『당산당선인』 150주년 기념 학술제	2
『당산당선인』 150주년 기념 학술제	3
『당산당선인』 150주년 기념 학술제	4
『당산당선인』 150주년 기념 학술제	5
『당산당선인』 150주년 기념 학술제	6
『당산당선인』 150주년 기념 학술제	7
『당산당선인』 150주년 기념 학술제	8
『당산당선인』 150주년 기념 학술제	9
『당산당선인』 150주년 기념 학술제	10

당산당선인 150주년 기념 학술제

『당산당선인』 150주년 기념 학술제	11
『당산당선인』 150주년 기념 학술제	12
『당산당선인』 150주년 기념 학술제	13
『당산당선인』 150주년 기념 학술제	14
『당산당선인』 150주년 기념 학술제	15
『당산당선인』 150주년 기념 학술제	16
『당산당선인』 150주년 기념 학술제	17
『당산당선인』 150주년 기념 학술제	18
『당산당선인』 150주년 기념 학술제	19
『당산당선인』 150주년 기념 학술제	20

『당산당선인』 150주년 기념 학술제

... 우리는 존재하는 것,
혹은 존재해온 것이
가능한 모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우리는 냉정한 의식으로 꿈을 끈다.

『당산당선인』

『당산당선인』 150주년 기념 학술제	21
『당산당선인』 150주년 기념 학술제	22
『당산당선인』 150주년 기념 학술제	23
『당산당선인』 150주년 기념 학술제	24
『당산당선인』 150주년 기념 학술제	25
『당산당선인』 150주년 기념 학술제	26
『당산당선인』 150주년 기념 학술제	27
『당산당선인』 150주년 기념 학술제	28
『당산당선인』 150주년 기념 학술제	29
『당산당선인』 150주년 기념 학술제	30

차례

학술제 준비 과정

● 차례 ●

차례	
『공신당선연』150주년 기념 학술제를 준비하여	4
학술제가 걸어 온 길	6
학술제 일정	12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

또 다른 선언: 새로운 주체 형성 과정이 필요하다!	학술제 준비 모임	13
맑스주의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을 주장한다!	beyond 고학번 모임	21
폐쇄성과 고립성을 넘어 자치와 연대의 운동으로	제 10대 총여학생회	37
반체제적 여성주의, 그리고 급진적 연대	여성모임 13번째	45
환경 운동의 관점과 실천		
:환경운동과 노동 운동의 연대를 위하여	전국학생연대환경위원회	48

'학회론'이 아닌 학회 '이야기'

1998년의 공지락	신방과 Comm.知樂	56
목숨을 건 도약	정치경제학회연구회 木下會	68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참고글-1) 자치와 연대를 위하여...	문과대 학생회	80
제네바 현장 보고서		83
참고글-2) Think Globally, Act Locally!		88

개 언 개 고

끝나지 않은 소송 : 주체와 윤리의 문제	김 항	94
------------------------	-----	----

『공산당선언』 150주년 기념 학술제

'또 다른 선언'을 준비하며...

『공산당 선언』 150주년 기념 학술제 준비 모임

학회의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학회마당'을 준비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학술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진행될 행사를 눈앞에 두고도 여전히 자신 없어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운동의 위기에 대한 체감의 깊이를 절실하게 느낍니다.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벗어날 탈출구라도 모색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 혹은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판이라도 벌여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급박한 심정과 배짱 하나로 일을 추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행사를 눈앞에 두고 그나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처음 생각했던 것에 비해 우리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함께 하겠다는 단위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치라는 말이 한창 유행할 때 그 속에는 자발적인 운동의 흐름에 대한 명목적이라서 한 신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명신이 지금의 위기, 침체의 상황을 벗어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나름대로의 좌절을 겪고 있을 즈음에 접하게 된 많은 단위들의 호응은 이런 생각이 단지 지금의 상황에 대한 비판이나 냉소만으로 그치지 않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이러한 자발적인 흐름들이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전령사라든가 또는 이 하나의 시도가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답이라든가 식의 반복되는 순환의 고리를 다시 되풀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이 행사가 계란으로 바위 치기에 그친다해도, 현재의 위기에 대한 탈출구를 모색하는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문제의식을 털어놓고 함께 소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 자리가 각자의 운동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그것들이 각자의 운동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사회의 위기에 관한 공동의 문제로서 인식되어 그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한 공동의 지점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학술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금 이 시기에 『공산당선언』(이하 '선언') 150주년이 무슨 의미가 있는나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는 단순히 산술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단선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를 내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신의 문제 의식 속에서 '선언'을 위치시키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역사의 흐름의 단초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태동하고 있던 자본주의 사회의 비참한 상황을 폭로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의 담지자로서

프롤레타리아트 자신의 해방을 선포하였던 '선언'은 150주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목도되고 있는 전지구적인 자본의 광폭한 흐름 앞에서, 다른 한 편으로 지금 처해 있는 학생 사회의 위기, 침체의 상황 속에서 지금 '선언'이 던져 주는 상징적 의미는 다른 어느 때보다 더 클 것입니다. '선언'이 던져 주는 의미들을 풀어내는 일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하나는 '선언'이 던져 주었던 문제들을 150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재해석하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선언'이 프롤레타리아트 자신의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었다면 그러한 '선언'의 정신을 지금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학술제를 준비하는 것도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줄기는 '자치'에 대한 것입니다. 현실의 모순이 극에 달하고 있고 그 모순을 온 몸으로 받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효과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학술제에서 이러한 자치운동의 위기를 화두로 삼아 그것의 활로로 모색해 보는 작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선언'을 현실의 모순에 고통받고 있는 피억압자들의 자기 운동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현재 학내에서 그것을 재해석하고 그 문제의식을 계승한다 함은 학내에서의 문제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타개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언과 자치(운동)를 고민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이에 덧붙여 우리는, 현재의 정세 속에서 선언의 현재적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독해하고 해석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선언을 기념하고자 함은 아니며, 세계화라는 구호아래 진행되는 자본의 광폭한 자기증식과 자기파멸의 길에 대한 저항으로서 역사의 새로운 순환을 위한 또 다른 선언을 만들어 가는 일입니다.

이러한 두가지 방향은 서로 동떨어진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술제의 무게중심은 전자에 많은 부분 치우쳐 있습니다. 어떠한 완결된 판을 짜 놓고 그 판에 따라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학술제가 기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후자의 작업들도 비록 학술제 자리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못하겠지만 이후의 실질적인 운동의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위기라고만 명명되지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좌절만을 되풀이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운동을 고민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냉소나 비판으로만 일관하거나 자기의 운동 속에 갇혀서 자족적인 희망만을 품는 것은 위기의 타개에 조금의 긍정적 역할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운동을 한다고 할 때 필요한 것은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의식을 견지하면서 냉정한 의식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꿈을 꾸어 나갈 수 있는 낙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한 의식으로 꿈을 꾸는' 작업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공산당 선언』 150주년 학술제가 걸어 온 길

학술제 준비 모임

0. 들어가며

학회의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학회마당'을 준비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학술제'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추진하면서도 여전히 자신 없이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운동의 위기에 대한 체감의 깊이가 더해 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힘겹게 끌고 온 1년이라는 시간은, 주체하는 사람들의 역량의 문제를 사소한 변수로 간주한다면¹⁾, 대학 사회의 현 주소를 보여 주는 지표라고 이해해도 좋을 듯 합니다.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고, 어떻게든지 그것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면,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라는 정세에 대한 초조한 판단과 배짱 하나로 일을 추진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고의 비관주의와 의지의 낙관주의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누군가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비록 '계란으로 바위 치기'식의 행사에 그칠지 모르지만, 현재의 위기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향한 시도라는 데서 의의를 찾으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냉철한 분석과 그에 따르는 위기로부터의 탈주는 결코 일회적인 행사 또는 일회적 글쓰기에 의해 가능하지 않음을 이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끊임없이 '자신'의 문제의식을 구체화하는 속에서 자신의 운동방향을 점검하는 것이며, 각자의 차이에 기반한 소통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도출해 내고 함께 활로를 모색해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회마당에서 공산당 선언 학술제를 준비하기까지의 그 지난한 작업이, 나름대로 전망을 찾아 나가려는 다양한 시도들에게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동안의 과정을 공개하려 합니다.

- 1) 주체의 역량 문제를 쉽게 간과해버리서는 안되겠지만, 그 주체하는 사람들 역시도 '위기'를 형성하는 제반조건으로서의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 그리고 그것이 관철되는 대학사회 속에 속해 있다고 볼 때, 또한 그들 역시 굴절된 운동의 역사를 떠안고 그 속에서 운동을 사고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할 때, 지금의 지지부진함은 단지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의 문제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변수들을 요인으로 가지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1. 학회마당의 문제의식

우선 학회마당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온 '학회의 위기와 침체'에 대한 논의의 한계에 주목하여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학회 위기와 관련한 대부분의 논의는 개별 학회의 특수성이나 학회 구성원들의 문제로써만 한정되었고, 이런 속에서 학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단지 자기 학회의 문제에만 국한해 사고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학회 위기란 사회 제반 상황의 변화, 대학사회의 변화, 운동의 위기라는 연쇄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일련의 변화와 결코 분리되어 사고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의 위기는 전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분석되어야 하며,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도 개별적인 주체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가? 위기라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즉,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학회마당은 학회의 위기나 침체에 관해 공동으로 논의해 볼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둘째, 가능한 실천 공간의 필요성으로부터 학회마당은 출발했습니다. 학회는 그 탄생과 존립의 유지에 있어 실천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즉, 학회란 운동의 즉각적인 필요성 속에서 탄생한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움직임이며, 당면한 현실 자체가 이론과 실천간의 긴장감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것이었기에 치열함이란 규정 속에서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명백한 적의 존재, 그것을 깨부수는 도구로서의 이념 또는 진보적 이론의 필요성, 진보적인 이론의 학습, 학습과 실천의 긴밀한 결합...그것이 바로 학회가 가능한 제반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에 있어 학회의 근간이 되었던 진보적 이론을 쉽게 규정할 수 없게 된 것뿐만 아니라 '학습한 이론을 실천과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까?'란 문제에 대한 답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과거와 똑같은 이론들을 학습하더라도 그것은 어느 사상가의 이름 하나 더 아는 단순한 정보 습득 이상은 아니게 된 것이죠. 이와 함께 객관적인 운동의 조건이라 불리는 사회의 변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듯이 이제 명백한 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더군다나 초국적인 자본의 움직임 속에서 당장 먹고사는 것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쉽게 "명백한 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단일한 적을 상정하는 것 그리고 단일한 운동 주체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유효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약하나마 학회가 지니고 있는 문제의식들을 표출해내는 활동의 장을 만들기 위한 시작, 그것이 바로 학회마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변화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셋째, 학회연합에 대한 시도로 대표되는 위기의 탈출구 모색에 대한 발전적 계승 속에 학회마당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학회의 위기에 대해 공동으로 논의하고 공동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까지는 학회연합과 문제의식을 같이 하지만, 학회연합과 같은 질서들에서 문제가

되었던 수직적인 질서를 탈피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학회연합은 수직적인 구조로 존재함으로써 학회의 위기나 학회가 담보해야 할 부분에 대해 학회연합의 주체였던 고학번 선배들의 문제의식들이 개별학회의 구체적인 문제들과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²⁾. 그래서 학회마당은 학회에 대한 고민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수직적인 질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형식과 내용에 관해서 공동으로 논의해보는 과정 자체를 만들어 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2. 「공산당 선언」 학술제로의 우회

그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 학회마당은, 처음에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과 답답함이 자신만의 것은 아니었다는 위로와 함께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공동의 작업을 벌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잠시 활기를 띠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난 뒤에는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 막막해져버렸고 그로부터 논의가 지지부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지부진해진 이유를 구체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의 부재에서 찾게 되었고³⁾, 이러한 판단 하에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구체적인 틀거리를 제시하되, 개별학회의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그 내용을 함께 채워나가는 방향으로 우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산당 선언 150주년 기념 학술제'라는 형식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공산당 선언 150주년 기념 학술제인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우선 우리는 150주년이라는 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학술제를 기획한 배경에는 어느정도 정세를 이용해보겠다는 속셈이 있음을 밝힐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⁴⁾

2) 학회연합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는 학회연합이 개별 학회의 구체적인 고민을 담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결국 개별 학회 회원들은 학회연합으로부터 실제로 학회를 운영하는 데서 생기는 고민에 대한 도움을 거의 받지 못했다. 두 번째는 학회연합이 학회를 과도하게 정치적 조직화의 공간으로 인식한 데 있다. 학회연합이 생길 당시엔 이미 정치적 조직화 공간으로써의 학회 질서가 급속히 해체되고 있었다. 언급한 두 가지는 서로 연관된다는 점에서 결국 하나이기도 하다.

3) 완전히 열린형식의 학회마당이란 결국 일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개별학회들에게 오히려 이중의 부담을 안겨주는 데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장 개별학회를 이끌어 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모여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어려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4) 올 봄에 프랑스에서 공산당 선언 150주년 학술제가 열렸고, 그 안에서 현 정세와 관련하여 맑스주의를 재구성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에 고무받았고 그로부터 아이디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언의 현재적 의미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동하고 있던 자본주의 사회의 비참한 상황을 폭로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의 담지자로서 프롤레타리아트 자신의 해방을 선포하였던 「선언」은 1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목도되고 있는 전지구적 자본의 교묘하고도 광복한 흐름 앞에서, 다른 한편으로 지금 처해 있는 학생사회의 위기, 침체의 상황 속에서 그것이 던져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3. 「공산당 선언」 학술제의 문제의식

"우리는 존재하는 것 혹은 존재해온 것이 가능한 모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우리는 냉정한 의식으로 꿈을 쫓는다."

1) 운동의 위기/ 자치·자기 모순의 발현으로서의 운동

우리는 이번 학술제의 축을 크게 두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줄기는 '자치'에 대한 것입니다. 현실의 모순이 극에 달하고 있고 그 모순을 온 몸으로 받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효과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우리'(흔히 말하여지는 일반 학우)는 뭔가 갑갑하긴 하다고 느끼지만, 대부분 그것을 자신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거나 감히 그것에 대해 따지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 (대학)사회는 전체적으로 어떤 마법에 걸려 버린 듯합니다. 자본의 엄청난 공세 속에서 인간 하나하나의 단지 자본의 자기증식에 도움이 되는 노동력이나 아니냐로 판단되며, 경쟁과 효율성의 이데올로기는 '공동체'라는 개념을 기각한 채, 살아남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마치 전적으로 개인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IMF로 대변되는 지금의 경제위기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모순으로 가득찬 (자본주의) 사회인가를 실감케하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개개인을 강력하게 체제 내로 포섭하면서 자신의 운동 논리를 강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친구들과 학교의 분위기를 보자면, 그 갑갑한 현실은 대학내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 많은 우리의 친구들은 휴학을 결심해야 하는 것인지, 왜 제 2인 문관에 자치공간을 얻어내기 위해 그렇게 싸워야만 하는지, 왜 학교에서 밥을 먹기가 그렇게 힘든 것인지...

그나마 예전에는 자신을 둘러싼 현실의 모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발언하려 했던 조직적인

어를 얻었음을 밝혀둡니다.

움직임이 학회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그러한 자생적인 움직임마저 제대로 형성되고 있지 못한 것을 보면 우리는 현재를 '위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치운동의 쇠퇴는 지금 우리 개개인에게 부과되는 사회의 무게라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것인가-우리는 몇몇 만을 위해 준비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기 위해 각종 시험들을 준비해야 하고 영어를 공부해야 하고 학점을 잘 따야 하는 외적, 내적 요구를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보면, 그리고 운동을 고민하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것이 학내에서 (자치)운동이 가능하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뭔가 잘못 됐다고 느끼지만... 또 때론 뭔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싶다고 느끼기도 하지만...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게다가 지금의 운동판에서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지금의 판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지만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러나 혼자 힘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그래서 막막하기만 한 그런 느낌들. 아마 많이들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기존 운동권에 대한 비판으로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것과는 맥이 달아 있는 것으로, 기존의 운동권이란 적에 대한 단일한 규정과 단일한 주체 설정 속에서 운동의 의제가 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관례적으로 구분되는 폐쇄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메커니즘 속에서는 복수의 정체성을 지닌 주체와 그에 따른 복수의 운동 가능성에 대한 사고가 배제되어 버리는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자치운동이 불가능한 운동지형이며, 그렇기에 복수의 주체성과 복수의 운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치운동의 활성화에 기반한 새로운 운동권이 짜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에서 출발한 운동이 가능한 공간, 개인적인 불만이 단지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운동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학술제에서 자치운동의 위기라는 화두로 그것의 활로를 모색하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부르게 마법에 걸린-탈정치화된-이 (대학)사회를 또는 추상적인 의미의 '일반학우'를 어떻게 탈주술화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운동이 가능했던 제반 조건들이 무너지고 있음을 학회나 자치단체들-운동을 고민하는 단위들-의 열악한 현재 상황을 통해 확인하고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위기로부터의 탈출구를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치' 또는 '자치 운동'이라 말하는 것은 바로 자기모순의 발현으로서의 운동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 흔히 말하는 자신을 억압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공산당 선언」의 재해석 또는 현재적 의미 부여

우리는 선언을 하나의 메타포로 사고하고 있습니다. 선언을 현실의 모순(자본주의)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피억압자들(노동자 계급)의 자기 운동을 촉구하고 그것을 폭발시켜내는 기록체라고 해석한다면, 현재 학내에서 그것을 재해석하고 그 문제의식을 계승한다 함은 학내에서의 모순

-그것은 사회의 모순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죠-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언과 자치(운동)를 고민하는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우리는, 현재의 정세 속에서 선언의 현재적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독해하고 해석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선언을 기념하고자 함이 아니며, 세계화라는 구호아래 진행되는 자본의 광폭한 자기증식과 자기파멸의 길에 대한 부정이며 역사의 새로운 순환을 위한 또 다른 선언인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방향은 서로 동떨어져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학술제에서는 전자에 무게중심이 실릴 것 같습니다. 이는 어떠한 완결된 판을 짜 놓고 그 판에 따라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학술제가 기획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생한 불균형(?)이라 생각하며, 열린 형식의 학술제-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만들어 가는 방식-의 시도였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선언의 재해석 또는 현재적 의미 부여	2. 자치운동의 위기	3. 자치운동의 활성화
4. 자치운동의 실천	5. 자치운동의 이론	6. 자치운동의 역사
7. 자치운동의 문화	8. 자치운동의 정치	9. 자치운동의 사회
10. 자치운동의 경제	11. 자치운동의 교육	12. 자치운동의 환경
13. 자치운동의 예술	14. 자치운동의 과학	15. 자치운동의 기술
16. 자치운동의 의료	17. 자치운동의 법학	18. 자치운동의 철학
19. 자치운동의 종교	20. 자치운동의 언어	21. 자치운동의 문학
22. 자치운동의 미술	23. 자치운동의 음악	24. 자치운동의 공연
25. 자치운동의 스포츠	26. 자치운동의 게임	27. 자치운동의 인터넷
28. 자치운동의 모바일	29. 자치운동의 빅데이터	30. 자치운동의 인공지능
31. 자치운동의 로봇	32. 자치운동의 우주	33. 자치운동의 해양
34. 자치운동의 항공	35. 자치운동의 우주	36. 자치운동의 해양
37. 자치운동의 항공	38. 자치운동의 우주	39. 자치운동의 해양
40. 자치운동의 항공	41. 자치운동의 우주	42. 자치운동의 해양
43. 자치운동의 항공	44. 자치운동의 우주	45. 자치운동의 해양
46. 자치운동의 항공	47. 자치운동의 우주	48. 자치운동의 해양
49. 자치운동의 항공	50. 자치운동의 우주	51. 자치운동의 해양
52. 자치운동의 항공	53. 자치운동의 우주	54. 자치운동의 해양
55. 자치운동의 항공	56. 자치운동의 우주	57. 자치운동의 해양
58. 자치운동의 항공	59. 자치운동의 우주	60. 자치운동의 해양
61. 자치운동의 항공	62. 자치운동의 우주	63. 자치운동의 해양
64. 자치운동의 항공	65. 자치운동의 우주	66. 자치운동의 해양
67. 자치운동의 항공	68. 자치운동의 우주	69. 자치운동의 해양
70. 자치운동의 항공	71. 자치운동의 우주	72. 자치운동의 해양
73. 자치운동의 항공	74. 자치운동의 우주	75. 자치운동의 해양
76. 자치운동의 항공	77. 자치운동의 우주	78. 자치운동의 해양
79. 자치운동의 항공	80. 자치운동의 우주	81. 자치운동의 해양
82. 자치운동의 항공	83. 자치운동의 우주	84. 자치운동의 해양
85. 자치운동의 항공	86. 자치운동의 우주	87. 자치운동의 해양
88. 자치운동의 항공	89. 자치운동의 우주	90. 자치운동의 해양
91. 자치운동의 항공	92. 자치운동의 우주	93. 자치운동의 해양
94. 자치운동의 항공	95. 자치운동의 우주	96. 자치운동의 해양
97. 자치운동의 항공	98. 자치운동의 우주	99. 자치운동의 해양
100. 자치운동의 항공	101. 자치운동의 우주	102. 자치운동의 해양

● 학술제 일정 ●

첫째 날 15일(화)	둘째 날 16일(수)	셋째 날 17일(목)
전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역회론’어 어닌 역회 ‘어어기’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
● 기조발제(문과대) - 국제연대투쟁에 대해 ● PGA (지구적민중행동그룹) 강연 ● 영상물 상영 ● 질의 응답	● 학회이야기 하나 - 학회, 무엇이 문제인가? - 발제 : 꿈지락, 딜레마 ● 학회이야기 둘 - 학회활동의 전망을 찾아서 - 발제 : 묵하, 제2대학	● 열린 운동을 향한 작은 발걸음!! - 총론 발제 (학술제 준비모임) - 주제별 발제 (총여/ 총학환경위) - 논평 - 질의 응답

시간 : 늦은 6시

장소 : 신상대 별관 B103호

■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 ■

또 다른 「선언」

— 새로운 주체 형성 과정이 필요하다.

0. 들어가며.

맑스와 그의 동지들에 의해 150년 전 「공산당 선언」(이하 「선언」)이 출판된 이후, 「선언」은 수많은 저항의 근거이자 자극이 되었다. 지금 그 선언 15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제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그것은 어떤 고민과 자극을 주는가? 「선언」과 지금 우리의 고민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90년대 말 IMF 구제 금융으로 상징되어지는 한국 사회의 위기는 대학 사회의 붕괴로 나타나고 있다. 대규모 실업자의 양성소로, 그리고 고시 지망생의 집합소로 전락한 대학 사회에서 진보 운동의 위기를 얘기하는 것은 '좋았던 그 때'를 잊지 못하는 운동권들의 마지막 발악정도로 치부되곤 한다. 교정에는 여전히 운동권들의 수 많은 발언들이 여기 저기 널려 있지만, 대답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고민은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해야 한다. 선배들이 80년의 좌절 이후,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스스로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지금 학생 사회 역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인가? 우리는 이 글에서 이런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얘기 할 것이다. 이 전환은 곧 「선언」에 대한 지금 이 자리에서의 독해의 결과물이며, 또 다른 「선언」이 될 것이다.

1. 세기말 학생 운동은?

1.1. '학생 운동의 위기'

학생 운동에 대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 운동의 위기'라는 유쾌하지 않은 주제를 다시 한번 언급해야 한다. '학생 운동의 위기'를 얘기하면서 그 구체적인 상황을 나열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은 없다. 왜냐하면, 대학 사회에 몸담고 있는 이라면 누구나 쉽게 느낄 수 있을 뿐만 아

나라, 요즘의 상황은 '학생 운동은 끝났다'라 말해도 고개를 끄덕일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학생 운동의 위기'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지루한 나열을 생략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학생 운동의 위기'에 대해서는 흔히 세 가지 정식화된 이유가 존재한다.⁵⁾ 학생회 패러다임, 환상적 주체호명, 대중의 의문에 대답하지 않는 대중운동이 그것이다.

1.1.1. 학생회 패러다임⁶⁾

87년 6월 항쟁 당시 대규모 동원을 통해 그 위력을 증명했던 학생회 중심의 운동은 90년대 들어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 운동의 지배적인 운동 방식이다. 폭력적인 국가·자본에 맞서 효과적인 운동 방식이었던 학생회 중심의 운동은 이제 학생 사회 내의 모든 운동이 그것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학생회 패러다임에 갇힌 현재의 운동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학생회 패러다임은 이중의 질곡으로 다가온다. 먼저 학생회 이외의 운동의 경험이 없는 기존의 학생회 활동가들은 학생회를 중심으로 모든 운동을 사고해야 한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좀 더 많은 대중들을 동원하는 것이다⁷⁾.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운동의 수위를 대중들에게 맞출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운동에 대한 고민이나 운동에 있어 급진성을 담보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또, 이념은 이런 활동들의 정당화하는 근거로써만 작용한다. 이런 속에서 학생회 이외의 모든 공간들 역시 학생회 패러다임에 종속당한다. 학회나 학술 동아리 등이 학생회 활동가들의 재생산 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은 그 단적인 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회 패러다임을 넘는 고민은 실재화되기 어려울 뿐더러, 그런 흐름은 곧 학생회 패러다임에 다시 종속된다.⁸⁾

1.1.2. 환상적 주체호명⁹⁾

1.1.3. 대중의 의문에 대답하지 않는 대중운동

위기가 심화될수록 운동에 있어 대중은 더욱 더 대상화된다. 활동가들은 대중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그것을 '한 번도 동의한 적 없는' 대중들에

- 5) 이준택, 「학생운동의 고립심화 메카니즘에 대한 고찰」, 『용성웅성』 (제1호), 1997, pp.37-43.
- 6) 우리는 학생회 패러다임에 대한 뛰어난 분석 및 비판을 이미 가지고 있다. 장석준 외, 「대학 사회의 위기와 학생운동의 진로」, 『경제와 사회』 (제33호), 한울, 1997; 장석준, 「필요한 것은 '운동'이다」, 『오래된 습관 복잡한 반성』, 이후, 1998 참조.
- 7) 집회나 행사에 대중을 얼마나 동원하느냐가 그 해 학생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재생산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대중은 상호 관계를 맺어야 할 이들이라기 보다는, 관성화된 활동들의 대상으로 남겨진다. 이에 대한 자세한 비판은 '1.1.3. 대중의 의문에 대답하지 않는 대중운동'을 참조하라.
- 8) 기존의 학생회 패러다임을 비판하며 새로운 목소리를 냈던 대부분의 흐름들은 그 해 총학생회 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으로 학생회 패러다임의 공고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곤 했다. 물론 학생회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이 학생회 자체가 갖는 유의미함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런 행동에 대한 평가는 선거 기간과 그 이후 활동에 대한 것까지 고려된 것이어야 한다.
- 9)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2.2. 환상적 주체호명'을 보라.

게 따르기를 강요한다. 물론 모든 활동은 대중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관성화된 실천이나 정파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들은 운동에 대해 더 무기력해지며 멀어질 뿐만 아니라, 잠재된 자발성마저 억압된다.

'학생 운동의 위기'에 대한 이런 분석은 공통적으로 현재의 학생 운동이 활동가들과 대중들 사이의 간극을 결코 좁히지 못할 것을 예견한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운동은 새로운 주체의 형성을 강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 새로운 주체의 형성은 운동이 자기 갱신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현재의 학생 운동은 대중에 의해 운동 그 자체가 역동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잃어버렸다. 위기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존재함에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학생 운동의 모습은 바로 대중과 괴리된 운동의 파국을 선명히 보여준다.

1.2. 위기의 신화

이런 지속적인 '고립심화 메카니즘' 속에서도 학생 운동은 지속적으로 주체 형성이 가능하였다. 기존의 학회-학생회 구조를 통한 최소한의 주체 재생산이 여전히 가능했기 때문이다. 최근의 상황은 이런 최소한의 재생산조차도 용인하지 않는다. 이것은 최근 학회와 학술 동아리의 침체 및 정치성 탈락에서 명백히 보여진다. 연세대 내의 대표적인 학술 동아리들은 올해 신입 회원이 눈에 띄게 줄어, 일부 동아리의 경우엔 그 존립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을 정도이다. 과나 반과 결합되어 있는 학회는 신입 회원의 수보다는 그 정치성의 약화나 탈락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학생 운동의 존립 기반마저 위협하는 이런 현상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기인한다.

먼저 학회-학생회 구조를 통한 주체 재생산 과정은 '고립심화 메카니즘'이 남겨 준 마지막 보루였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즉 학생회주의의 지속적인 확장 속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을 수 있던 주체 재생산 방식은 학회원들을 미래의 학생회 집행부로 이미 상징하고 있는 학회-학생회 구조였던 것이다. 그렇기에 학생회 패러다임 자체가 지속적인 고립심화로 인해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학회-학생회 구조 역시 그 유효성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나름의 필연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학회-학생회 구조는 그 자체로 비판되어야 할 것이라기 보다는 이 구조가 학생회 패러다임의 입김 아래 존재했기에, 그리고 계속 그러한 위치만을 유지하려할 때 폐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는 것이 타당할 듯 싶다.

다음으로 IMF 구제 금융 이후, 작년(97년)까지 졸업생들에게 국한되었던 위기감이 1, 2학년들에게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 위기감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관심과 저항 의식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살아 남기 위해서'·'20/80 사회에서 20이 되기 위해서'는 실력을 길러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의식으로 귀결되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는데, 왜냐하면 얼마전 총학의 민주화쟁 앞 자보전을 통한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대다수의 학생들이 현재 실업의 원인을 더 이상 개인의 무능력에서 찾기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인 대응은 언제나 개인의 능력을 보다 더 갖고 담는데 두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에 대한 판단과 너무나 상치되는 대응이 이토록 만연한 것은 분명 현재의 상황에 대해 그 누구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현실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학생들이 이 '대안'에 대한 고민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팔호쳐 두고 있다는 데 있을 것이다. 학생운동의 위기는

바로 이 지점에 위치되어 있다. 결국 1, 2학년들은 현재 진행중인 신자유주의 논리를 몸으로 체득하면서도 주변의 모습을 보지 못하거나, 침묵하는 모습으로 밖에 남아 있지 못하게 된다.

세 번째, 지금의 대학 성원들¹⁰⁾은 다른 어떤 세대들보다도 93년-95년의 호황 속에서 소비 문화에 노출되었던 이들이다. 그 이전 세대들이 청소년기의 일부분을 87년 이후 사회 전체의 민주화 과정을 전교조 운동 등을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이들 세대는 소비 문화의 세례를 받았다. 물론 이들의 새로운 의식이 언제나 기존 소비 문화의 일방적인 주입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 절하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비 문화에 노출되었다는 표현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이런 기반 위에서 이들이 대학 사회에서 진보적 담론에 대한 친화력보다는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들은 이런 진보적 담론에 대항해 자신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자기 언어화 한) 소비 문화의 다양한 담론들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그들이 스스로를 정당화 시키는데 사용했던 담론에 대해 우리가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는—현재의 IMF시대를 맞이하여 여실히 드러내주듯이—그들의 언어가 외부의 물질적인 조건의 변화로부터 방어되기에는 너무나 취약한 토대를 가지고 있었기에 새로운 진보적 행동으로 구체화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최소한의 주체 형성 메카니즘마저 붕괴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이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게 요구한다. 더 이상 남은 메카니즘에 안주해 있기엔 현실은 너무나 냉혹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다른' 주체의 재구성을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선언」이 가르치 준 것

2.1. “프롤레타리아트는 우선 국민적 계급으로 올라서야 한다”

학생 사회에서 주체의 재구성에 대한 고민은 곧 「선언」의 중요한 문제 의식과 연결될 수 있다. 「선언」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강조점들이 제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이것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으로서의 형성”¹¹⁾이라는 또 다른 상황 여하에 달려 있다.¹²⁾

위대한 해방자로서의 노동자 계급에 대한 각각과 회의의 목소리는 「선언」 이후 150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것은 몇가지 중요한 이유에서 기인한다. 먼저 후기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자를 착취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소비에 대한 욕구를 강요한다. 소비 능력을 획득함으로써 노동자들은 창조적인 구상과 목표의 실행을 위한 능력을—특히 정규 노동 이외의 시간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가에 대한 통제권을—양도한다. 이것은 결국 대안적인 사회를 건설할 기본적인 능력을 침식하며, 급기야는 자본주의에 저항할 공동체의 발전에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난다.¹³⁾ 여기에

10) 90년대에 중학교에 막 입학한 95-98학번이 해당된다.

11)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최인호 옮김, 『공산주의당 선언』,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1』, 박종철 출판사, 1991, p.413. 이하 인용문은 괄호안에 쪽수만 명기.

12) 폴런 레이즈·레오 파니치, 카피레프트 옮김, 『『공산주의당 선언』의 정치적 유산』, 『선언 150년 이후』, 이후, 1998, p.64.

13) 구조 조정에 의해 노동자들이 제배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노동자 공동체의 와해를 생각

덧붙여 급진적인 신사회 운동의 등장과 상대적으로 정치성이 약화된 서구 공산당과 노동 조합의 모습은 노동자 계급 정치와 사회 운동과의 분리를 명백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 이것은 곧 노동자 계급 대신 다른 운동의 주체들을 그 해방의 담지자로 상징하게끔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런 경향은 특히 지식인에게 강하게 나타난다.

노동자 계급에 대한 많은 회의에도 불구하고 또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사회 해방이란 기획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운동으로부터 이탈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진보 운동의 추진력이 노동 운동에 있는 남한의 경우 그것은 더욱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세계 노동 운동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 '사회운동적 노동 조합주의(Social Movement Unionism)'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유의미할 것이다.¹⁴⁾

(사회)운동(적) 노동 조합주의란, 노조원들이 노동 조합을 통해 자신들의 협약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의 지역 사회와 국가 안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에 관한 투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동 조합을 하나의 매개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운동(적) 노동 조합주의에는 요구 사항들의 형태, 노조 활동의 범위, 개혁의 쟁점들에 대한 제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때때로 고통받을 수는 있지만 소멸될 수는 없는 더 큰 운동에 대해 헌신한다는 바로 그 의식(sense) 등이 포함된다.¹⁵⁾

자본의 변화에 대해 적응하는 것을 반대하며 전투적 노동 조합 운동의 전통과 사회주의 운동과의 연계의 복원을 통해 노동 조합이 지역 사회와 국가 내 모든 사회 운동의 매개가 될 것을 주장하는 이것의 가장 큰 함의는 “프롤레타리아트는…국민적 계급으로 올라서야”(418)한다는 「선언」에 대한 노동 운동의 실천적이고 공세적인 고민이라는 점이다. 당연히 이런 '사회운동적 노동 조합주의'에는 이제까지 신사회운동들의 특성인 것으로 주장되어온 것들, 즉 아래로부터의 적극적 참여, 직접민주주의적 조직체계, 환경 및 여성, 인종문제 등에 대한 관심, 기존 정치체계에 종속되지 않는 능동적 정치성 등이 포함된다. 최근 신자유주의 공세에 수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면서도 진보 운동 내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남한의 노동 운동 역시 이와 같은 주장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2.2. '운동의 위기' 곧 '주체 형성 과정'의 위기

노동 운동의 '사회운동적 노동 조합주의'에 대한 고민은 곧 학생 운동에 있어 주체의 재구성에 대한 고민거리를 던져준다. 공세적인 운동의 재구성을 통해 운동 주체의 재구성을 꾀하는 '사회운동적 노동 조합주의'의 문제 의식은 '운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학생 운동에 있어서 시사하는

해보라. 이상의 논의는 다음을 참조. 샘 긴던, 「냉정한 의식'을 지닌 사회주의」, 『선언 150년 이후』, pp.187 - 191.

14)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에 대한 소개는 다음 글을 참고하라. 김 무디, 『국제적인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를 향하여』, 『읽을거리』(2호), 카피레프트, 1998.

15) 샘 긴던, 같은 글, pp.206.

바가 크다. 더욱이 '사회운동적 노동 조합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 운동에도 적용될 수 있는—적용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하지만, 『선언』에 명시된 "프롤레타리아는 국민 계급으로 올라서야 한다"란 주장을 학생 운동에 적용하는 데는 세심한 주의를 요구한다. '사회운동적 노동 조합주의'에서 환경 및 여성, 인종 문제에 대한 노동 운동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더 이상 학생 운동에 있어 복합성이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즉, 학생 사회에서 어떤 단일한 주제를 상징하는 것은 이미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혔다. 여기에서 기존의 학생 운동의 주제 형성 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해보자.

2.2.1. 환상적 주제 호명

먼저 기존의 운동 방식에서 보여왔던 주제에 대한 접근은 '환상적 주제 호명'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기존의 학생 운동이 주제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대학이라는 관문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일단 동일한 주제—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진보적 지식인으로, 적극적으로는 민주적 전위투사—로 상징하는 것이다¹⁶⁾. 물론 이들 신입생들 중 소수는 학회나 학술 동아리에서 지식인이나 대학생의 존재 기반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의식화되기도 한다¹⁷⁾. 하지만 그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조차 학생사회 내에 다양한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대학 사회의 성원들을 단순히 '진보적이다'라고 딱지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종종 간과한다는 것이다. 활동가들에 의해 대중들은 끊임없이 단일한 진보적 주제로 상징된다.

이렇게 단일하게 규정되는 '진보적 대학생'이라는 호명은 활동가들의 환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이러한 환상은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든든한 방어막이 된다. 하나는 학생사회 내에 존재하는 여러 모순들의 교차점에 대해 간과할 수 있는 면죄부로서, 다른 하나는 자기 활동의 근거를 보장해주는 '환상 속의 주제들'로써, 이런 이중의 방어막은 현재 정세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불가능하게 하며, 운동의 공간을 협소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주제의 형성의 가능성을 그만큼 차단시키고 있다.

이는 학생 운동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논의 속에서도 똑같이 반복된다. 특히 학생 운동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이들은 현재 '학생 운동의 위기'를 활동가들의 역량이나 헌신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이것의 해결책으로 학생 운동의 역사성을 언급하는 이들은, 학생 운동이 80년대에 그랬듯이 남한 사회 진보 운동에서 선도적인 문제 제기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해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도적인 문제 제기 집단으로서 역할을 했었던 학생 운동의 역사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논의들이 지금의 상황을 이전의 경험들에 그대로 끼어 맞추려는 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도적인 문제 제기를 했던 학생운동을 강조함으로써 대학생이라는 신분 자체를 '전위적이고 선도적인 집단'이라고 규정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가진다는 점이다.

16) 이에 대한 비판 자체가 이제는 너무나 진부한 것이 되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제 호명은 '한총련 맥만학도'라는 이름으로, '2만 연세'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17) 하지만 위에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학회나 학술 동아리를 통한 주제의 재구성 또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2.2. 장기적 주제 형성의 실패

앞에서 언급한 학생회 패러다임과 위의 환상적 주제호명은 긴밀하게 연관을 맺으며 학생 운동에 임했던 이들의 장기적 주제 형성을 가로막는다. 학생 운동은 폭력적인 국가 기구에 대해 학생회라는 '새로운 성체'를 통해 저항하였다. 이 속에서 학생 운동의 주제들은 "모순에 대한 실천적 대안으로서 자신들 스스로를 자격 부여하기보다는...학생회라는 또 다른 실체에 자신들을 동일화 시킴으로써만 이를 수행할 수 있었다."¹⁸⁾ 그들은 이렇게 4년간의 학생 운동을 마친 후, 자신의 삶에 기반한 스스로의 운동을 만들어 나가기 보다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대외적 민주주의에 기반한 국가에 '너무나' 쉽게 몸을 맡겨버렸다. 학생회 패러다임 속에서 환상적 주제호명 된 이들은 그 패러다임 밖에서는 너무나 무기력했던 것이다.

2.3. 대안적 운동: 대안적 주제 형성?

그렇다면 90년대 이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여성·환경운동 등 주제별 운동이나 '자발적인 모임들' 등 대안적 운동들은 대안적 주제 형성에 성공하고 있을까? 이런 새로운 운동은 그 흐름 안에서 주제의 재구성에 대해서 이렇다 할 문제의식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기존의 운동 방식의 구조들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새로운 운동이 독자적인 주제 생산의 방식을 갖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한계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맹이 없이 공허한 '자치'라는 말을 되풀이함으로써 주제의 형성 문제를 회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 '스스로에 의한 정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운동의 주제 형성 역시 개인 각자의 문제로만 남게 된다. 각자의 관심에 따라 여성·환경 운동 등에 참여하고 벌여 놓은 판에 자발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은 결코 대안적 주제 형성으로 이어질 수 없다.

기존의 운동이 주제에 대한 과도한 호명으로 자족적인 결과를 낳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새로운 운동의 흐름은 주제 형성에 대한 문제 의식의 부재로 인해 결국은 자족적인 운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운동의 주제를 스스로 정치화된 사람들로 처음부터 범위를 좁게 한정시키고 있는 그들은 결국 폐쇄될 뿐이다.

3. 복합적인 주제 형성 과정¹⁹⁾

앞에서 우리는 대학생에 대한 '진보적이다'라는 딱지를 때 버릴 것을 주장하였다. 기존의 학생

18)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특히 다음을 참조. 장석준, 같은 글, pp.56-57.

19) 애초에 기획된 글은 새로운 주제 형성 과정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 전제된 것이었다. 특히 우리는 '사회운동적 노동적 조합주의'의 구체적 내용들이 이런 새로운 주제 형성 과정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필자들의 능력 부족과 준비 시간의 부족으로 이런 자세한 언급은 부득이하게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한다. 단, 토론 과정에서 대안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표출되기 기대해 본다.

운동 활동가들은 자신의 동료들이 사회의 어떤 세대보다 더 보수적일 수 있다는 전체 하에서부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사상 초유의 청년 실업 사태는 대학생들의 진보적인 의식을 자극하기보다 그들에게 파시즘적인 힘의 논리를 강제할 수도 있다. 냉철한 의식 하에서 새로운 주체 형성 과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주체 형성 과정이 될 것인가? 예비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단순한 규정이 대학 사회 성원들에게 적용될 수 없음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복합적인 주체 형성 과정이 필요하다. 자기 부정을 통해 스스로를 해방 시키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주체들의 형성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현실의 모순 속에서 새롭게 재구성되며, 끊임없이 다른 이들과 상호 소통하는 이들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런 새로운 주체들이 단지 필자들의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학내의 새로운 운동의 흐름들 속에서 이런 주체들의 모습이 예견되며, 그들에 의해 그런 과정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단 여기엔 당연한 전제가 있다.

바로 기존의 학생 운동 활동가들의 역할이다. 더 이상 단일한 주체로서 규정될 수 없는 대학 사회 성원들에게 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기존의 활동가들은 대중을 가르치거나 대열에 포함시키기 위해 애를 썼다. 하지만, 지금의 활동은 달라야 한다. 활동가들은 대중을 대상화시키기보다는 그들이 그들의 목소리로 발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신의 역할을 '그들이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에서 한계지어야 한다.²⁰⁾

4. 끝내며.

다소 이질적인 말을 원용해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선명함을 내세운 속에서 우리의 위기를 동시에 보여주려고 하였다. 즉 입장 속에서 입장의 해체를 적극적으로 감행하려고 하는 입장들이었다. 그러니 그 입장은 우선 학생 운동의 남은 전통을 와해시키는 데서 출발하며 그 다음엔 새롭게 세워지는 그 입장을 스스로 해체해 나가는 그런 입장이다. 물론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실천에 매여 있다. 다시 한번 상기하자.

'우리는 냉정한 의식으로 꿈을 꺾어야 한다'.

20) 이런 서술에는 푸코나 들뢰즈의 '전문적 지식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 ■

맑스주의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을 주장한다!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 고학번 모임

레닌은, 그의 혁명 동료인 클라라 제트킨이 여성당원들에게 성 문제를 토론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녀를 통렬히 비판하였다. 혁명 의식을 고양시켜야 할 중요한 시간에 사소한 문제를 논의하고 여자들을 방종한 경향에 영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일화는 계급사회에서 사는 것이 여성억압의 유일한 원인이 아님을 잘 보여준다. 이를테면 지금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부장제 사회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맑스주의 분석 범주들은 왜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가정'과 연관되어야 하는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가로지르는 남성에게 예측이 왜 일어나고 어떻게 유지되는지, 또한 무엇 때문에 그 반대의 경우가 일어나지 않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러한 무능력, 맑스주의 이론에 사실상 "성별 억압"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맑스주의의 범주에서 이해되고 분석되어진 부분은 주로 생산의 개념이었으며, 사회적 생산관계에 따른 계급분석에의 치중은 자본주의 분석에 있어 성별에 따른 노동의 분업, 가족관계 속에서의 권력의 서열화 현상 등을 설명할 수 없게 했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맑스주의가 보여주는 '인간 해방'은 사실상 '남성 해방'일 수 있으며,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비판하는 자본과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비록 그것이 부르주아지들의 담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이리스 영이 현 사회의 특수한 체계인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일컬어 "삼국의 쟁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적절하다 하겠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라는 분석틀로는 결코 포착될 수 없는 문제들이 실재하고 있는 이상, 여성 억압의 역사적 체계로서의 "가부장제" -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라는 역사적 체계보다는 훨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 는 그 자체 독립적인 억압 체계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맑스주의가 페미니즘을 만나야 하는 이유이다.

페미니즘은, 다층적인 제도를 통해 여성을 억압하는 남성의 권위주의적 체계 전반(가부장제)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이며, 동시에 그것의 구조적 변혁과 여성의 해방을 주장하는 실천적 운동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성 억압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제를 자본주의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영역"으로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는 각자 나름의 역사와 나름의 메커니즘(동학)을 보유한 별개의 억압체제인 것이다. 물론 현실의 수준/구체의 수준에서 가부장제의 영역과 자본주의의 영역은 결코 나뉘어질 수 없다. 그러나 이론의 수준/추상의 수준에서 이 둘은 각기 별개의 체계로서 다루어져야만 한다. 맑스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분석하기 위해서 "상품"이라는 추상으로부터 출발해야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 억압을 구조적인 것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우회로를 거칠 때에만 제대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야 두 개의 억압 체계는 현 사회에서 서로에게 복잡하게 연관된 현상으로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여성의 문제를 혁명의 한 편에 끼워 달라는 부탁이 결코 아니다 - 만약 그런 식의 "탄원"으로 억압이 사라질 수 있다면, 공산적 사회주의자들의 낙원은 지금쯤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좌파는, 그 동안 여성억압의 문제를 하위 개념으로, 부차적이고 주변적인 주제로, 혹은 기껏해야 "자본주의의 아주 정교한 하부 메커니즘"으로 다루어 왔던 관성에서 벗어나(이것은 비단 여성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심오하게 성별화된 맑스주의 이론을 재구성해내야만 한다.

이 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성별 억압에 대한 맑스주의 이론의 한 점이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과 "결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백은 광란의 세계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노동운동에 심각한 폐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부족'이 아니라, 인간해방을 표방하는 맑스주의 정치 자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결여'로써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렇다면 맑스주의 이론의 이와 같은 커다란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다방면에서의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우선 생산과 재생산 개념,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들을 비판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여성주의적인 관점을 통한 맑스주의의 재구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적어도 맑시즘에 기반한 운동이 전 인류의 해방을 목표로 한다면, 자본주의 사회가 붕괴되고 계급모순이 사라지면 그밖의 다른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식의 순진하고도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맑시즘 자신의 이론적 빈자리를 고찰, 비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맑스주의의 공백들

(1) 맑스주의 이론에 "여성"은 존재하는가?

맑스주의는 분명 인간해방을 위해 주요한 이론이다. 그러나 '여성'의 입장에 방점을 찍고 『공산당 선언』을 읽으면, 우리는 중요한 의문에 부딪히게 된다. "여기서의 인간이란 누구인가?" 해방될 '인간'이라는 범주에 '여성'도 포함되는가? 맑스주의 자체가 기본적으로 남성적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30세의 맑스가 노동자들의 국제주의를 위해 서술한 『공산당 선언』에서조차, 역사적 주체로서의 여성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마치 여성은 남성들의 혁명에 의하여 해방되어지는 존재처럼 그려져 있을 뿐이다. 생산노동 영역에서의 자본에 의한 노동의 착취가, 여성 억압이라는 사회적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대단히 회의적이다.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이 각기 여성과 남성의 자리로 공고화되면서 여성에게 어떠한 이중

의 억압이 가해지고 있는 지는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여성은 노동자의 위치에서 자본의 착취를 당하는 동시에 가정에서 남성 가부장의 착취를 동시에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스주의의 논의에서는 여성을 '노동자'라는 탈성화된(desexualized) 범주로 뭉뚱그림으로써, 노동해방이 달성되면 여성해방도 달성된다는 순진한 낙관을 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논의에서는 아예 '여성'이라는 범주 자체를 삭제하고 있다. 맑스주의 패러다임 자체의 근본적 재구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서는 몇 가지 주요한 공백들을 열거해 보기로 하겠다.

(2) 모계제의 타도

맑스주의 안에서 '가족'에 대한 분석은 주로 엥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저작에서 엥겔스는, '물질상황의 변화가 어떻게 가족관계의 구조를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시도한다. 그에 따르면 모계제에서 부계제로의 전환은 잉여가치의 발생에 의해서 가능해진 사유재산의 소유, 상속의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 이어서 엥겔스는, 원시사회에서는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채집과 의복, 식기류 등의 생산을 여성이 담당하였고 종족의 재생산 또한 여성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기 사회가 모계제 사회였을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여기서의 모계제 사회는 여성이 경제적 뿐 아니라 정치력과 사회권력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모가장제 사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냥을 담당했던 남성들에 의해 동물의 가축화와 사육이 가능하게 되고 이로 인한 '잉여'가 발생하면서 남성의 생산성이 중요성을 더해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생산의 중심지가 여성으로부터 남성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여성의 일과 생산의 가치가 약화됨에 따라 그들의 지위 또한 자연스럽게 약화되었다. 반면 남성들은 가치있는 사회경제적 상품을 필요 이상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상속'이라는 문제가 최초로 주요한 사안으로서 부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유물로서의 여성", "상속의 대상으로서의 아이들"을 차지하기 원하게 된 남성들은 사회의 가부장제적 재편을 위해 엄청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엥겔스의 표현대로, 모권(母權)은 타도되어야 했고, 결국 타도되었다.

"이리하여 재부가 증대함에 따라 그 재부는, 한편으로는 아내보다도 남편이 더 유력한 지위를 가족 내에서 차지하게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강화된 지위를 이용하여 전통적인 상속제도를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 폐지하려는 경향을 낳게 하였다. 그러나 모권에 의해서만 혈통을 따졌던 시기동안은 그것이 실현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 모권은 폐지되어야 했으며 또 폐지되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결코 아니었다. 실로 이 혁명- 이것은 인류가 체험한 가장 근본적인 혁명 중의 하나이다- 은 살아있는 씨족성원 중의 단 한 사람도 건드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씨족성원들은 모두 이전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남자 성원의 자손이 씨족에 남아 있어야 하고, 여자 성원의 자손은 이 씨족에서 제외되어 자기 아버지편 씨족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간단한 결정만으로 충분하였다. 이것으로써 여계에 의한 혈통의 결정과 모권적 상속은 폐지되고, 남계에 의한 혈통의 결정과 부권적 상속이 도입되었다." (F.Engels,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아침)

그러나 이러한 엥겔스의 논의에는 몇 가지 허점이 있다. 첫째, 엥겔스는 현대사회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엄격한 노동의 성역할 구분 개념들을, 마치 초역사적인 양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다. 사냥과 채집이라는 이분법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의 유연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고정된 성역할이 자연적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가족 내에서 생산한 것을 (자식까지 포함하여) 여성이 소유하고 밖에서 생산한 것을 남성이 소유한다는 영역의 구분에 따른 여성 역할의 축소 및 소유물에 대한 급격한 가치 절하는, 단지 남성의 사유재산이 증가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엥겔스에게서는 '생산성의 증가'라는 설명 이외에는 여성의 권력이 남성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3) 맑스주의의 가족관 : 보수주의와의 결탁

『공산당 선언』에서 맑스는, 가족을 오직 경제적인 관계로만 파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특정한 '기능'을 위하여 현재와 같은 핵가족적/일부일처제적 가족 모델이 일반화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특히 자본과 사적이익의 토대 위에 서 있는 부르주아 가족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자본주의적 하부 기제로서의 가족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혁명을 통한 사회 전체의 근본적인 변혁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역사적 체계는 생산양식의 발달에 따라 변모해 온 일종의 "중속 변수"였기 때문이다.

"일부일처제는 결코 개인적 성애의 소산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혼인은 종전 그대로 어디까지나 타산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부일처제는 자연적인 조건이 아니라 경제적 조건에 기초한, 즉 원시적 자연발생적 공동소유에 대한 사적소유의 승리를 기초로 한 최초의 가족형태였다. 가족 내에서의 남편의 지배와 자기의 재산을 상속해야 할 확실한 자기의 자식을 보자는 것..." (F.Engels, 위의 책)

"부르주아지는 가족으로부터 그 감정의 장막을 벗어내고 가족관계를 단순한 돈의 관계로 만들었다." (K.Marx, 『공산당 선언』, 『맑스 엥겔스 저작선집, 거름』)

"지금의 가족, 부르주아적 가족이 서 있는 토대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본이며 사적 이익이다. 따라서 이 가족이 완전히 발전한 형태는 단지 부르주아에게만 존재할 뿐이다.... 그렇지만 너희 공산주의자들은 여성공유제를 도입하려는 게 아니냐고 전체 부르주아지는 소리 맞춰 막을 쓴다. 부르주아는 자식, 아내를 단지 생산도구로만 본다. 그는 생산도구는 공동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들었으므로 당연히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운명이 여성에게도 닥치리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공산주의자들이 이른바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건설하려 한다는 여성공유제에 대해 우리의 부르주아가 실제로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정말 가관이 아닐 수 없다. 공산주의자는 결코 여성공유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거의 기억할 수 없을 정도의 먼 옛날부터 존재해 온 것이므로.... 부르주아의 결혼은 사실상 부인공유제다. 그러므로 설령 공산주의자가 비난받는다 하더라도 그 비난은 위선적으로 은폐된 여성공유

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합법화된 여성공유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것이어야 한다. (K.Marx, 위의 책)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하다. 첫째, 여성을 단지 생산도구로만 보는 것은 부르주아만의 문제인가? 부르주아지의 가족과 프롤레타리아의 가족은 그들의 계급이 다르다는 점에서만 다를 뿐 구체적 양태는 거의 같은 모습이다. 오히려 노동영역에서 피억압자로 존재하는 남성 프롤레타리아는 가정의 영역에서 다시금 억압적인 가부장적 위치를 고수한다. 현실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이러한 억압에서 노동자계급을 '면제'해 주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맑스주의는 가족의 문제를 계급의 문제로 환원시킴으로써, 가족 내에서의 여성 억압에 대해 슬쩍 눈을 감아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맑스주의의 한계는 결혼관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맑스주의는 결혼이 계급적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물로 바라보는 부르주아에게 여성은 소유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결혼은 당사자의 계급적 위치에 의해 규정되며, 따라서 언제나 타산적인 것이다. 이 타산적인 결혼은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극심한 매음-때로는 쌍방의, 그러나 훨씬 더 흔히는 아내의 매음-으로 변하는 일이 상당히 많다. 이 아내가 보통의 매춘부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여성 임금노동자가 자기의 노동을 도급제로 팔듯이 자기의 육체를 도급제로 파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를 영영 노예로 팔아버린다는 것뿐이다." (F.Engels, 위의 책)

"경제적 생활조건이 발전하여 원시 공산주의가 분해되고 인구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예전부터의 전통적인 양성관계가 소박한 원시적인 성격을 잃게 될수록, 그러한 양성관계는 여자에게 더욱 굴욕적이고 억압적인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여자의 정조에 대한 권리, 즉 오직 한 남자와의 일시적 또는 지속적 혼인에 대한 권리를 구원의 길로 여기고, 이것을 획득하려고 더욱 더 꾸준히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남자는 결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사실상 군혼의 폐락을 버리려고는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가 이러한 진보를 가져올 수 없었다. 여자에 의해서 대우혼으로의 이행이 실현된 후에야 비로소 남자들은 엄격한 일부일처제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것이 여자 측에만 한정된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F.Engels, 위의 책)

가족의 발전에 대한 엥겔스의 논의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로 전락하는 것은 부르주아지가 등장하기 훨씬 전의 일이다. 문제는 이러한 "전환", 즉 군혼의 시기에서 푸날루아 가족, 대우혼 가족, 일부일처제 가족으로 전환이, 엥겔스나 맑스에게는 아무런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진다. 여성의 생산에 대한 찬미가 왜 갑자기 사라지고 약탈과 정취의 대상이 되었는지 맑스주의는 설명할 수 있는가? 엥겔스는 왜 순결과 정조를 지키는 것을 '권리'로 여겼는가? 왜 여성의 자유로운 성교는 여성에게 짐스러운 것이 됐는가? 가족이나 결혼에서의 불평등한 관계가 자연스러운 것이거나 생물학적 차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로 구성되어 온 것임을 영겔스도 인정하고 있지만, 어떠한 과정을 거쳐 그러한 불평등이 형성되어 왔는지, 왜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억압의 대상이 되었는지는 설명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2. 여성은 '노동자'가 아니다? : 현실에서의 무능력

그런데 맑스주의는 현실의 노동운동과 언제나 겹쳐지고, 함께 간다. 그렇기 때문에 현 노동운동은 앞에서 살핀 맑스주의 내부의 공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그 공백들은 다시 여성 노동권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노동 운동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자본과 노동이라는 하나의 대립쌍을 전선으로하여 배치되어 왔었기 때문에, 각각의 계급 안에서 이중착취를 당하고 있는 여성의 문제는 간과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말 노동운동의 발전은 자본의 발전을 뒤쫓아갈 뿐인가. 자본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적차이를 이용하여 각각을 다른 방법으로 교묘히 착취하고 있는 반면²¹⁾, 지금까지의 노동운동은 - 비록 그것이 여성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제3세계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분화된 집단들을 분명히 고려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 항상적으로 "노동자"라는 단일 범주로의 수렴 경향을 내재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여성노동권의 주장을 '결속을 방해하는 요소'로만 이해해 왔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론'이다. 그러나 노동자라는 범주 안에서 여성과 남성이 착취당하는 양상이 다르고, 나아가 사회 구조 안에서 여성이 (노동자가 아니라) 남성의 "피부양자"로 인식됨에 따라 생존권과 결부된 노동권마저 위협당하는 현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이 기존의 노동 운동에 완전히 포괄될 수 있으리라 믿는 것은 허구에 불과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기존 노동운동에 내재한 허점으로 인해 여성노동권이 어떻게 위협받아왔는지를 밝힘으로써, 맑스주의의 이론적 공백이 '여성들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무능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위협받는 여성 노동권

이제껏 여성은 안정된 노동권을 보장받아 온 적이 없다. 여성은 경제 호황기에 따라 필요할 때 데려다 쓰고 필요없을 때는 가차없이 가정으로 내모는 영원한 산업예비군일 뿐이었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많은 노동 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좀 더 저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적극 권장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 불황기에 접어들게 되면 어떠한가? 흔히 IMF 시대라고 불리는 지금의 우리 사회를 보면 불안정한 여성 노동권의 위치를 알 수 있다.

1) 가정으로 내몰리는 여성

IMF구제금융 이후 정리해고 등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행해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여성이 일차적 희생양으로 지목되었다. 경제 성장기에 잠잠했던 남성 가장 이데올로기가 갑

21) L.Wallerstein이 지적하듯이, 세계 자본주의가 한편으로는 전 세계를 단일 시장으로 재편하면서, 일국적 차원 내에서는 또다른 "차별"의 기제들을 사용하여 노동자 계급을 분할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차별주의이다.

자기 고개를 쳐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가족의 생계책임자는 남성이고 여성은 피부양자일 뿐이라는 가부장제의 논리는 케케묵은 것이지만 여전히 강력하다. '가정'은 다시 여성의 고유영역으로 재확인되었으며, 사회 전체가 답답하여 '남성 가장의 일자리도 부족한 마당에 어디 여성이 일자리를 나눠먹으려 하느냐'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성을 끊임없이 노동시장에서 밀어내며 여성의 노동권을 박탈하고 있는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 현재의 노동운동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본과 '담합'까지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침묵을 통해 승인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가부장제의 경제 논리를 그대로 답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가족임금제이다. 가족임금제는 한 가족의 생계책임자는 남성이며 이러한 남성가장의 임금이 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잠깐, 이것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다. 맑스가 '노동자의 임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왔던 이야기이다. 그는 여기서 "피부양자로서의 여성"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임금에 대한 최저의 그리고 유일하게 불가피한 시정역은 노동하는 동안의 노동자의 생계비이며, 노동자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노동자 종족이 멸종하지 않을 만큼의 액수이다." (K.Marx, '1844 경제학 철학 초고', 『맑스 영겔스 저작선집 6권』, 박종철 출판사)

이러한 가족임금제는 실제 노동시장에서 여성 정리해고 1순위라는 양태로 나타난다. '생계부담이 적은 여자부터 잘려주는 것이 순리다'라는 논리하에 여성 우선해고가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남성의 영역은 노동시장이고 여성의 영역은 가정이라는 불합리한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부르주아적 자유민주주의의 논리에도 못미치는 봉건적인 '불평등' 이데올로기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회적 사실들에조차 배치되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실제로 1996년 현재 여성 가장의 수가 16.8%를 육박하고 있으며 여성의 노동 또한 '자아 실현' 등의 수사적 문구를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어느 누구도 해고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금과 같은 고용불안정 상황에서 남성 가장만을 믿고 따르라는 이야기는 가족 전체의 생존권을 더욱 위협할 뿐이다.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밥그릇을 지킨 남성 노동자들에게 미래가 있겠는가?

이러한 남성 가장 이데올로기는 정부의 실업정책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3월 초 노동부장관은 '실업률이 5%를 넘으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데 이를 위해 실업자수를 100만명 이하로 줄이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실업률 감소 정책이란 어떤 것인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성을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가능하지 않도록 여성을 가정의 영역에 묶어놓아 아예 실업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실질적으로 태하고 있는 정책은 탁아정책등의 복지 정책을 최소화하고 국가에서 수행하던 기능의 상당 부분을 가족의 기능으로 전환함으로써 여성들이 가정에서 맡아야 하는 몫을 더욱 늘이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써 가시화되지 않는 여성의 실업률은 더욱 높아져만 가고 있다. 정부는 여성을 희생양으로 하여 가시적인 남성 가장의 실업률 최소화를 대에만 주력하고 있으며, 남성 노동자들은 이를 묵인한다. 실제로 1997년에 남성 실업률은 20.8% 증가한 반면, 여성 실업률은 60% 증가하여 여성 실업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데도 불구하고

고 사회는 실직한 여성으로 하여금 가정으로 돌아가라고만 강요하고 있다. 임금도 없고 휴가도 없는 평생 노동으로 말이다.

2) 여성은 노동자인가?

이러한 여성 노동권의 위기에 직면하여 우리가 기존의 노동운동에 기대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원인은 여성 노동 현실의 특수성에 있다. 여성노동자의 62.7%에 이르는 수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4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들의 연합체인 민주노총에서도 이들의 문제를 다루기가 어려운 것이다. 또한 파견근로제의 시행으로 인해 여성 노동자의 불안정은 더욱 가중된다. 고용자와 사용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임금 및 노동조건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중의 착취를 당하게 되는 파견근로제의 대상이 대부분 현재 여성이 맡고 있는 노동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가부장제와 같은 손을 움켜쥐고 놓지 않는 한,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는 더욱 강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렇듯 전체 노동시장에서 실제로 여성의 노동이 행해지는 영역은 노조가 담보해낼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동안 기존의 노동운동 내에서 여성노동의 문제가 간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원인은 “자본 vs. 노동”이라는 도식적이고 단순화된 이분법에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본과 정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착취를 행할 뿐만 아니라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를 교묘히 이용하여 끊임없이 여성을 노동자의 범주에서 밀어내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노동운동은 노동자 계급을 자본에 대항하는 단일한 범주로 설정함으로써 그 안에서의 여성 노동 현실의 특수성이나 가려져 있는 여성의 노동권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들로부터 “독자적인 여성 노동 운동 세력”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기존의 노동운동 세력이 여성의 노동권을 전면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본과 정부는 다양한 형태로 교묘하게 여성 노동권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부한 언어지만 지금은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할 때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남성 노동자들에게도 ‘위임’할 수 없는 권리를 말이다.

3. “성별화된” 맑스주의로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맑스주의의 철학적 전제는 역사유물론이다. 이는 맑스주의가, ‘여성’이라는 하나의 역사적 의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관념론에 반대하여, 인간의 물질적 존재 조건으로부터 사회와 역사를 설명하는 “실천 철학”임을 의미한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철학적 전제에 기반하고 있는 맑스주의가,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서의 “여성”과 “여성의 억압”에 대한 논의를 결여하고 있는 것은 다소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성에 대한 이중적 착취에 대해 맑스가 전혀 무지했다고는 할 수 없다 (이는 앞 장의 논의에서도 알 수 있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맑스가 본 “총체”로서의 사회, “총체”로서의 이론 속에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여기서, 사적 유물론의 철학적 전제에 어떤 “비약”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여성 문제에 대한 맑스주의의 공백이 바로 그 “비약”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밝히는 데서 시작하여, 맑스

주의를 “성별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의 핵심 축인 “노동”과 “생산”에 대한 논의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1) 사적유물론의 철학적 전제를 다시 보자.

“모든 인간적 실존의 첫 번째 전제, 따라서 ‘역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은 우선 살아 있어야 한다는 모든 역사의 전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음식, 주거, 의복, 기타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최초의 역사적 행위는 이들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의 생산, 즉 물질적인 생활 자체의 생산이었다. 이것은 참으로 단지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수천 년 전과 마찬가지로 시시각각 충족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전제, 이것은 처음부터 역사를 갖고 있었는데, 곧 자신들의 삶을 매일매일 재생산하는 인간은 자신들의 종족을 번식시킨다는 것, 즉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 부부 간 - 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즉 ‘가족’이다.” (K.Marx, 『독일이데올로기』, 청년사)

맞는 말이다. ‘노동을 통한 자기 삶의 생산과, 생식을 통한 새 생명의 생산’이라는 인간의 물질적 조건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문제는, ‘물질적인 생활 자체의 생산’이라는 구절이 맑스주의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생산”에 방점을 찍는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함축을 가지는가 하는 점이다.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봄으로써 우회로를 경유해 보기로 하자.

1) ‘노동’이란 무엇인가?

철학적 수준에서, 노동은 “합목적적 실천(praxis)을 통해 자연을 변화시키고, 그에 따라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는 인간의 활동”으로 정의된다. 이 정의만 놓고 보자면 ‘노동’이란 비단 연필 한 자루, 빵 한 조각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아닌, 훨씬 광범위한 인간 활동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을 동물과 구별해주는 그 무엇, (현실의 수준, 구체의 수준에 존재하는 억압과 착취를 추상해냈을 때 남는) 이념형적인 활동이 바로 ‘노동’인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노동’은, 이후 맑스가 자본주의의 동학(動學)을 통찰하는 ‘구체’의 차원으로 끌어내려짐에 따라 그 의미가 구심점으로 이동한다. “산업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하는 노동”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일체의 노동들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사용가치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하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즉 “교환가치”로 변화한다).

“노동력 또는 노동능력이라고 불리는 것은 인간의 신체 즉 살아있는 인격 속에 존재하며 그가 어떤 종류의 사용가치를 생산할 때 마다 움직이는 육체적/정신적 능력의 총체이다.” (K.Marx, 『자본1-1』, 이론과 실천)

그렇다면, 맑스 스스로가 “프롤레타리아가 아닌 노동자들”이 당연히 존재한다고 언급하면서도 여전히 결국 “산업 노동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산업노동자들”만이 노동력 상품을 팔아 잉여가치를 생산하며, 잉여가치의 생산과 전유야말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모순들이 매듭지어져 있는 핵심 고리이기 때문이다. 즉, (산업)노동자들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 한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해방은 모든 인간의 해방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혁명의 이론으로서의 맑스주의는 이제, 좁은 의미의 ‘생산적 노동’에만 전력하기로 결심한다. 구조의 변화, 즉 자본주의적 메커니즘 자체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생산이란 무엇인가?

“노동을 통한 자기 삶의 생산과 생식을 통한 새 생명의 생산, 이 둘 모두를 포함한 한 생명의 생산은 이제 하나의 것의 이중의 관계로, 즉 한편으로는 자연적 관계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관계로 나타난다. 여기서 사회적이라 함은 어떤 조건 아래,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하든지간에, 여러 개개인들의 협업이라는 의미에서이다.”
(K.Marx, 『임금노동과 자본』, 『맑스 엥겔스 저작선집』, 거름)

역사유물론의 두 번째 전제를 보면, 철학적 수준에서 맑스가 의미했던 ‘생산’은 “노동을 통한 자기 삶의 생산”과 “생식을 통한 새 생명의 생산”²²⁾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두 ‘생산’ 개념들 사이에 어떠한 위계도 없으며, 두 가지 모두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청년 맑스의 철학적 시기가 지나자 마자, “생산”이 의미했던 이러한 두 가지 의미는 하나로 축소/압축된다. 생산은 “노동을 통한 사용가치의 생산”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대신 새로운 생명의 생산은 ‘인간의 재생산/노동자의 재생산’이라는 모호한 어휘에 포함된 것으로 간간히 등장할 뿐이다. 그리고 역사의 동력을 평가된 것은 바로 이 “협업화된 의미에서의 생산”이었다.

(2) 성별화된 맑스주의를 향하여

1) 재생산 노동이란 무엇인가? = 가사노동

맑스주의가 “생산”에 무게중심을 둔 이론체계라고 할 때, 그 속에서 ‘재생산’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어떠한 위상을 지니고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맑스주의가 생산/재생산 개념 쌍을 비대칭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비대칭성이야말로, 대다수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는 활동들을 ‘재생산’에 속하는 것,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 생산 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게 된 기원이 아닐까. 물론 암묵적으로이긴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산”을 “노동을 통한 사용가치의 생산”이라는 의미로 고정시킴으로써, ‘생명의 생산’은 “재생산”이라는 개념 속으로 미끄러졌다. 그리고 맑스는 이를 “자연적인 것”으로 범주화한다.

22) K.Marx & F.Engels, 『독일이데올로기』, 청년사

“생산은 직접적으로 소비이기도 하다. 이는 주관적이면서 객관적인, 이중적인 소비이다. 자연적 출산이 생명력의 소비인 것과 마찬가지로, 생산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달시키는 개인은 그 능력을 지출하기도 하고 생산행위 속에서 그것을 소모한다.”
(K.Marx, 『정치경제학 비판 서문』, 『경제학 노트』, 이론과 실천)

자연적인 것? 맑스가 근대적 패러다임에 걸쳐져 있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분명히 “인간”에 반대되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근대적 패러다임 속에서 ‘동물과 구별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란, 동물이 속해 있는 ‘자연’의 영역과 상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범주화가 유감스럽게도 지극히 반(反)-여성주의적 전제에 기반해 있다고 본다. 이제까지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지속되어 온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은, 과학의 이름을 빌린 생물학주의를 비롯한 수많은 가설들에 의해 정당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설들이 가장 애용하는 문구가 바로 “이것이 자연스럽다”이다. 여성은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여성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럽다, 여성은 남성을 보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등등. 그렇기 때문에, 초기의 자유주의적/부르주아적 패러다임을 벗어 던진 제 2세대 페미니스트들은 한 목소리로 이러한 “자연”과 “가족” 사이의 연관성에 반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즉, 맑스주의 내에서의 ‘재생산’은 명백히 “생산”과는 구분되는 것 (따라서 더 2차적인 것)으로 위치지워져 있으며, 이 가운데 특히 “인간의 재생산” - 현재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몸’인²³⁾ - 은 암묵적으로 ‘자연’과 연관지워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생산”에는 ‘인간의 재생산’ - 즉 출산만이 포함되는가? 여기서 다시, 맑스가 『독일이데올로기』에서 언급한 사적유물론의 첫 번째 전제, ‘물질적인 생활 자체의 생산’으로 돌아가 보자. 여기서 물질적인 생활이란 우선, 말 그대로 인간이 하나의 생명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생리적 필요의 충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맑스는 음식, 주거, 의복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주의해야 할 함정이 있다. 즉, 인간의 생리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인 “음식, 주거, 의복” 등은, 한 번의 ‘생산’으로 직접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여기서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당연히 “차려진 식탁”이다)을 위해서는 ‘원료의 생산’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요리’하고 ‘저장’하고 ‘배열’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거나 의복 역시 마찬가지이다. 집안을 쓸고 닦고, 벌레를 퇴치하고, 정돈하고, 보수하는 일, 의복을 수십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빨고, 짜고, 말리고, 다림질하고, 먼지를 털어내고, 바느질을 하고, 옷걸이나 옷장에 정리하는 일, 이런 노력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직 ‘집’이 아니고 ‘의복’이 아닐 것이다. 적어도 현재와 같은 문화적 수준과 욕구를 가진 사회에서는 말이다.²⁴⁾ 그뿐인가? 성인이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

23) 여기서 “현재”라는 단서를 붙인 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에서이다. 인공위성의 활용이 일상화될 정도로 발달된 과학기술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여성은 죽음에 가까운 고통과 공포를 느끼며 출산을 해야 하는가. 자연 본만이 정상적이라거나, 아이에게는 모유가 더 좋다는 식의 주장은 한낱 이데올로기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여, 아이가 태어나서 한 사람의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노동"이 필요하다. 아이가 있는 여성들에게 직장과 가사일을 병행하라고 하는 것이 왜 부당한지 생각해 보자. 때 맞춰 우유를 먹이고, 대소변을 갈아 주고, 예방접종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에서부터 한글을 가르치고, 학교에 보내고, 숙제를 같이 하고, 학부모회에 참석하는 데 이르기까지(이 모두는 우리 모두가 "엄마의 잔소리"라고 기억하고 있는 바이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실로 자신의 생활 전체를 쏟아 부어도 모자라는 중노동인 것이다. 만약 이 과정들 중 하나라도 없었더라면, 당신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가사노동"이라고 뭉뚱그리는 이 모든 노동들은, 특정한 역사적/문화적 단계에 속한 사회에서 "인간이 생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그런데 어쩌서 이런 문제들이 맑스주의, 아니 정확히 말하여 역사적 유물론에 기반한 맑스주의적 이론 틀 내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일까? 인간은 무엇보다도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은 매일매일의 자신의 물질적 생활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위와 같은 '가사노동'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영겔스의 언급은 눈 여겨 볼 만 하다.

"...가부장적 가족의 발생과 함께, 더욱이 일부일처제 개별 가족의 발생과 함께 사회는 변화했다. 집안 살림은 그 사회적 성격을 상실하였다. 그것은 사회와는 무관하게 되었다. 그것은 '사사로운 일'로 되었다. 아내는 하녀의 우두머리가 되어 사회적 생산에서 제외되어 아무 것도 벌 수 없게 된다. 또 만일 그가 사회적 노동에 참가하여 독립적인 벌이를 하려고 하면, 그는 자기의 가정 살림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여성의 지위는 공장에 진출하건, 의사 및 변호사를 막론하고 어느 직업 분야에 진출하건 마찬가지이다. 현대의 개별 가족은 아내의 공공연한 또는 은폐된 가내 노예제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리고 현대사회는 순전한 개별 가족이라는 그런 분자로만 구성된 집단이다. ... 가정에서 남편은 부르주아지이고 아내는 프롤레타리아트이다." (F.Engels,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아침)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영겔스와 이후의 맑스주의에게서 더 이상의 진전은 발견되지 않는 것 같다. 즉, "가사노동"이 '사사로운 일'이 된 것이 하나의 역사적 결과물이었음을 지적하고, 현재와 같은 (가사노동에 있어서의) 성역할 분담을 일종의 "가내 노예제"라고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을 하나의 "필수적인 노동"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그저 논의의 초점을 다른 곳 - '좁은

- 24) "노동력의 소유자가 오늘의 노동을 끝마쳤다면 내일도 동일한 조건의 힘과 건강을 지닌 채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생활수단의 총액은 노동하는 개인을 정상적인 생활상태에 있는 노동하는 개인으로서 유지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음식물이나 의복, 난방, 주택 등과 같은 자연적인 욕망 그 자체는 한 나라의 기후 및 기타 자연적 특색에 따라 다르다. 다른 한편 이른바 필요 욕망의 범위와 그 충족 방식 자체도 하나의 역사적 산물이고 따라서 대체로 한 국가의 문화단계에 의해 정해져 있다. 특히 자유로운 노동자 계급이 어떠한 조건 아래에서, 즉 어떠한 습관이나 생활 요구를 갖고 형성되었는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력의 가치 규정은 다른 상품의 경우와는 달리 어떤 역사적, 도덕적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 : K.Marx, 『자본 1-1』, 이론과 실천

의미의 생산'만을 의미하는 '좁은 의미의 노동'으로 옮겨갈 뿐인 것이다. 가정에 갇힌 노예로서의 '여성'이라는 존재는, 역사유물론에 의해 잠시 발견되었다가 이내 무대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2) 생산/재생산을 재평가하기

결론적으로 말하여, 맑스가 "인간은 우선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역사유물론의 전제에서 "자신들의 생존수단을 생산함에 의해 인간은 자신들의 물질적인 생활을 생산해 낸다"라는 명제로 나아간 것은 분명 "비약"이었다. 『자본』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용가치의 생산"이라는 좁은 의미의 생산일 뿐이며, 여기에는 인류를 지구상에 존속케 하는 "인간의 생산"도, 갓난아이를 한 사람의 "노동자"로 만들고²⁵⁾, 한 사람의 노동자를 "내일도 노동자일 수 있게" 해주는²⁶⁾ '가사노동'도 삭제되어 있다. 가사노동은 불완전한 노동, 불완전한 생산, 불완전한 재생산으로서, 여전히 맑스주의 안에 있는 미지의 땅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맑스를 따라 '사용가치를 생산해 내는 것'만을 특권화시키고, 생산/재생산의 구분을 받아들이는다고 하자. 그렇다면 하더라도 생산이 재생산보다 중요한 것인가? 아니다. 사용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나, 사용가치를 인간의 필요에 맞게 바꾸는 일체의 지속적인 가사노동 역시 필수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적영역/공적영역 모두에 걸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착취가, 인간의 해방을 지향하는 맑스주의 이론의 '총체성' 속에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따라서 여성의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총체성, "성별화된 맑스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은 '노동'과 '생산'에 대한 협소한 개념 자체가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생산/재생산 사이의 무리한 구분과 이들 사이의 위계 (즉 '생산의 우위') 역시 철회되어야 한다. 맑스주의 이론의 근간을 이루는 세 개념들을 확장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만, 이제까지 삭제되어 있던 '여성'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들에 대한 착취를 이론화할 수 있을 것이다.

4. '모두'의 대언이어야 한다 : 노동 시간 단축 논의에 대하여

IMF 이후 엄청난 실업률을 비롯하여, 사회적 안전망 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차별적

- 25) "노동력의 소유자는 죽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화폐의 자본으로의 영속적인 전화가 전제로 하는 바로서 그가 시장에 영속적으로 출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살아 있는 개체가 생식을 통해서 영구화되듯이' 노동력의 판매자도 생식을 통해 영구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소모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장에서 쫓겨난 노동력은 적어도 동일한 수의 새로운 노동력에 의해 끊임없이 보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노동력의 생산에 필요한 생산수단의 총액은 보충 인원 (곧 노동자의 자녀들)의 생활수단을 포함하며, 그리하여 이 독특한 상품 소유자의 종족은 상품시장에서 영구화된다." K.Marx, 『자본 1-1』, 이론과 실천
- 26) "노동력의 소유자가 오늘의 노동을 끝마쳤다면 내일도 동일한 조건의 힘과 건강을 지닌 채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생활수단의 총액은 노동하는 개인을 정상적인 생활상태에 있는 노동하는 개인으로서 유지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K.Marx, 『자본 1-1』, 이론과 실천

인 정리해고로 인한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는 지금, 좌파에게 있어서 가장 설득력 있는 “현실적 대안”은 바로 “노동시간 단축”인 것 같다. 70년대 말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 서유럽 국가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대부분 35-40시간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정 노동시간을 주 40시간대로 줄임으로써 세계적 노동시간 수준에의 근접을 시도해왔으며 현재 고실업의 상황에서 추가적인 실업 방지와 이미 실업 상태에 있는 인구를 새로이 고용하는 방안의 핵심으로써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행해지고 있다. 고용창출과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노동시간의 축소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좌파 모두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²⁷⁾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은 사회구성원들간에 노동권의 평등한 분배라는 측면 뿐 아니라 생산 영역과 재생산 영역간의 관계를 재규정하고 성별 분업을 완화해나가기 위한 방안으로서도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현재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모델은 여성(전업주부)의 재생산활동(가사노동)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전반적인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려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계속해서 재생산책임을 여성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리고 그 결과 노동 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기회가 남성에게만 분배된다면, 또 다시 여성 노동자는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먼저, 현재 시간 연구자들에 의한 시간 분류는 노동 시간, 여가 시간, 필수 시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러한 시간 모델은 단순히 남성중심적인 분석틀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가사노동’과 같은 여성의 활동은, 그것이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대단히 강도 높은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분류 중 어느 곳에도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노동시간/여가시간/필수시간 중 어느 것도, 일상적 재생산 활동 등과 같은 여성의 경험이 배제된 단순히 남성적 시각에서의 시간 분류이다. 그러나 현재의 노동시간 구조에서, 재생산역할로부터 면제된 남성과 재생산책임을 홀로 전담하고 있는 여성이 동일한 조건에 놓여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노동 시간 단축 논의’와 ‘단축된 노동시간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한 여성주의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대로 라면 단축된 노동시간이 창출한 ‘새로운 일자리’는 - 그 최상의 경우라 할지라도 - 남성 노동자에게만 돌아갈 뿐, 무차별적으로 쫓겨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별다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없을 것이다. 또, 노동시간 단축이 ‘여가시간’을 늘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별 분업의 완화”나 “재생산책임의 공유”라는 “모두의 전진”으로 가기보다는, 남성 노동자들의 생산성(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충전과 재교육을 위해 쓰이도록 (자본에 의해) 강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노동운동이 튼튼하고도 분화된 방어막을 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아가 모든 장/단기적 슬로건들이 남/녀 노동자 모두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간 해방”을 향한 흐름이라 자임할 수 없을 것이다.

27) 물론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좌파의 논의가 단일한 공동의 전략으로서 공유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수세적인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슬로건이 자칫 “비정규직의 확대”나 “실질임금의 하락” 등과 같은 자본의 이해에 부합하는 결과를 낳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는 카피레프트, 『일을꺼리 3』에 실린 ‘주당 35시간 노동 - 현실적인 유토피아’를 참조.

에필로그 - 정당한 투쟁거림

아무도 ‘여성운동’의 정당성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내내 불만스러웠다. 노동자들의 해방이 인간의 해방이라는 좌파의 신념에는 무언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 과연 그럴까? 과연 노동자의 해방이 여성의 해방이기도 한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자이기 이전에 누구의 딸이거나, 누구의 아내이거나, 누구의 어머니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억압, 차별, 배제에 대해서는 별개의 이론들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위에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는 별개의 억압체계이다”라는 추상을 경유한 이유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맑스주의를 ‘성별화’하고자 하는 좌파의 시도를 본 적이 없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무지의 소산이거나 정보의 불충분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위에서 “맑스주의는 전공 필수, 페미니즘은 교양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좌파 남성동지들을 볼 때마다, 얼마간의 절망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어째서 맑스주의 이론에 정통하고 그것의 과학성을 주장하는 그들이, 유독 여성문제에 대해서만은 그토록 “공상적”인 것일까. ‘나는 강간범이나 성추행범이 아니야, 나는 집에서 가사일도 돕고 있어’라는 사고방식이, 『공상에서 과학으로의 사회주의의 발전』에서 맑스가 비판한 공상적 사회주의자들과 닮은 꼴이라는 것을 어째서 생각해내지 못하는가. 한 개인이 “착한 남성”이 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한다고? 천만의 말씀.

그러므로 이것은, 일종의 ‘막대 구부리기’이다. 맑스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맑스주의의 재구성(‘성별화된’ 맑스주의)을 주장한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물론 (당연한 말이지만), 현실에 있어서 ‘가부장제적 억압’과 ‘자본주의적 억압’이 일어나는 장소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것은 언제나 한 몸이 되어 백만 배의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둘을 성급하게 동일시함으로써 여성 문제를 “인간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맑스가 범했던 우를 백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되풀이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짧은 지식으로, 어떤 유명한 이론가의 지원 사격도 없이, 생산/재생산/노동 개념들에 대한 명량한 문제제기를 시도한 이유는, 맑스주의의 ‘공백들’이 메워지기 전까지는 ‘혁명적 노동자가 집에 가서 노동자 아내의 시중을 받고’ ‘맛담배질을 했다는 이유로 여성 노조 간부가 불신임 당하는’ 최극적인(그리고 비극적인!) 일들이 영원히 반복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이다. 맑스주의와 페미니즘을 융합시키려는 시도는 여성운동만의 것이어서는 안된다. ‘인간 해방을 향한 맑스주의’가 형용모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총체적이고도 근본적인 맑스주의의 재구성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K.Marx, 『자본 1-1』, 이론과 실천
 _____, 『경제학 노트』, 이론과 실천
 _____, 『1844 경제학 철학 초고』, 『맑스 엥겔스 저작선집 6』, 박종철 출판사
 K.Marx & F.Engels, 『공산당 선언』, 『맑스 엥겔스 저작선』, 거름
 _____, 『공상에서 과학으로의 사회주의의 발전』, 『맑스 엥겔스 저작선』, 거름
 _____, 『임금노동과 자본』, 『맑스 엥겔스 저작선』, 거름
 _____, 『독일이테올로기』, 청년사
 F.Engels,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아침
 조순경, 『IMF 관리체제 시대의 실업정책 : 문제와 제안』,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여성 실업문제 토론회
 황금희, 『경제위기와 가부장제』, 『여성학교 40』
 _____, 『IMF 관리체제 시대의 실업정책』, 『여성학교 40』
 배진경, 『위협당하는 여성의 노동권』, 『여성학교 40』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일하는 여성들이 바라는 여성노동정책 7대 과제』,
 카피레프트, 『읽을거리 3』

■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 ■

폐쇄성과 고립성을 넘어 자치와 연대의 운동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질서
 여/성/주/의 제10대 총학생회

0. 들어가며

맑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쓴지 이제 150주년. 이 저서가 아직까지도 그토록 큰 파장력을 갖는 것은 아마도 이 저서가 변혁을 위한 실천을 외쳤기 때문일 것이다. 어떠한 사회 이론이든, 하나의 텍스트가 정치적 저항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실천이 중요하다. 실천을 통해서만 그 이론은 생명력을 갖게 되고 역사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맑스의 이론에 이러한 실천의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 중 하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마도 여성운동일 것이다. 맑스의 주장을 옹호하기도 하고 또한 비판도 해왔다. 이론적 측면에서 맑스주의 내의 여성의 부재를 비판해오기도 했지만, 사실 가장 큰 비판은 총체적인 변혁을 외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억압을 재생산하는 실천적 운동에 비판을 가하는 경우가 더욱 많았다. 즉, 여성운동가들은 '총체적'인 변혁의 프로그램 속에는 반드시 '여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아주 당연한 요구를 해왔던 것이다. 여성을 '동지'라 부르면서 여성을 차별하고 대상화하는 태도를 변화시킬 줄 모르는, 모든 억압과 착취에 맞선다고 하면서 여성운동을 부수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억압적 위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러한 비판은 - 물론, 생산적인 비판이 아닌, 감정적인 비난도 많았다 - 현대 사회에 맞게, 억압받는 자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이론과 실천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바람 속에서 맑스의 이론은 다시 읽혀져야 하며, 현재 운동들 - 여성운동을 포함해서 - 을 저항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과정은 대학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대학은 이 사회의 억압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서고자 하는 운동 또한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학생회중심주의로 다양한 운동들이 배제되거나 또는 위계질서 속에 편입되어버린다.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운동을 하는 우리가, 보다 큰 사회로 뻗어 나가기 위해, 서로에 대한 폐쇄성과 억압을 재생산하는 운동구조를 변혁시켜야 할 것이다.

1. 여성억압을 고착화시키는 포섭과 배제의 근대 정치

가부장적 권력구조는 근대 이후 핵가족 구성의 모습을 통해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근대 가족은 성인남성인 가장이 한 가족단위의 부양을 책임지고 가장의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은 피부양자로서 위치지어지면서 가정에 대한 복종의무를 갖는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가족제도는 생산/재생산, 공/사의 철저한 이분화(분업화)에 의해 유지되는데, 그 분업의 형태는 성역할의 규정과 학습으로써 이루어진다. 남성이 공적인 일터에서의 노동과 생산을 통해 돈을 벌어 오면 여성은 그 돈을 아끼고 적절히 가정을 위해 투자하고 - 자신이 아닌 가정을 위해, 반면 남성에게 가정은 그의 소유이다 - 자본주의의 경제적 단위, 즉 기본적인 생산력이 충당되는 가정의 재생산을 위해 저축해야 하며, 무임의 가사노동과 양육의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가족 안에서는 생산을 책임지는 가장만이 경제권과 결정권을 장악하므로 가족구조는 철저하게 수직적이다. 이러한 근대 핵가족제도에서 파악할 수 있는 가부장적 권력구조는 핵가족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 국가구조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근대국가제도는 대의제와 관료제로 구성되고 학교(교육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가정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와 군대의 국가장치로 그 틀을 유지한다. 이들 또한 공/사= 정치/비정치= 남/여=우등/열등의 이분법 속에서 철저한 위계질서를 가지며 그 속에서 성인남성(육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을 제외한 개인들은 끊임없이 배제된다.

신자유주의는 공과 사적 영역의 이분화, 그리고 정치와 비정치의 이분법을 더욱 공고히 할 뿐이다. 모든 것을 시장의 논리에 맡기겠다는 것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모든 이들을 무한 경쟁의 소용돌이로 내몰겠다는 것이다. 이미 '여성 우선정리해고' 내지는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여성들에게 일차적인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 무한 경쟁이니 개인의 자유이니 - 이것은 철저히 가정과 그 속의 여성이 생산의 효율성 원리 하에 굴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노동시장에 이미 진출해있는 여성들은 노동시장으로부터 축출당하고 있으며, 새로이 진입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가족주의 이데올로기 - '남성 기살리기 위해 여성이 양보하기!' - 힘든 남성들을 위해 여성들이 열심히 봉사하기! - 에 의해 아예 원천봉쇄를 당하고 있다.

근대 가족의 논리와 이에 기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극단적인 정치화와 탈정치화의 이분법으로 나타나면서 하나의 영역으로, 또는 하나의 주체로 모든 정치성이 옹축되어버린다.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은 주변화되고, 대상화되면서 통제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진다. 통제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집단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가능성, 저항성과 자발성을 박탈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적 영역은 다분히 '정치적'이지만, 가정으로 대표되는 사적 영역은 정치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그런데, 쉽게 생각해보자.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정치적'인 것이며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정치적이지 않은' 것인가? 그 경계선은 너무나도 모호하고 불분명하나, 그래도 여전히 그 경계선이 절대적이고 균질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한 인간은 다양한 요소들로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이란 계급, 성, 지적 수준이나 인종 등의 권력의 그물망 한 가운데에 서 있다. 공적 영역에 대한 사적 영역의 구속은 이러한 권력의 망과 그 속에서 발생하는 모순들을 철저히 은폐시키고 있다. 은폐시킴으로써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이다.

2. 현재 대학은 현대 사회의 억압적 정치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대학은 역사적 산물이다. 대학은 계급이나 성별에 따라 지식의 등급을 매김으로써 의해 사회적 계층 분화를 재생산하고 반영한다. 또한 대학은 '지도자들'을 양성함으로써 정치적 권위의 외적 구조를 유지한다. 대학은 지식을 분할하고 도구화함으로써 자신의 제도적 구조 내부에 보수주의적 기업 이데올로기를 구현한다. 대학은 기업에 의한 획기적인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독점을 조장한다. 그리고 대학은 지배적 문화의 규범과 관습 내부에서 사회적 행위주체들을 양성한다.

그러므로 대학생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정치적 관계망으로부터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다. 대학이라는 기제를 통해 학생들은 끊임없이 훈육되며 지배질서에 편입되기 위한 주체화 과정을 견고히 한다. 대학생의 '자율성'이라는 생각이 어찌면 이 주체화의 과정을 숨기고 있는 핵심적인 기제일지도 모른다. 대학의 순수성과 비정치성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대학을 통제가능한 대상으로 전락시키기 위한 수법에 불과하다. 순수성이라는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대학이라는 장소를 탈정치화시키며 그리고 대학생들을 정치에서 거리가 먼 존재로 규정해버리는 것이다.¹⁾

대학은 이전에 가능하지 못했던 진보적 사고와 행동이 가능한 곳이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철저히 지배적인 권력 관계를 깨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대학 내에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학생이라는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권력 관계를 간파하고 깨나가는 과정일 것이다. 지배체제에 유익한 미래의 자본가를 양성하기 위해, 가부장과 그에 의해 지배당하는 성적 소수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지식'을 억압의 무기로 사용하는 엘리트 집단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을 우리가 받고 있으며 대학 내에서의 운동들은 이러한 다양한, 그러나 서로 떨어뜨려서 얘기할 수 없는, 모순들을 깨나가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깨뜨려야 정치와 비정치의 바로 저항하고자 하는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 내에 자리잡고 있는 학생회 권력 구조는 우리가 탈피하고자 하는 현대 사회의 억압적인 질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모든 정치성은 학생회로 집중되며, 다수의 학우들은 무관심하고 수동적인 '일반 학우'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매년 선거가 치러지면서 학생회라는 틀을 채우는 내용은 변하지만, 여전히 그 틀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정치와 비정치의 이분법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일단, 구조적인 측면에서 대의제의 한계점이라 지적될 수 있다. 1년에 단 한 번 치루어지는 선거를 통해, 단 한 장의 도장으로 연세대의 1년 간의 '정치'가 결정된다.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근대 민주주의를 현대 사회에서 최고의 미덕이라 배워왔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대의민주주의는 정치적인 것과 비정치적인 것을 확연히 구분하면서 오로지 우리의 일상은 전혀 관계가 없는 듯한 '정치적' 의제만이 채택되고 투표를 통해 그것이 공인을 받는다. 학우들의 일상은 여전히 비정치적인 학생들의 일상일 뿐이다. 대의제를 통해 '공인' 받은 정치적 의제에 비하면 이것은 아주 사소한 문제일뿐이다. 물론, 혹자는 '공인'

1) 이러한 과정은 96년도 한총련 사태 이후에 학교당국이 보여줬던 태도에서 극명하게 들어난다. 당시 학교당국은 '정치'를 하는 학생들을 불온한 학생들로 규정하였으며 이후 끊임없이 학생 자치권을 모욕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보였다. 특히 최근에 종합관 이념교육관화 방침이나 문과대 자치공간에 대한 약속을 반복하는 행동들은 학생 자치권을 직접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임과 더불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질서의 논리에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다.

을 받았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 그 일련의 정치적 사업들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중요성, 선차성이 결정되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보자. 혹시 우리가 무엇이 정치적이고 무엇이 비정치적인지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부여되고,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규정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몇 해 전에 도서관에 놓여있던 가방들이 일방적으로 버려졌다. 이것을 단순한 복지의 수준 - 그저 학우들의 일상적인 문제 정도로 바라보는 - 으로 바라본다면 그 잃어버린 책가방들을 다시 찾아내고 '버리지 말라'라는 조치만 내려지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학이라는 공간 내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대학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 즉 자치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다른 예로, 여학생 휴게실 문제를 살펴보자. 그 공간을 관리해야 하는 여학생회나 여휴를 애용하는 여학우들이 끊임없이 듣는 문제제기는 '왜 남학생 휴게실이 없느냐'라는 질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여학생 휴게실이 필요하냐?'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한다면, 여학생휴게실은 비정치적인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정치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 즉, 여성들은 왜 실외에서, 내지는 남성들이 보는 곳에 마음대로 쉴 수 없는가, 왜 여성들은 남성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고 그 시선 속에서 성폭력적 공포감을 느껴야만 하는가라는, 현 사회 구조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상적인 문제들은 대의제를 통해 걸러진다. 설령 학생회 체계에서 이러한 것들이 다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여전히 '위임' 받은 사업이며, 학생회들이 중요시하는 보다 큰 정치적 의제들에 비해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것은 학생회의 사업이나 사상, 내용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34대 총학생회가 객관성과 비정치성의 탈을 썼지만 학생회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이 없었으며 여전히 정치적인 것과 비정치적인 것의 이분법 속에서 '비정치'를 택했을 뿐이다. (물론, 그들이 과연 비정치적이었는가라면 오히려 비정치의 탈을 쓴 우익 정치였지만)

대의제라는 구조적 한계점들과 더불어 그간 학생회가 부여했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바로 내용에 대한 부분이다. 90년대에 들어서 학생회가 학생들의 대중자치조직이라는 의미가 퇴색되면서 민족해방계열과 민주민주계열 간의 당파 싸움으로 전락해버렸다. 이러한 사고체계는 여러 사회 모순이 민족 모순이나 계급모순에 종속되어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이 두 운동 외의 다른 운동은 필요없는 것, 내지는 '부문 운동' 정도로 사고되어왔다. 이 속에서 호명될 수 있는 주체는 각각 단 하나이다. 식민지 하의 분단 조국이라는 현실 속에서의 주체 또는 노동자-자본가 계급 적대 속에서 민족'지향적'인 진보적 지식인²⁾이라는 주체만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전사회적으로 바라보면, 또는 사회적 권력관계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대학이라는 작은 공간만을 바로보면, 모순은 단일하지 않으며 또한 그 속에서 규정되는 저항적 주체도 단일할 수 없다. 즉, 식민지 분단조국이라는 현실이나 계급 적대의 현실이 여성 억압의 모든 부분을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학생운동 속에서는 부분이 전부를 예기하고 있다고 간주되었다. 현 사회의 모순은 단일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그렇게 나타나지도 않는다(만약 그러하다면 사회변혁은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며 이미 달성되었을지도 모른다!). 여성과 남성의 차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 지식노동과 육체노동의 분할과 차별, 노동자와 자본가의 위계, 인종과 인종 간의 차별은 지배계급의 이익과 확장을 위한 억압적 질서이다. 거기에 대항하고자 하는 운동들은 이러한 차별과 위계 또한

2) 물론, 대학 교육의 개편과 구조조정, 이윤추구의 원리에 대학이 더더욱 포섭되면서, 지식인으로서의 대학생의 위치는 상당히 저하되었다.

극복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의 운동들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일상을 걸러내면서 비정치적 영역으로 만들어버리는 학생회의 대의제와 '민족통일이나 노동해방이나'라는 이분법적인 논리 속에서 그 모습을 잃어갔다. 자치는 학생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지배질서에 편입되어 있는 대학을 저항적으로 재구성해낼 수 있는 개념이자 운동이다. 그러나 현재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학생회구조 속에서는 '자치'는 학생회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복지 사업이나 대사회적 투쟁을 학교로 들여온다는 것 정도로 사고되고 있다. 대사회적 투쟁의 필요성과 거기에 대한 대학의 발언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90년대 들어와서 학생회 중심의 운동은 그 운동이 몸담고 있는 공간과 운동가의 정체성을 무시하거나 운동하기에 오히려 불리한 위치로 규정되었다.³⁾ 그렇기 때문에 학생회질서 밖에 있는 움직임들은 - 학생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정치조직 외에 - 지배질서에 틈새를 낼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여된 자신의 정체성을 깨려는 자발성들 - 다분히 정치적인 움직임들로 간주되지 않고 오히려 비정치적이고 부수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왔던 것이다.

여성운동가들에게 '자치'란 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중 하나이다. 앞에서 논했듯이, 여성의 문제라는 것은 사적 영역으로 묶인 가정에서 출발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 성질 상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 자본주의의 권력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학생회구조가 여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정치화시켜내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물론, 여학생들의 독자적인 학생회를 통해 공적 영역 - 즉 전체 학생회 구조 - 속에서 여성들의 발언력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전체 학생회 구조가 그 폐쇄성을 뛰어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운동들 간에 위계질서가 부여되는 현 운동 질서 속에서는 여성들의 발언력과 파장력에는 제어가 걸릴 수밖에 없다.⁴⁾

- 3) 생산관계의 측면, 즉, 계급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학생은 엄밀한 의미에서 무계급이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대학은 지배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소인 만큼 - 이것은 연세대학교와 같은 '일류' 사립대학의 경우 더욱 그렇다 - 학생들의 주체성은 '무계급'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지기 보다 오히려 미래의 지도자들을 양성한다는 대학 내의 권력구조에 초점에 맞춰져야 한다.
- 4) 대의제를 통한 여학생들의 대표체인 총여학생회가 전체 학생회 질서 속에서 여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총여학생회는 학생회로서의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구상하고 있으나 어쩌면 이것은 그야말로 '보완'이다. 현재 총여학생회는 '여성주의'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여성운동을 한다는 내용적인 측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억압을 재생산하는 현 체제의 권력 구조와 이를 그대로 답습하는 운동관 자체에 대한 비판이다. 즉, '여성주의'는 대안적인 권력을 사고하는 틀거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총여학생회에서는 '자치질서 구축'이라는 것을 가장 큰 기조로 삼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총여학생회는 학생회이기 때문에 재정과 공간(총여실을 다른 단체들에게 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을 쥐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권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학생회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러한 '권력'을 재분배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재정과 공간에 대한 학교당국과 다른 학생회를 상대로 요구를 하는 것은 총여학생회가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는 직면해있다.

학생회로서 총여학생회의 유의미성과 또한 총여학생회의 한계점들은 '일상, 자치 저항문화, 기획단 자료집(1996년 11월) 또는 제10대 총여학생회 선거운동자료집 또는 '따로 또 같이 - 총여학생회와 자치단체 한마당' 자료집에 보다 상세하게 나와있다.

3. 자치권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대안적인 학생사회를 위하여

여성주의적인 권력구조는 그동안 남성중심적인 수직적 권력, 중앙집중적인 권력, 상명하달식의 권력구조에 반대되는 개념이면서 가부장적 권력구조에 대한 대안이다. 즉, 수평적인 권력구조이라는 함의를 가지고 조직적인 측면에서 중심으로 집중된 권력을 해체하고 권력의 순환구조를 재구성하는 것, 내용적인 측면에서 근대 이후 사회관계들의 판단 기준인 이분법⁵⁾이 아닌 개별자들의 차이가 억압받지 않으며 차이들간의 윤리적 연대 속에서 상호변화할 수 있는 관계망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 던져봐야 한다. 왜 학생들의 권력이 '학생회'라는 기구만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일까? 이것은 '권력이란 무엇인가'는 막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어야 할지도 모르나, 왜 학우들의 정치는 대의제를 통한 학생회라는 상위 기구로만 구현되는가? 우리는 권력을 다시 정의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권력은 본질적으로 위에서 아래로만 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에서이다. 현재의 권력구조는 위에서 아래로 향한 권력 구조이며, 이렇게 하향식의 구조 속에서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억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새로운 권력 구조의 창출이란, 이러한 구도를 뛰어넘어, 새로운 형태의 '권력' - 자발적인 권력, 타인을 배제하고 억압하지 않는 권력 - 을 의미한다. 학생회가 학교당국과의 교량 역할을 해준다는 것은 긍정적이면서도, 이것이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일상적인 학교 생활 속에서 느끼는 답답함과 부족함 등을 실제로 느끼고 있는 당사자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회는 전지전능한 조직이 아니다. 그럼에도 학우들은 한 번의 투표 행위를 통해서 학생회에 모든 권한을 주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모든 권한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학생회는 어떠한 상위체로서의 위치를 고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근대적 민주주의에 대한 허상들을 과감히 벗어던져야 한다. 모든 권력이 학생회로 집중되고, 대학의 정치성 (모든 이가 '참여'할 수 있는 정치성)이 선거 기간으로 집중되고, 그리고 개인의 정치성이 투표 한 장에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은 간접민주주의일 뿐이며, 부르조아적 허상이다. 물론, 간접민주주의 또는 대의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국가가 형성되면서 대의제는 국가권력을 강화하는 제의식이 되어버렸다. 선거라는 것, 투표라는 것 그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 일상과 괴리되는 정치, 학우들과 거리가 먼 학생회를 만들어내는 기제로서의 대의제에 대한 비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미화되고 있는 학생회 권력 구조의 변혁을 요구하는 것이며, 학우 각자의 자발성과 적극성, 그리고 정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의 구축을 요구하는 것이다.

4. 서로 간의 벽을 허물고 일러있는 운동으로!!

5) 근대/전근대의 분리에서 시작된 이성/감성, 공/사의 이분법과 이러한 논리가 우동/열등의 구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근대 자본주의적 공과 사의 분할과 그 속에서 여성의 위치에 대해 언급했으며 그것이 대학의 학생사회로 그대로 이전되었을 때 나타나는 학생회의 독점적 구조와 운동들의 위계화에 대해 비판을 했다. 비판의 중심은, '포섭과 배제'의 원리에 따라 괴역압자층은 어떠한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배제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원리가 대학이라는 공간 속에서는 '학생들은 비정치적인 특권계층'이라는 이데올로기로, 그리고 학생사회에서는 학생회 중심주의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학생회 중심주의는 학우들의 자발적인 흐름을 봉쇄해버리고 그만큼 대학의 저항적 가능성들을 말각시켜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 모든 운동의 중심 태제는 아마도 '연대'일 것이다. 이것은 같은 운동 단위들 간의 연대일 수 있지만, 또한 더욱 넓은 범위에서는 다양한 적대전선 설정을 통한 다양한 운동들 간의 연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보여지는 모습은 피상적인 수위에서의 연대였다. 즉, 어느 사업들을 함께 한다고 해서, 또는 비슷한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은 연대가 아니다. 연대는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그러나 오질 않는 하나의 목표 지점이라기 보다 오히려 현존하는 경계선과 기존의 틀을 깨는 일련의 과정이다. 연대를 하나의 절대적 목표 지점으로 설정하면서 우리는 보다 더욱 중요한 접합의 지점인 우리의 '일상'을 망각해왔다. 현재의 운동 구조는 서로 간의 폐쇄성을 허무는 것이 아닌, 오히려 조장하는 구조이다. 즉, 다양한 모순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끊임없이 단 하나의 모순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다른 모든 운동들은 그 운동의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일상은 탈정치화된 영역이 아니라 반대로 다양한 모순들이 작동하는 곳이며 작게나마 다양한 적대전선이 그어지면서 현 지배질서에 틈새를 낼 수 있는 공간이다. 일상 속에서의 투쟁은 자신의 운동 기반을 자신의 삶에 설정하는 것이며 자신의 주위부터 대안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자치'의 중요성이다.

분명히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이해를 떠난 운동은 있을 수 없다. 이익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운동 주체의 이익을 떠난 운동은 존재하기 힘들다. 다시 말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설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치중한 나머지 똑같이 중요한 다른 문제, 어쩌면 더욱 중요할 수도 있는 다른 문제들에 눈감아 버린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른 정점, 다른 조직, 다른 운동에 자신을 달아 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운동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때 운동은 벽에 부딪히고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의 변혁의 가능성을 협소함으로 차단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80년대 운동에 대한 향수나 새로운 운동에 대한 강박관념을 벗어 운동의 저항적 재구성을 필요하다. 대학 내에서 학생의 정치력이 설 곳이 점점 더 협소해지는 현재, 사회의 전면적인 변혁이 여전히 너무나도 중요한 현재,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가 관성적으로 해오던 운동에 대한 반성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기존 운동의 '분열세력'으로 가장 큰 비판을 받아오면서 분리주의를 선언하기도 하는 여성운동도 그 틀거리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운동 구조의 변화를 의처야 한다. 현재의 운동은 어떻게 보면 지배질서에 따라 '짜여진' 판이라고 할 수도 있다. 서로 간의 비판과 연대는 현존하는 운동의 틀 속에서는 불가능하다. 비판은 의사소통 부재의 악순환으로 치닫게 되며 연대는 갈등만을 초래하는 빗나간 작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서로 간의 경계와 벽을 허무는 과정은 운동가 개인에게나 조직적 차원에게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신의 일상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자신의 편견을 인정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파괴'의 과정에서만 진정한 연대를 실현할 수 있는 창조가 싹틀 수 있다. 단지 괴역압자

들 편에 서겠다는 것으로는 운동이 부족하다. 오히려, 우리 개개인을 억압의 질서에 편입시키려는 권력을 깨나가면서, 자신도 또한 억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운동은 진정한 연대 속에서 보다 전면적인 변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 ■

反체제적 여성주의, 그리고 급진적 연대

여성모임 13번째

이른바 전체 운동판에서조차 여성 운동 단위들 간의 차이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직도 여성 운동을 나도 출세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르주아 여성들의 투쟁 함으로 비하해서 보는 시각이 없지 않게 남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종류의 여권 운동과, 여성주의 운동은 다른 것이다. 여성주의 운동은 여권 운동과 어떻게 다른가? 여권 운동이 기존 질서로의(일단 '체제'라는 말은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편입을 피하는 것이라면 여성 주의 운동은 사적 영역에서건 공적인 영역에서건 기존의 권력 구조들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혁파해 나가는 것이다. 아주 쉽다. 전자는 개량이고 후자는 변혁이다. 언뜻 보면 참으로 간단해 보인다. 그러나 이런 식의 대답으로는 양자의 차이는 분명히 말할 수가 있어도 기묘하게 여성주의 운동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상을 떠올릴 수가 없다. 그보다도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떠오를 것이다. 과연 무엇에 대항하여 투쟁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여성주의란 무엇이며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어디까지인가?

1. 계급모순과 성모순의 선차성과 역학관계, 그 지리한 논쟁

기존 학생 운동 진영에서의 사구체 논쟁을 기억 할 것이다. 아주 도식적으로 말하자면 민족 모순이 먼저인가 계급 모순이 먼저인가로 요약될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기존 노동운동 판과 여성 운동 진영 간은 물론이고, 여성운동 진영 내에서도, 그와 아주 비슷하게도 도무지 생산적이라고 볼 수 없는 해묵은 논쟁거리를 발견할 수 있다. 여성 내부의 다양한 계급적 차이를 전제로 할 때 과연 성 모순과 계급 모순 중 어느 쪽이 선차적이라는 문제다. 80년대의 이른바 '진보적 여성운동' 진영 내부에서는 성 모순을 각 계급 내의 문제로 설정했다. 즉 한 계급의 여성은 같은 계급의 남성에게 의해 권력적으로 열위에 있다는 식이다. 더구나 이들은 그와 같은 전체에서 계급 해방의 우선순위를 강조하며 여성운동의 주체를 여성 노동자로 설정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의 틀 안에서는 결코 여성문제 자체가 따로 고민 될 수가 없었다. 지나치게 공적인 생산의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아니라 가부장제를 봉건제 하의 남은 이데올로기 정도로 치부하면서 생산 현장에서의 여

성 노동력의 차별과 배제를 배타하는 현실을 계급모순의 발현으로만 분석하였다. 물론 여성들 간에는 다양한 계급적 차이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이해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산당 선언에서조차 여성은 배제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노동 문화가 남성 중심적이며 이른바 pt남성들도 bg여성들을 억압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성폭력을 보라) 분명히 성모순은 독자적임을 알 수는 있다.

그렇다면 최근의 급진주의적 편향의 운동 단위에서 주장하듯 여성은 그 계급적, 인종적 배경을 떠나 '여성'이라는 것발 아래 단일한 전선에 설 수 있다는 얘기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인간 집단을 계급이나 민족의 틀로써 묶어낼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민족주의가 그 내부의 성적, 계급적 차이들을 은폐하며, 민족 모순의 제거가 그 구성원들 전부에게 해방을 안겨다 주지 않는다면(물론 각 모순이 연관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면 말이다.) 보편적인 여성성을 기반으로 하는 여성주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또 마찬가지로 많은 여성주의자들이 그토록 비판해 마지 않았던(현재는 맑스주의 페미니즘이라 할지라도 성 모순의 독자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것처럼 이른바 계급 의식이 성적 차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 반대로 급진주의적 여성주의가 내부의 계급적, 민족적 차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도 문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은 채로 독자적으로 여성 억압의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2. 체제변혁적(反체제) 여성주의,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이다!

만일 세계를 단순히 pt와 bg의 두 계급으로 쉼사리 나눌 수가 있다면 이 거대한 체제는 그만큼 무너지기 쉬웠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러가지 복잡 다기한 독자적인 요인들이 존재하므로 그 만큼의 이해를 달리하는 여러 계급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즉 기존의 노동당론에서 여성이 배제되어 있고 현재의 노동 운동이 결국 성인 남성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면, 여성 노동자 집단은 그와 이해를 달리 할 수밖에 없어 남성 노동자 집단과의 사이에 전선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계는 포도송이처럼 다면적인 권력구조들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한 집단 내에서의 성 모순 해방을 말한다면 여성해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성 모순을 그 자체로만 타파할 수 있는지도 회의해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각 모순들이 독자적이라 할지라도 현실에서는 결코 '혼합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자가 느끼는 억압은 성과 계급 모순의 혼합물이다. 그녀가 느끼는 성적 모순은 분명 계급 모순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녀의 육아 문제나 고용과 임금에서의 성차별은 자본의 논리에 의해 비로소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봉건제 하의 가부장제란 점수 수명을 다 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성모순이니 계급모순이니 하는 것들 모두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거대한 체제라는 그림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여성운동이 성 모순만의 해방만을 지향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물론 성모순만으로 느껴지는 억압도 있을 수 있다.) 혼합물은 혼합물 자체로서 제거되어야 한다.(여성 노동권 확보에 대한 운동은 기존 노동운동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 영역이다. 그럼으로써 인류의 노동권 개념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엔 노동해방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그것이 여성을 억압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결국 우리는 반체제 여성주의 운동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3. 반체제전선에서의 여성주의적 연대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운동의 방식이다. 어떻게 무수한 차이들이 극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일까? 아주 교과서적인 대답을 하자면 여성주의적 연대의 지향이어야 한다. 기존의 남성적인 운동의 방식들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여기서 남성적인 운동의 방식이란 어떤 것인가? 가부장적 권력 구조하의 산물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부장적'이라는 말, 또는 '가부장제'는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 일단은 좁은 의미의 부권제의 의미다. 이는 가정이라는 공간, 그리고 지금도 그 권위를 잃지 않는 족보와 비합리적인 호적, 호주제 등에서 발견될 수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여성 전반에 대한 남성 일반의 억압 체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좀 더 확장된 의미에서의 가부장제이다. 이는 흔히 '가부장적'이라는 형용사형으로 주로 쓰인다. 권위적이고 수직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家(또는 堂)의 형태를 나타내는 말인 것이다. 흔히 가부장적 기업 경영 방식이라는 말을 듣는다. 군대가 가부장적인 질서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한다. 대체로 인류의 역사상 가부장적인 질서가 고착화되기 시작한 것은 계급의 발생과 전쟁의 시작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은 거의 상식이다. 지금도 이웃과 전쟁이 잦은 원시 부족일 수록 여성의 지위가 낮다. 그런데 우리는 직관적으로 현대의 자본주의가 그와 비슷한 행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는 초국적 자본 간의 전쟁터로 인권에 앞서 자본의 효율성(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만이 우선시되는 상황이다.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여성은 주변화되고 노동권을 박탈당하고... 여성의 빈곤화, 종속화가 가속된다.

여하튼 확장된 의미에서의 가부장적 질서들을 타파해 나가는 것이 여성주의의 중요한 강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여성주의는 그 해방의 주체를 반드시 여성으로만 한정하지는 않는 것이다. 여성주의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변혁적 이념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단지 여성이라는 주체만을 상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성주의적 입장을 견지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계급서열화된 사회를 거부하고 차이를 인정하고 극복해 나감으로써 연대의 지평을 넓혀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 백인 여성 노동자와 흑인 여성 노동자 집단 간의 진정한 연대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백인 여성 노동자 집단의 인종주의를 타파해 나가며 차이에 기반한 평등을 이루어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보면 연대라는 것은 그것을 지향하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하고도 쉽게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가부장적 유일신 종교인 기독교적 페미니즘 그룹과의 소통은 아직은 상상할 수가 없다. 부르주아적 여권운동 진영과도 마찬가지이다.)

여성주의적 연대의식은 여성 해방이 곧 인간 해방이 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 과연 우리를 중 어느 누가 여성주의를 구체적인 언어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여성 운동 진영 내에서는 단위에 따라 활동가 개개인에 따라 여성주의의 의미가 각각 다른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아직 선불리 결론을 내리지는 말자. 여성주의는 그 다원성에 생명이 있는 것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여성주의의 개념 정리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점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

환경운동의 관점과 실천¹⁾ -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에 관하여

전국학생연대 환경위원회

1. 들어가며 -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

환경운동이란 어떠한 운동인가? 그리고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은 필자뿐만 아니라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 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환경운동이 가지고 있는 비중은 그 역사에 비해서 상당히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환경운동의 양적 발전은 급속한 발전시기를 거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에 걸맞은 질적 발전과 내용적 분화의 과정은 이에 못 미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70년대 공해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생존권 싸움으로 시작된 환경운동은 80년대 공해문제연구소, 공해추방연합 등의 사회단체의 건설로 본격화되었고 90년대 후반인 지금 수없이 많은 환경단체의 많은 활동들로 한국환경운동은 채워지고 있다.

학생운동전역에서의 환경운동의 경우 이보다 훨씬 늦어 90년대 초반 몇 개의 환경동아리를 중심으로 시작한 학생환경운동의 흐름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다가 96년 체르노빌 10주기 사업, 96년 [반생태적 동계 U대회 저지를 위한 학생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현재 [전국학생환경연대회의]와 같은 협의체의 건설, 97년 영흥도 공동투쟁, 98년 정준희 씨 공동투쟁의 진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운동차원에서 10여 년, 학생환경운동 차원에서 5-6년의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은 이제 하나의 명실상부한 부문운동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라는 많은 변혁 운동의 원칙과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의 근본 모순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을 펼침에 있어서 어느 한 부문에도 빠짐 없는 활동들이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이들 사이의 공동의 전선을 창출해내고 해당 시기 투쟁에 있어서 공동활동을 벌여내는 것, 그리고 공동의 행보를 맞춰가는 의식적 행위들이 없이는 이들의 활동은 파편적인 활동으로 국한 될 수밖에 없을 것

1) 부산대 교지 『효원』에 실렸던 글입니다.

이기 때문이다. 환경운동 역시 사회의 모순을 극복해 나가는 변혁운동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운동이기에 이러한 파편적 활동은 환경운동의 원칙과 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되게 된다.

이러하기에 환경운동과 다른 운동과의 연대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어떻게" 연대 할 것인가라는 방식의 문제를 벗어나는 질문이다. 일단, 환경운동이 사회 변혁운동의 한 부분인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며(그러하지 않다면 연대는 '하면 좋은' 부수적인 것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 다른 사회 변혁운동과 환경운동은 어떠한 위상으로 "연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전체운동의 준위에서 각 운동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에 대한 이야기는 "사안"과 "형식"의 파악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환경운동에 대한 대략적인 고찰 이후 노동운동의 연대에 대한 사례 연구를 함께 다루려고 한다. 아직 환경운동과 노동운동과의 연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일천한 관계로 많은 것들을 담지는 못하겠지만, 그 동안의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해 가도록 하겠다.

2. 환경운동이란 어떤 운동인가?

2.1. 환경위기와 환경운동

일찍이 환경위기를 이야기했던 많은 이들의 논문과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 환경 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시기에 살고 있다. 이미 전세계적인 기상이변과 기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수백만명이 사망하고 있고²⁾, 1회용 용기 등의 화학물질로 남자의 정자수는 20년 사이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³⁾ 이외에도 우리는 4월말에 날씨가 더워 '반팔 옷'을 입는 이상 기후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크게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비롯한 이상기온, 기상이변의 형태⁴⁾와 전지구적 생태계의 혼란, 멸종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전세계 민중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⁵⁾

이러한 위기 속에서 환경운동 전역의 대응은 다양하다.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자)는 자연보호론자로부터, (급진적 행동으로 생태계 파괴를 저지하자) 좌파 환경운동까지.⁶⁾ 이들의 흐름에 있

2) UNEP 보고서, 98년 5월

3) 일본의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남자의 정자수는 40대 남자의 정자수의 55% 수준으로 20년 사이에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는 커피면 용기들에서 나온 화학물질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규제를 들어가고 있다.

4)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좋은 예로 한강의 결빙일수가 있다. 1940년대 평균 결빙일수가 69일이나 되던 것이 교통의 증가, 환경과파로 인한 기온 증가로 지금은 6-7일밖에 되지 않고 있다.

5) 이러한 피해들은 항상 힘없고 돈 없는 민중들이 받는다. 97년 말 방글라데시를 급습한 사상 유례없는 폭한(영하 6도)으로 무려 120명이나 동사하는 일들이 대표적이다.

6) 가장 대표적인 예로 모피 반대운동을 하면서 모피 옷을 입고 가는 이들에게 케인트를 뿌리거

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흐름들은 [환경개량주의]적 사고들이다. 즉, 환경의 문제는 아직 발달하지 않은 기술의 문제와 개인의 잘못에 의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각 개인에 대한 홍보(계몽)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은 소위 '편편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자연보호를 장려하기 위한 쓰레기 줄기와 분리수거의 강조, 각종 홍보성 캠페인으로 개인의 잘못을 강조한다.⁷⁾

이러한 방식의 환경운동은 환경문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모순 - 즉 생산방식에서 나오는 환경파괴의 모순, 기술의 객관성에 대한 모순을 은폐한 채 극히 일부분의 것을 전체로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환경파괴는 생산과정에서부터 조절되고 바뀌어 질 때 막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비자의 몫으로 돌리고 있으며, 이것은 곧 생산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본의 논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비과정에서의 환경운동이 아니라, 생산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환경운동은 사고되어야 하며, 이에 기반해서 사회 체제 모순에 대한 접근, 정치경제학적 접근으로서 환경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3. 환경운동, 노동운동의 연대 - 그 계속되는 화두에 관하여

환경의 문제가 사회의 모순의 문제이고, 이것을 풀어나기 위한 활동이 환경운동이라면, 그것의 성격은 체제 저항적이고 모순에 직접적 문제제기의 형태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또한 그것이 환경이라는 사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사회적인 내용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환경'으로의 국한이 아니라, 다른 운동과의 연대를 통해서 내용을 확대시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러한 활동들은 제약을 받거나 잘 수행되지 않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에 대한 상을 하나씩 짚아가 보자.

3.1.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각 운동 진영사이의 '연대'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하나의 전선과 관점 속에서 연대를 일구어 낸다는 것은 '원칙적인 측면'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노조의 단위 사업장을 넘어서는 '연대 투쟁'이 만들어져 가고 있으며, 노학연대 투쟁, 빈학연대 투쟁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에 대한 많은 이들의 생각은 몇 가지 편향된 사고 인해 왜곡되어 있다. 이는 특히 학생운동진영 내에서 그러한 경향을 많이 보이며, 이로 인한 많은 우려스러운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첫째, 연대를 위한 연대의 빈약함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환경운동과 노동운동, (혹은 여성운동까지)등이 연대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결여로 인해

나, 무분별한 벌목을 막기 위해 벌목 사무소를 폭파시키는 아나키즘적 환경운동이 있다.

7) 지금은 다소 시들해진 우유팩 모으기 운동을 보자. 우유팩을 재활용에 사용되는 물(우유 물)로 인한 수질오염, 우유팩의 코팅을 녹이기 위한 유독성 화학약품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민 계몽운동으로 진행된 우유팩 모으기 운동으로 우리의 주부들은 매일 우유팩을 물로 씻고 햇볕에 말리는 가사 노동에 시달렸다.

이들 사이의 연대를 '추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근거 없는 '당위'에 국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각 사안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회단체들의 환경운동에서보다 학생환경운동 진영 내에서의 논의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다. 노동, 환경, 여성, 문화, 인권, 정보통신 등 여러 부문의 운동들을 대동하게 나열해 놓은 다음 이들 사이의 연대에 대한 고민을 진행시키는 이러한 방식은 실제 각 운동진영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운동의 방식으로 연대운동의 실마리와 계기를 무시한 채 각 부문운동간의 연대를 기계적으로 사고하고 있는 좋은 예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을 연대할 수 없는 존재로서 사고하고 있는 반대 경향이 존재한다. 이러한 견해는 환경운동의 시민운동 지향성을 비판하면서 노동자계급의 이해에 적대적 대상으로 환경운동을 자리 매김하거나, 변혁운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운동으로서 환경운동을 설정하는 오류를 범한다.

이는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노동자'의 이익정도로 국한시키는 개념상에서의 한계적 측면과 '시민운동의 한 분파'로서만 환경운동을 이해하고 사회 변혁운동 전체에서 환경운동이 차지하는(혹은 차지해야 하는) 비중을 무시한 사고로 마땅히 비판되어야 한다.

3.2. 연대의 역사와 사례

우리 나라의 경우,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는 주로 '기업의 환경파괴에 맞선 투쟁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는 70-80년대 개발지상주의 하에서 계속 이어진 공해도시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으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노조와의 연대의 형태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행된 환경운동과 노동운동과의 연대는 주로 환경오염지역에서의 환경사안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기업의 반환경성을 폭로하고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서 울산지역에서의 연대, 대우조선 산업폐기물 유출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울산지역에서의 연대의 대표적 예는 현대중공업 산업폐기물 소각장 반대운동과 한국티타늄 공장 온산공단 입주 반대운동을 꼽을 수 있다. 현대그룹이 현대 중공업 산업폐기물 소각장 건설에 착수함과 동시에 울산환경운동연합(이하 울산 환경련)과 현충련 산하 노동조합들이 함께 연대하여 전개한 반대투쟁이었던 현대중공업 산업폐기물 소각장 반대운동은 울산 환경련과 현충련 산하 노조들이 모여 93년 7월 공동대책위를 만들고 수 차례의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산업폐기물 소각 시 나오는 중금속 대기 오염물질과 다이옥신의 문제점을 알려내었다. 93년 11월 10일 현대정공노조원들이 '소각장 승인불허' 구호를 외치며 진행한 집회를 벌이는 등 공동대책위 소속 단체들과 소각장 인근 염포동과 양정동 주민들의 지속적인 농성·집회가 이어졌다. 이러한 투쟁에 힘입어 11월 17일 부산환경청은 소각장 처리허가 신청서를 반려하고 22일에는 소각장 공사를 전면 중단하기에 이른다.

또한 울산의 대표적인 사례중의 하나인 한국티타늄 공장 건설 저지운동의 경우, 1995년 3월 온산면에서 한국티타늄 공장이 착공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울산 환경련이 티타늄 공장의 생산공장에서 나오는 맹독성 가스로 인해 이미 최악인 온산·울산지역의 대기오염이 극도로 악화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조와 시민들과 공동투쟁 할 것을 선언하면서 투쟁이 시작되었다. 이후 2월 27일 현충련과 함께 한국티타늄 건설저지 100만 명 서명운동, 공장부지 점거철야농성 등

의 적극적인 투쟁으로 공장 설립을 막아내기 위해서 싸웠다. 이 과정에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티타늄 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다른 환경단체와의 충돌이 발생, 환경단체들간의 대립으로 보도되는 등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있었으나 계속 투쟁을 전개, 환경운동단체와 노조의 연대간의 연대에 좋은 예를 보여주었다.

울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노동운동과 환경운동간의 연대는 대우 조선의 산업폐기물 유출사건이다. 대우조선 노조 부위원장 출신인 이행규 씨는 몇몇 동료와 더불어 1990년대부터 해안가에 매립되는 대우조선의 산업폐기물을 중병자료와 함께 축적해 놓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93년 8월 이 자료를 환경운동연합에 알렸으며 1994년 국정감사에 고발함으로써 그 전모가 알려지게 되었다. 대우조선은 일반 매립장으로 허가 받은 곳에 산업폐기물을 매립하고, 1976년부터 1993년까지 연평균 5천 톤 이상씩 공장폐수를 바다에 투기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은 이후, 당시에 관여하였던 노동자들과 사회인사들이 중심으로 되어 거제환경운동연합이 창립되는 조직적 성과까지 낳게 되었다.

4.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 -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과거의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사례들은 지금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앞의 사례에서 긍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를 살펴보았다면, 근래에 발생한 사안을 중심으로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에 있어서 극복해 나가야 할 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4.1.

故 정준희 씨의 죽음과 '(주) 한화'의 불법폐수방류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

3월 25일 '(주) 한화' 창원공장 정준희 기장의 자살로 시작된 이 투쟁은 28일 유서발견 이후 본격화된다. R/O system이라는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해서 '환경친화기업'에 선정된 '(주) 한화'는 R/O system 가동 후 시스템 자체와 운영상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여 환경담당자였던 고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 폐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자, 창원공장 내 환경관리인으로서는 무단 방류 적발 시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전가되는 것과 양심적인 갈등을 빚던 중 자살을 선택했던 것이다.

사안이 발생하자, 가장 먼저 마창 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 마창 지역협의회(이하 마창 민노총)가 중심이 되어 공동대책위(이하 공동대위)를 만들게 된다. 공동대위 건설 이후, 마창 민노총과 마창 환경련은 공동 보조를 맞추며, 사안이 정리될 때까지 공동 집회 상정, 공동 투쟁 방향 설정 등 공동행보를 취하게 된다. 몇 가지 실무적인 부분에서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큰 문제없이 투쟁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환경운동단체와 노동운동 단체가 하나의 슬로건아래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노동자의 죽음'이라는 사안의 특성이 가장 크게 작용했으며, 노조의 투쟁 결합으로 투쟁에 대한 경험이나 노조의 조직력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더욱 힘있는 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故 정준희 씨의 죽음과 관련한 투쟁에 있어서 마창 민노총과

의 공동 투쟁의 경험은 이후 마창 지역 운동차원에서 소중한 경험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며, 환경운동과 노동운동과의 연대에 있어서 새로운 예를 보이고 있다.

4.2. 동아 매립지 용도변경 저지 투쟁

동아 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사안은 오래 전부터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투쟁 사안이었다. 인천의 갯벌을 11년 동안의 공사를 거쳐 매립한 동아건설은 1126만평의 매립지 가운데 494만평을 농경지로 나머지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할 것을 약속하고 얻어 내었다. 그러나 건설이 진행되는 11년 동안 외곽이던 매립지 일대는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주변에 들어선 영종도 국제공항 고속도로, 경인운하 계획과 맞물리면서 소위 '노른자위 땅'이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자 동아건설은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기에 이른다. 농경지로 사용하기로 한 곳은 관광단지와 주거용 및 업무용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IMF구제금융 이후에는 무주리조트를 사기 위해 국내를 방문한 마이클 잭슨까지 끌어 들여서 용도변경을 시도하였다. 이후 농림부의 용도변경 절대 불가 방침과 동아건설의 용도변경 요청은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새간의 논란거리가 되었다.

국내의 여러 환경단체들은 당연히 동아건설의 용도변경 선언을 비판하면서,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에 대한 고발장 접수 등의 활동들을 펼치기에 이른다.

이러던 중 각 기업의 연쇄부도는 동아건설에도 찾아왔고, 급기야 동아그룹은 기업구조조정차원에서 동아건설을 제외한 모든 기업을 해체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게 까지 진전되자, 동아건설 노조가 나서게 된다. 기업의 희생차원에서 (동아매립지 용도 변경)을 외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5월 1일 May-Day집회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 11일에는 동아노조 및 민노총 건설노련의 대국민 선전전까지 하게 된다. 이들의 논리는 간단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기업부터 살리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동아매립지의 용도변경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용도변경에 대한 국민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선전전'까지도 했던 것이다. 회사의 존립과 환경파괴라는 어쩌면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안이 'IMF 구제금융시대'라는 전국적 이데올로기에 편승해 대립물로 서는 순간이었다. 실제 동아건설의 재무구조 부실은 IMF 구제금융 이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내용 중 하나이며, 이를 지금에 와서 기업 희생과 관련시켜 제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과 현상으로 뒤바뀌는 것 이상 아닐 것이다.

동아매립지 용도변경 투쟁의 경우, 노동운동(정확하게는 노동조합)과 환경운동이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실질적인 충돌이 일어난 예로서 노동조합으로 국한되어져 사고되어진 노동운동의 한계점들과 환경운동진영의 일상적 연대의 부족으로 인한 공감대 형성미비가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의 가능성과 방향

환경운동에 대한 일반적 특성과 각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것을 정리하고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실천적 연대를 위해서 넘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자.

5.1. 구체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하는 직접적 투쟁에의 결합

앞의 예들에서 살펴본듯이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에서 중요한 지점은 '직접적'·'실천적' 연대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에 기반한 작업환경에서의 문제 - 95년 LG 전자 여성노동자들의 솔벤트 중독으로 인한 불임, 최초의 공해병 환자로 판명된 박길례 씨, 석면 중독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죽음 등은 이러한 예를 보여주고 있으며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직접적 연대의 가능성을 항시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준희 씨 문제, 한국티타늄 건설반대운동에서 보이듯 기업의 환경파괴를 막아내기 위한 노조와 환경단체와의 연대 역시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기업의 환경 파괴 사안은 신자유주의질서 속에서의 기업·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와 맞물려 더욱 많은 환경파괴의 사안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IMF 구제 금융'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 경제이데올로기와 편승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 공간에서의 환경문제와 기업의 환경파괴에 맞선 활동들은 '이론' 중심의 '당위적' 연대가 가지고 있는 추상성을 넘어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의 실천적 예를 계속 만들어 낼 것이며, 이를 중심으로 계속되는 사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5.2. 상호 침투를 통한 환경문제의 확대

그러나 동아매립지 사건에서 보듯이 노조와 환경단체와의 표면적인 마찰은 계속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마찰은 보통 환경운동진영과 노동운동진영의 정보가 정확하게 유통되지 못하며, 각 운동진영이 일상적인 시기에 공동 사업을 해 낼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동아매립지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입장이 가지는 논리와 투쟁에의 당위성에 대한 검토없이 기업의 자기 희생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노조의 활동은 아직 우리 나라에서 환경운동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많이 존재함을 나타내는 반증이며, 이러한 가운데 사안중심의 대응이나, 사후적 수습차원의 사안 접근은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를 더욱 멀어지게 할 뿐이다.

각 사안별 연대를 뛰어넘는 일상적 시기의 연대를 위해서는 노동운동 내에서 환경운동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작업장 내에서의 환경의 문제, 기업의 환경파괴에 맞선 환경투쟁과 같이 노동운동과 직접 맞닿아 있는 부분 이외에도 반핵 운동에 대한 이해의 확산, 국립공원·갯벌과 같은 생태 보존 문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진행 등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환경운동이 자신의 고용문제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다는 것이 확실히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⁸⁾

- 8) 그동안 동아건설의 문어발식 확장과 건설분야의 중복부자에 대한 검토없이 [동아매립지가 용도변경되면, 동아건설이 희생한다]가 동아건설의 기만적인 자기 희생논리임은 자명한 일이다.
- 9) 외국의 경우, 벌목 노동자들과 환경단체의 대립, 핵발전소 노동자들과 환경단체의 대립을 흔히 볼 수 있다. 노동조합주의에 매몰될 경우, 환경단체는 노조의 존립기반(직장)자체를 부정하는 적대적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전사회적으로 바라보면, 결국 환경을 지키는 것이 많은 양의 고용을 창출한다.(1991년 지구환경보고서 중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상" 참조)

6. 마치며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에 대한 주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는 우리 나라 환경운동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음과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본 두 운동 사이의 연대에 대한 고찰은 아직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글이지만,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에 대한 많은 이들의 고민이 진전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학생환경운동진영의 고민들이 진일보하는데 밑바탕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 문헌>

- (주)한화 창원공장 환경안전팀 정준희 기장 사망 및 불법폐수방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결과 기자 회견문, 98. 4. 13, 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와 민중생존권 - 엘리노를 중심으로, 98.3, 전국학생연대 환경위원회
 김포매립지 공동대책위원회 소식 5월 19일자
 김포매립지 관련 성명서, 98.4.-5, 환경운동연합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의 의미와 방향, 성낙진
 부문계열운동, 다시 생각하기, 94.5, 전국학생연대 부문계열운동강화 특별위원회
 지구환경보고서 1991, 월드위치연구소
 환경호르몬에 관한 자료, 98.5, 환경운동연합

1998년의 꿈지락

신방과 학회 꿈지락

Comm.知樂 - Commune을 아는 즐거움
Communication을 아는 즐거움

Q> 꿈지락은 무엇을 하는 공간인가요?

A> 신방과 학회 꿈지락은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특정한 학문이나 운동을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만큼 열려 있기를 바란다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진정으로 다양하게 소통되어지지 못할 경우, 나아가 구체적인 실천으로 표현되지 못할 경우, 열려있다는 표현은 그 내용이 비어 있다는 사실, 공허하다는 사실 이상을 말해주지 못한다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일겁니다.

0. 들어가며

현재의 많은 학회들이 그러하겠지만, 신방과 학회 꿈지락 또한 크게 세 가지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일단, 운동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고립되어져 있다는 현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학회원 재생산의 어려움, 나아가 보다 실천적인 행동을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이제 우리는 이 고전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거론하는데 있어,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꿈지락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데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학회'에 대한 일반론적인 논의가 아닌 '신방과 학회 꿈지락'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한다면, 우리는 꿈지락이 몸담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 즉 신방과방(사회대 지하 B019호, 이하 B019)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단 한마디로는 꿈지락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설명해 낼 수 없다고 할 때, 우리는 꿈지락이 어떠한 공간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위치 지워져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꿈지락 구성원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만, 꿈지락의 구체적인 모습을 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회적인 접근은 사실 꿈지락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 동시에 모든 운동을 고민하는 학회에서 추구하는 바가 언제부터인지 '진보적'동의 잡히지 않는 수식어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출발한다. 신이 내려주신 계시와 같은 튼튼한 지반이 없는 지금, 우리는 여전히 녹록한

지를 헤매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자그마한 출발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속한 공간이 正道를 따르는 다른 공간에서는 성직이라는 이유로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다른 말'들이 오갈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화, 생활을 가꾸어 나가는 것만이 우리의 출발점이라 우리는 믿기에, 신방과 학회원들이 '생활'하는 B019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꿈지락의 이해를 도모하는 첫걸음일 것이다.

1. B019라는 공간의 특수성

현재 학생운동이 처한 상황에 대한 장황한 설명은 이 글이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결코 아니다. 우리가 잠시 상기시키고 넘어갈 단 하나의 사실은 많은 대학생들이 원활하게 조직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일 것이며,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B019 또한 결코 예외는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B019가 다른 공간과는 다르게 가지고 있었던 최대의 이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최소한의 전제에 대한 동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것이다. 사실 많은 학회들이 과방을 그들의 공간적 기반으로 사용하곤 한다. 하지만, 이 과방이라는 공간은 과의 구성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특히 신입생이 처음 들리는 곳으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하며, 많은 경우 모든 이의 '휴식처'로서의 역할 이상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신방과의 경우 정원은 60여명이 불과하지만, 방송동아리 CUE, 광고동아리 YAC, 그리고 영화동아리 KINO는 모두 저 마다의 자치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운동, 또는 정치라는 단어에 대해 지나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과방에 들리지 않아도 좋은 상황이 보장되기도 한다. 즉 그들만의 문화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기에, 새로운 방식의 생활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사실 이 말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마치 B019에 기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인 고민들을 언제나 품고 살고 있는 듯이 표현되어 있으며, 동시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배척한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것이다. (일반학우/운동권의 도식처럼)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즉 앞에서 '최소한의 전제'라고 말했던 것은, 몇 가지 문제들을 자신의 것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거부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일상생활에서 몇 가지 행동을 요구하고 설득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렇기에 다른 방식으로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구성원들간의 소통이 가능해야한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소통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데 있어 B019라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공간의 확보라는 물질적인 조건이 분명 매우 큰 이점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결코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매우 중요하다. 공간은 하나의 '조건'일 뿐이기에, 이 공간을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존속시키는 작업은 사실 말 그대로 '끝임없는' 이데올로기 투쟁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군대에서 돌아온 갈곳 없는 복학생이 들리는 공간으로서의 과방에서 '누구를 따먹었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 거북한 사태를 어떻게 타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결코 무시

할 수 없는 순간, 또는 가장 중요한 순간은 신입생을 맞이할 때 일 것이다. 다른 과방과 마찬가지로 B019 또한 학기초 많은 신입생들 한번쯤은 거처가는 공간이기에, 그 속에서 학회원의 재생산 직접적으로 고민하고 구상하지 않을 수 없는 23학년은 매시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공간에서의 많은 이데올로기 투쟁이 그러하듯이 면밀한 상황판단과 넉넉한 유머를 갖추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는 고리타분한 '조새'로 낙인 찍히는 것 이상의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가혹하리 만큼 명백한 사실이다. 물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뿐만 아니라 '과연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한 평가에서 또한 과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도 허다하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B019는 몇몇 신입생들에게 매우 폐쇄적인 공간으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현재 이곳에 남아 있는 많은 학우들 또한 한때나마 그러한 감정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기에 열려 있기를 바란다는 꿈지락이 폐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은 일면 모순적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지나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운동권/일반학우라는 투박한 도식이 드러내는 (사실 이 도식은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폐쇄성이 아닌, 우리와 같은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준비를 요구하는 정도일 뿐이라 믿기 때문이다.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지 않기에 그 벽이 너무나도 높아 보인다 하더라도 말이다.

결국 B019가 우리에게 나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곳이 정치조직을 위한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활동들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견해가 소용돌이치는 것을 넘어 몇 가지 정치적인 활동들이 제안되고, 몇 가지 태도들이 요구되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전적으로 B019라는 공간이 요구하는 문화 속에 녹아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를 뒷받침해주는 것은 이곳에서 활동중인 조직들이 아닐까 생각되어진다.

2. B019 구성하는 조직들

1) 신방과 학생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B019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조직은 신방과 학회 꿈지락과 신방과 학생회였을 것이다. 그리고 물론 그 둘은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 거의 같은 구성원을 가지고 있었기에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많은 학생회들이 그러하듯이 신방과 학생회 또한 신방과 학우들을 하나로 엮어 내는 역할을 밀도 있게 수행했다고 평가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각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그 정치적인 입장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경우도 매우 적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96년 말에 꾸려졌던 우중국 선본은 기존 학생운동과의 일정한 거리두기를 감행하는 대신 신방과내의 새로운 움직임을 구성 해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기에 이르른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움직임으로 지금까지 행해왔던 농활을 거부하고, 환활의 기획을 시도했었지만, 이 실험은 인적구성의 수적인 부족과 경험의 부족에 힘입어 실패로 끝나고 만다. 이러한 좌절을 경험한 집

행부 구성원들은 실질적으로 학생회 행사에 대한 부채감만 늘어갔던 것으로 보이며, 계속해서 줄어만 가는 구성원의 숫자와 맞물려, 종국에는 98년 학생회의 건설 자체가 학생회장에게 출마하고자 하는 96학번의 부재로 무산되고 만다. 그 후 98년 3월에 들어서며, 한 97학번 학우가 학생회장으로 출마하여 학생회를 꾸렸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B019와 같은 공간과 생활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97학번 몇몇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학생회를 꾸려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중심적으로 생각되어야 한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학생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을 학생회의 시각이 아닌 학회의 시각 또는 B019의 시각으로 교체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학생회라는 조직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해내려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를 얘기하고 있는 듯 보인다. 솔직히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파악은 되지 않는 표현들이지만, 아직은 그들 모두가 너무 바쁜 관계로 구체적인 상이 제시되어 있지 못하기에 이 자리에서는 많은 얘기를 풀어내지 못할 듯 싶다.

2) Beyond

이렇듯, 학생회가 조금씩 그 영향력을 상실해 가는 동안 B019내에서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몇 95학번 이상 여학우들은 96년 총여학생회 선거에 대한 불만을 반대표운동을 통해 드러내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때 함께 했던 구성원들은 그 여파를 몰아 97년 3월 세계여성노동자의 날을 맞아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를 정식 발족하기에 이르른다. 이때, Beyond의 구성원들은 신방과 학우들과 정의과 학우들이 중심을 이루었는데, 이때 흥미로운 사실은 Beyond에 참여하고 있었던 신방과 학우들은 모든 B019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생활패턴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정의과 학우 대부분은 정의과방을 많이 이용하기보다는 사회대 풍물패 터일방을 또는 신방과방에 자주 들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B019에서 생활하고 꿈지락 활동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97학번 여학우들은 Beyond활동을 접하고 있다.

3) 그래서...

매우 기술적으로 쓰여진 학생회와 Beyond에 대한 위의 설명은 지금의 B019 분위기를 그려보기 위해서는 다분히 필수적인 작업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현상이 현재의 꿈지락에 아니, B019의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정치적 활동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면, 일단 새로운 실험을 모색하고자 했던 97년도의 학생회의 시도(특히, 환경현장활동)는 큰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난 듯 보이지만, 이와 대비하여 Beyond의 경우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축적해내는데 성공한 듯 보인다. 이때, 이 기고문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한가지 의문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이러한 두 조직의 활동의 차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상이한 측면에서 접근하기로 하겠다. 첫째는 조직의 성격에 대한 것이며, 둘째는 그 조직이 행한 사업이 B019에 미친 효과에 관한 것이다. 사실 학생회와 Beyond라는 조

적을 도식적으로나마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학생회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조금씩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를 보이면서 화석화된 조직이 되어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반면, Beyond의 경우는 B019라는 공간 속에서 간헐적으로나마 끊임없이 소통되어오던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96년말의 '반대표 운동'이라는 구체적인 계기를 틔워 매우 '자발적'으로 조직의 형태를 구체화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Beyond라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측면이며 분명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어 질 수 있는 특성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B019내의 구성원들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구체적인 사안과 문제들에 대한 의사소통이 나름대로 실현되고 있었다는 것과, 동시에 그러한 소통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현실화되었다는 측면에서 더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두 번째는 Beyond에서 행했던 사업이 내적으로(B019 구성원들의 태도, 이 공간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현재 폼지락을 구성하는 97학번의 대다수가 Beyond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추해 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바, 즉 Beyond에서의 구체적인 활동이 그들을 보다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물론 동시에 B019라는 공간을 가꾸어 나가는데 있어서도 여타의 다른 학번들 보다 현재 남아있는 97학번들이 가장 정력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 두 번째 측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구성원들을 보다 정치적으로 구성되어지도록 강제하는 것은 역시 구체적인 활동 속에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고민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라는 사실이며, 그 속에서 구성되는 동기들간의 나아가 하나의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근거 있는 유대감이라는 사실이다.

이때, 우리가 한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Beyond에서 행했던 사업들이 B019라는 공간을 보다 정치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있는 반면, 학생회에서의 활동은 그러한 결과를 유발하지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이 두 조직간의 차이를 지나치게 과대포장하여, '자생적'이라는 단어를 맹목적으로 우상화하는 결과를 낳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 때문이다. 어떠한 행사의 효과가 보다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은 전적으로 행사가 어떠한 효과를 유발했는가의 측면이며, 이것이 학생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Beyond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는 지극히 우연적인 것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특정한 행사가 보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의 그 조직의 성격을 논할 수는 있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이러한 조건만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이제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말은 B019라는 공간에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곳을 기반으로 행해지고 있는 Beyond나 학생회의 입장과 의견을 끊임없이 접하는 과정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결국 이들의 활동이 B019의 문화, 폼지락의 문화를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즉 특정한 문화적 토양은 새로운 내용들의 소통을 만들어내는데 매우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기여를 통해 만들어진 소통과 활동들이 다시 한 번 우리들의 문화적 토양을 보다 비옥하게 만들며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질 경우에만 우리는 B019를 가능성의 장으로 사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여러 가지 의견들의 소통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들이 조금씩 사멸해가거나 신입생들이 이 공간 속에 적응하기를 거부할 때, 즉 여러 가지 실천들의 재생산과 학회구성원의 재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 우리는 비로소 '위기'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폼지락은 어떠한 모습의 '위기'를 가지고 있는가?

신방과 학회 폼지락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드러내기 위해 지금까지 상당한 부분의 지면을 신방과방(B019)에 대한 설명으로 채워 넣었으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작업은 이러한 B019속에서 과연 폼지락은 어디에 위치 지워져 있는가, 즉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인가를 설명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폼지락이 학회나 Beyond와 같은 조직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그 구성원의 재생산에 매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현재 학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학회가 저학번학회의 운영에 일차적인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현실과 크게 다른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1) 학회원, B019 구성원의 재생산

사실 매년 신입생을 맞이하고 나면, 모든 선배들은 작년 신입생들과 너무나도 틀리다는 말을 하곤 한다. 하지만, 이번 98학번들의 경우 지금까지 신입생과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들의 조건이 변화했다는 사실이다. 즉 사회과학대학이 계열화되면서 신문방송학과가 아닌 사회과학계열 3번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들어왔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의 갑작스런 대두는 사실 많은 고학번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 그 중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은 학점에 대한 집착이 '일학년 답지 않게' 강해졌다는 사실과 간헐적으로나마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하는 학우들의 모습도 가끔씩 발견되어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학회공부들, 학회생활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로 서로를 엮어주던 동기들 사이의 미묘한 유대감(사실 이 유대감은 매 학번마다 그들의 상황에 기대어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구성되어져왔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매우 심각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학점과 리포트에 할애하는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하는 시간과 공간이 많이 축소되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매우 치명적인데, 그것은 사실 계열화는 상황을 통해 보다 중독되었을 뿐, 사실 언제나 중심적인 문제로 거론되어 오던 것들이었다 할 수 있다. 결국, 같은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도, 그 내용들을 동기들과 선배들과 세미나를 통해 공유하고 그와 연관된 현실들을 술자리를 통해 조금씩 풀어 가는 과정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 자체를 잃어가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문화를 이해해주기를 원하는 선배들은 언제나 신입생들과 보다 많은 시간과 공간을 할애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언제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선배와 후배 사이의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동기들 사이의 관계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1학년 MT를 적극 유도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다. 그동안의 유대감이 어느 정도 정착해야 할 필요성은 사실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선배라는 존재들을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물론, 이들만의 분위기가 위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최소한의 전제와 어긋나는 것이라면, 이 경우 문제는

훨씬 심각해진다(참고로 학회 95학번의 경우가 그러했다고 평가되어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방식이 보다 효율적인 것을 넘어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조건이야말로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쓸데없이 묻지 않고 따지는 방식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으며, 그렇게 진정으로 다양한 의견들의 소통을 가능하게 조건지워 준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98년의 상황을 거론하자면, 2학기가 시작한 이 시점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보여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방이 그들에게 여전히 자신들의 공간이 아닌 것 같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98학번 사이에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으며(특히 다른 반에 속한 학우들 사이에서), 몇몇 98학번들이 함께 몰려다니며 그들만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분위기가 선배들과 적절히 공유되어지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에 바꾸기 위해서 현재 폼지락에서는 얼마전부터 Cyber-Space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중이다. 우리들은 사립지기라는 사회대전용 BBS에 폼지락 98학번의 대다수가 이 공간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Cyber-적거리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Q&A방을 개장을 맞아 새롭게 단장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과방에 놓여있는 적거리장은 선배들이 많이 사용하고, Cyber-적거리장의 경우는 98들이 대부분의 글을 올리기에 적거리장이 돌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보여주듯이 그 성과는 아직 미지수이다. 또한 적거리장에 올라오는 글들의 대부분이 아직은 너무나도 일상적인 신변잡기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도 가능할 듯 싶다.

2) 실천은 여전히 당위로서 존재할 뿐, 필연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학생회와 Beyond의 예를 통해서 이미 간략하게 언급이 되었듯이 구체적인 행사들이 B019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폼지락에게도 매우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우리는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Beyond나 새로운 학생회의 건설과 같은 노력들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는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 보인다. 오히려 너무나 지나치게 몇몇 행사들을 고집할 경우, 과거 학생회의 대부분의 달력식 사업들이 그러했듯이 관성적으로 고착화되어질 위험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답답한 벽과 맞닥뜨리지 않을 수 없다. 운동이라는 것이 또는 정치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스스로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를 기반으로하는 모임들의 연대라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어야 하겠지만, 우리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대다수의 학생들은 결코 정치적이지 않으며, 우리들은 이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B019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을까? 사실 B019의 역사를 살펴보다도 Beyond는 매우 특수한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하더라도 B019는 구체적인 운동의 정세나 그에 상응하는 실천들과는 매우 동떨어진 공간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소통만 되어지던 몇몇 이야기들이 조직의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소수 몇몇의 끈질긴 노력에 기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결론은 시작부터 주어져 있었는지 모르며, 그것은 아주 명쾌하다.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진정으로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실천들의 표현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되어야 하지

만, 이 부분은 그 누구도 낙관할 수 없으며 우리가 여전히 '가능성'에서 출발하고자 하는 이상 이 미묘한 불안은 결코 해결되지 못하고, 언제나 '과정'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결론이 명쾌할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라는 질문이 고개를 번쩍 드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 그래서의 부분에까지 명쾌한 답안을 제시할 능력이 없다. 사실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 갈 수 없는 이 질문을 우리는 얼마전 학회에서 벌였던 109주년 세계노동절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는 것을 통해 대신하도록 하겠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이러한 부분들을 공유해보자는 것이 아니었던가?

이번 행사는 사실 97년에 처음 행해졌던 108주년 세계 노동절 행사에 참가했던 것의 연속이었다. 작년 행사의 경우는 많은 97학번(당시의 신입생들)을 참여시키고픈 욕심으로 사회대 전체를 대상으로 행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인맥을 통한 몇몇 97학우들을 동원한데 그쳤을 뿐이었다. 또한 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토론회도 선배들(96학번, 당시의 2학년)의 분명한 역량부족으로 그다지 밀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당시의 척박한 상황은 430문화제를 참여하기 위해 하루 종일 서울 시내를 누비고서야 새벽 2시를 넘어 가까스로 고려대학교에 집결할 수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다음날 고려대학교 전체가 원봉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아찔한 경험을 한 97학번들은 이 행사에 대해 전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지 않았다. 이 순간까지 108주년 세계노동절 행사는 분명 커다란 불신만 심어준 행사로 끝났었다. 하지만, 이 행사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사후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정확히 1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97학번 학우들이 자발적으로 109주년 세계 노동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짚고 넘어가자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사후적인 평가'라고 표현했던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결코 평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즉 108주년 노동절 행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97년 동안 결코 많이 이야기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98년에도 97년에 이어 세계 노동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일년의 시간을 거쳐서 비로소 생성된 노동절에 대한 심정적 동의라는 내적인 요인과 함께 98년 IMF를 맞이하여 노동자운동의 중요성이 표면적으로 부각되었다는 외부적 요인이 적절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는 이 행사를 다시 되새겨보며, 금년의 행사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같은 날 같은 주제로 꾸려진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과 그 내용에서 결코 작년 행사의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몇 가지 노하우가 축적되었다는 것이 작게나마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금년의 행사는 작년의 엉성한 구성과는 다르게 매우 꼼꼼히 준비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신입생들의 평가 또한 매우 고무적이었던 것이다. 또한 미약하나마 노동문제를 학회원들의 시각으로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던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적했듯이 우리는 세계 노동절에 참여하는 것을 전봉으로 지나치게 고착화시키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계속되어 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동시에 내년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것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노력들은 언제나 '참가'의 수준을 넘어서기 힘들다는 것이다. 동시에 과연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현대자동차 투쟁과 같이 보다 직접적이고 '위험한' 문제에도 동참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물론 이번 행사는 다분히 일학년들에게 노동문제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노동자분들이 만들어 내는 행사에 참여해본다는 유용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이기는 했지만, 과연 세계 노동절에 참여하는 것과 비슷한 행사들이 계속해서 꾸려질 수 있는가를

비롯하여 보다 발전된 형태로 하나의 조직을 꾸릴 수 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하나의 조직을 새로이 만들어 낸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러한 활동의 중심은 분명 3학년 이상의 고학번이 중심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학우들은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동시에 학교에 남아 있는 학우들 또한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할 때, 그 누구도 감히 새로운 조직을 꾸리는데 적극 참여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문제이다. 학회생활을 통해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립하고 몇 가지 실천들로 견고히 해왔던 노력들이 과연 졸업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는 정말이지 그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이며, 현실 앞에서 더욱더 빈곤해지는 상상력의 한계만을 느끼게 해주고 있는 듯 싶다.

4. 꿈지락

이제는 지금까지 써왔던 흐름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현재 꿈지락이 하나의 학회로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언급해 보도록 하겠다.

1) 세미나-커리큘럼의 구성

아무튼, 학회의 가장 큰 골격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세미나에 대한 설명을 위해 현재의 커리큘럼이 어떠한 기초 아래서 짜여지고 있었는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자면, 일단 신입생의 커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상들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때 가장 개괄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계속해서 학회에 남아 세미나를 꾸려간다는 가정 하에서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부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들이 고학번이 되었을 때, 어떠한 공부를 계속하게 될 것인가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기에, 현재로서는 당장 진행중인 고학번학회의 커리와의 연계를 어느 정도 가만해서 짜여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당장 자기학번의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일학년 세미나와 일학년 세미나에 교사로 참석하기 위한 사전 세미나까지, 무려 세 개의 세미나에 참석해야 하는 2학년들의 부담을 매우 효율적인 방식으로 줄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법으로 정착되고 있는 듯 싶다. 특히, 일학년에서는 기초적인 것을 그리고 이학년이 이와 연관되는 주제로 보다 심도 있는 학습을 해 나아갈 경우, 이학년은 자신들이 현재 진행중인 세미나와 관련되는 주제를 일학년과 공유할 수 있기에, 사전 세미나를 매우 축약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이점과 동시에 스스로의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이점까지 바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년의 경우, 96학번들이 구조주의 팀과 비판이론 팀으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일학년들은 프로이트, 맑스, 베버를 간략하게나마 소화하는 방식으로 커리가 구성되었으며, 금년 이학기의 경우에는 97학번들이 시민사회론과 민주주의론을 공부하기로 합의 되었기에, 일학년 이학기 커리는 맑스를 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독해하고, 국가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간략한 개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때, 삼학년은 재주껏 자신의 세미나를 굴리며, 일을 분담하여 일, 이 학년 세미나에 관여하거나 학회 외부와 학회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주는 역할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아직 삼학년의 수가 부족하고, 그 내용이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기에 구

체적인 역할은 언급 할 수 없을 듯 싶다.) 이러한 이론적인 측면과 함께, 금년부터 일학년 일학기 커리에는 새로운 방향이 시도되어졌다. 일학년 일학기 커리의 기본적인 기초는 텍스트 속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하면서, 세미나를 통해 학습한 것들이 당장의 현실과 어느 정도 적절하게 조율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에서 짜여진 것이 여성, 노동, 환경이라는 '주제'에 관한 텍스트들을 찾아서 읽고, 3·8 세계 여성 노동자의 날, 5·1 May-Day, 그리고 가능하다면 환활을 이용하자는 계획이었다.

2) 고학번 학회의 정착을 위하여

학회의 활성화를 가장 현실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방편으로 언제나 거론되어오던 것은 역시 고학번 학회의 정착이다. 현실적으로 일학년 학회만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조차 너무나도 벅찬 현실은 분명 학회를 일학년의 학습을 위한 장으로 전락시켜버린 감이 없지 않아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세미나를 잃어버린 고학번들의 선택은 일학년학회를 위한 무절한 봉사정신으로 학회를 계속하거나 학회에서의 실질적인 활동을 그만두는 극단적인 두 방향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결과적으로 학회 자체의 질적인 하락을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였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된 것은 96년 말에 있었던 '학회통합'이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 그때까지 철학학회와 언론학회로 남아 있던 신방과내의 두 학회는 '꿈지락'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 때의 학회통합은 매우 장기적인 안목으로 결의되었던 사안이기에 아직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감이 있고, 또 모든 학회원들 사이에서 공통된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기에,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단서를 달고 몇 가지 비판을 조심스럽게 덧붙이고자 한다. 일단, 그 당시의 학회통합은 고학번 학회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었던 것으로 고학번들의 양적인 확대를 통한 일의 분담을 일차적 목표로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러한 시도는 현재 학회의 고학번들이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로 자신의 세미나를 돌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확보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많은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이러한 기획은 현실적으로 그다지 큰 성과를 안겨다 주지 못했다고 본인은 평가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학번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특히 그들이 세미나에 관여해야 하는 정도가 전혀 줄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일단 처음 시도되었던 것은 일학년 세미나에 격주로 들어가는 방법이었지만, 이러한 방법은 일학년 세미나의 큰 흐름을 끊어 버린다는 이유에서 재고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학회에서의 세미나가 단순한 학습의 장이라는 의미 이상으로 저학번과 고학번이 정기적으로 만나고 특정한 개념들을 공유해가는 과정이라는 측면을 생각했을 때, 일학년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작업들 중 하나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두 개의 학회가 하나의 학회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와 같은 수의 신입생을 받을 경우 여전히 일학년 학회를 두 개의 팀으로 꾸려야 했기에 그다지 큰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없었다. 결국 보다 많은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기획은 각 학회마다 하나씩 커리를 짜기 위해 할애했던 시간들을 이제는 하나의 커리큘럼만 만들어 내도 된다는 정도일 수 있는데, 이 또한 고학번 학회를 위한 커리를 짜야한다는 점에서 큰 이익을 보장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꿈지락의 경우는 작년부터 고학번학회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 학회통합이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살펴보면 위의 평가는

보다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듯 싶다. 적어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고학번 학회의 정확한 학회통합을 통한 시간적 여유를 기반으로 한다면 오히려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일학년 세미나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 세미나의 비중을 줄일 수 있었던 커리큘럼에 있었다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금년 일학기의 경우는 현재까지의 관례와는 다르게 일학년 커리의 난이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것으로 학습을 했었기에 이학년들이 일학년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 소모해야하는 시간을 많이 자신들의 세미나로 돌릴 수 있었다는 점도 있다. 또한 결코 무시 할 수 없는 것은 대학원에 진학한 몇몇 선배들의 보이지 않는 도움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특히 커리를 짜는데 있어 지대한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학회통합의 효과가 현재 고학번학회의 정착과 조금은 거리가 있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학회가 통합되기 전인 96년도에 남아 있던 고학번들의 수와 통합 이후 갑작스레 학회활동을 실질적으로 그만두었던 96학번들과 군대와 대학원 등의 이유로 학회활동을 그만두지 않을 수 없었던 96학번이상 때문에, 통합이전과 통합이후(96년도의 경우)의 고학번의 수는 실질적으로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정리하자면, 본인이 학회통합의 성과를 불신하는 근거는 통합이 학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방식을 제공해주지 못했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두 개의 학회가 (전적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학회로 바뀌게 된 것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결국 97년도에 들어 96학번들이 자신들의 세미나를 미약하게나마 꾸릴 수 있었던 것은 다분히 새로 대학원에 들어간 선배들의 노력과 97학번 세미나에 대한 약간의 책임방기(사실 97년도 일학년 세미나는 선배들의 미진한 준비 등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을 드러냈었다)에 의존한 바가 크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 풀지락 고학번들이 과거에 비해 보다 많은 활동들, 예를 들어 세계 노동절 행사 기획이나 대부분의 여학우들이 Beyond활동을 겸하고 있는 것,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150주년 공산당 선언 학술제 참가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때보다 고학번 학회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조건들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97학번들의 노력과 그들의 뛰어난 조직력의 대가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즉 현재 남아있는 97학번 다섯 명은(여학우 네명, 남학우 한명) Beyond활동이나 그 외의 공간에서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그들의 정치적 감수성을 획득해 왔기에 개별적으로는 이러한 성과들을 기반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다섯이라는 적지 않은 수를 무기(이때 97들의 양적인 확대는 큰 의미를 지닐 수 있어 보인다)로 그 어느 학번들보다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97학번이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단순히 개개인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들간의 유대와 생각들의 공유,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

5. 마치며....

긴 글을 쓰느라 잊혀졌던 처음의 문제의식을 떠올려 보면, 그것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었다. 첫째, 운동을 고민하는 지형의 고립, 이에 따른 구성원 재생산의 어려움, 그리고 직접적인 실천의 확보의 어려움. 과연 이 글이 이 세 가지 어려운 질문에 대한 나름의 대답을 제공하고 있는

지를 다시 묻는다면, 그다지 만족스럽지만은 못하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추상적인 수준의 답변 이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듯 싶고, 첫 번째 질문은 이 글을 통해 거의 이야기되어지지 못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첫 번째 질문의 경우 이 글의 구성 자체가 B019라는 공간의 문화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과 한계들을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에, 다분히 특정 문화와 그 속에 녹아 있는 가치들을 ‘이 공간에서’ 재생산한다는 최소한의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을 수 없다는 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물론 새로운 방식으로 학생회(학생회는 그 구조상 필연적으로 B019와의 학우들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만남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를 고민해보려는 노력이 현재 진행중이라는 간략한 언급이 있었지만, 여전히 풀지락은 B019라는 공간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있어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위에서 제시했던 폐쇄성과는 또 다른 폐쇄성을 풀지락이 가지고 있다는 함의를 받기에 충분할지 모른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은 편안한 파장을 뿜쳐나와 다른 학회들, 다른 공간들과 만나는 이번 학술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측면이기도 하다. 이 글을 통해 계속해서 담아내려 했던 풀지락의 구체적인 모습과 이에 대한 평가의 글이 이러한 목표에 한발자국 다가가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목숨을 건 도약

정치경제연구회 木下會

*상품가치의 상품체로부터 금으로의 건너뛰기는

목숨을 건 도약(Salto mortale)이다.

이 비약에 실패하면 상품이야 아무렇지 않겠지만

상품소유자는 확실히 심한 타격을 받는다.*

-『자본 1-1』, K. 맑스, 김영민, 이론과 실천, p.141 (MEW 120)

1. 들어가며

몇 년에 걸쳐 지겹도록 떠들어댄, 그래서 이미 약효가 다한 '위기'라는 말이 무색하게 학생운동의 위기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앞에서 진행 중이다. 나아가 학생자치활동의 잔뿌리를 이루던 조직, 공간들은 9년 가문의 벼포기처럼 시들어간다. 저 흉년의 태양은 언제쯤 질 것인가? 그러나 한탄에 앞서서 물을 댈 궁리를 해야 한다. 이 가문을 이겨낸 자들만이 언젠가 저 들판을 푸르게 물들일 만한 빛심과 적응력을 지니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학회가 안고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분석과 정식화를 시도하여 왔다. 그들의 수고 덕분에 우리는 학회가 처해있는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확하게 알고 있는 셈이다. 그렇게 관찰된 학회의 '위기'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역사적 조건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의도이다.

학회가 대학의 '우세종'이 된지도 10년이 넘었다. 그러나, 학회연합을 비롯한 공세적인 혹은 수세적인 대응들이 모두 사그러든 지금 학회의 자화상은 우울하기 그지없다. 서로다른 명패를 내걸고 있는 학술동아리들은 소수를 제외하고 1학년 교양학회와 그다지 다른 점을 발견하기 힘들다. 학회들은 고립분산되어 자족적인 활동에 만족하거나 친목단체로 변해가고 있다. 학부제 이후 얼마나 많은 학회가 사라져 갔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때문에 많은 활동가들이 "좋았던 옛날"을 그리워하며 원자화, 개인주의 등으로 애매하게 표현되는 지금의 대학에 절망하곤 한다.

신화화된 그 옛날의 기억을 되새기는 것이 현재를 극복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접어두더라도 그러한 향수는 무익한 것이다. 학생운동의 전성기에 만들어진 학회-학생회-정파의 구도와 주체형성방식이야말로 현재의 "위기"를 낳은 주범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한

철저한 역사적 반성이 없이 대안의 제출은 불가능하다.

다음 절에서는 학회에서의 활동가 재생산이 어떤 조건하에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그 조건의 변화가 학회에 끼친 영향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2. 학회-학생회-정파, 재생산 경로

정수복은 지식인의 이데올로기적 개종을 다음과 같이 일곱가지의 과정으로 구분, 서술한다.¹⁰⁾

- 1) 다양한 형태의 개인적 문제의식의 소유
- 2) 이러한 문제들을 체계적이고 총체적으로 해명하려는 욕구의 존재
- 3) 일상적인 해석체계에 대한 불신과 새로운 설명체계의 모색
- 4) 새로운 해석체계, 대항 이데올로기와의 접촉
- 5) 사회운동 집단의 동지, 선배들과의 정서적 유대의 형성
- 6) 사회운동 집단 밖의 사회적 관계망의 약화 또는 폐기
- 7) 사회운동 집단 내부성원들끼리의 집중적인 상호작용

그런데 학생운동을 처음 대면한 신입생에게 의미있게 부각되는 인간상 역시 '지식인'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대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 역시 '지식기사', '전문인'에 대비되는 비판적 지식인 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¹¹⁾ 따라서 위의 구분은 학생운동을 이해하는데도 상당한 유용성을 가진다.

우선 개인적 문제의식의 소유와 그 문제의식을 해명하려는 욕구는 대학에 와서야 비로소 개화하게 된다. 고등학교까지 그(그녀)가 겪는 일시위주의 폐쇄적인 교육 속에서 그들의 의식수준은 매우 왜곡되고 즉자적인 것에 머무르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온 이후 그들은 매우 강한 문화적 충격을 느끼게 된다. 그것이 광주일수도 있고 해방전후사, 전태일, 혹은 대학의 여러 행사와 시위들일 수도 있다. 혼란과 당혹을 안겨주는 이러한 지식, 사건들을 접하며 신입생들은 새로운 설명체계들을 욕구하고 학회를 통해 그것들에 접근해 간다.

다시 정리하면 명제 1)에서 4)까지의 과정이 주로 학회가 감당했던 부분이다. 신입생들의 대부분이 학회에 들어가고 학회활동을 통해 선배들과 유사친족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선배들은 좋은 책의 선정, 세미나, 일상적인 대화와 조언에 이르기까지 신입생들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를 통해 신입생들은 자기 안에서 탐들던 협소하고 실존적인 고민들을 역사와 사회에 이르기까지 확장하게 되며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감이 그 고민의 중심축을 이루게 된다.

명제4)에서 7)까지의 과정에서 신입생은 일종의 '인식적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¹²⁾ 그 단절이란 "이전의 연못의 물과 같이 고여있는 정체된 상태에서 강물처럼 흐르고 움직이는 상태로 바뀌

10) 정수복, 『의미세계와 사회운동』, 민영사

11) 김영철, 『80년대 대학생의 문화화과정』, 『학회평론』 7호

12) 강석필, 『학생이 있어서의 두가지 인식적 단절』, 『불림을 높여라』 창간호, 서울대 민중당 청학위

어지고, 방향없이 헤매던 상태에서 분명한 방향감을 갖게 되며, 홀로 고립되어 있던 상태에서 같은 이념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동지들과 강한 결속감과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상태이다. 그 순간 현실적 어려움과 고민에도 불구하고 해방을 향한 장정에 발걸음 하나 보태는 환희와 열정. 일단 여기서는 '개종', '단절'로 표현되는 이같은 가치체제와 세계관의 전면적인 전변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정리해보자.

첫째, 인식에 있어서의 단절은 삶의 근거에서부터 출발하기보다는 그에 대한 부정과 새로운 관념의 자기증식과정으로 현상한다.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그는 '주의자'가 된 다음에 활동가가 된다. 철학에서부터 시작하여 정치경제학, 전략전술론으로 나가는 세미나 커리는 여기에 조응한다.

둘째, 관념의 자기증식과정은 정파 혹은 그 외화된 형태로서의 학생회를 통해 현실성을 획득해 나간다. 이 관념체계는 그 자체로 완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정파에서의 활동은 그것을 더욱 폐쇄적으로 고착화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따라서 '활동'의 근거, 당위성은 (의식된 바로는) 이 관념의 논리회로부터 주어지며 현실과 계속적으로 충돌하기 마련이다. 이 충돌은 생산관계에서 유리되어 있는 학생운동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일면 정당성을 갖기도 하지만 사회를 전체적인 것으로만 상대하려는 편향을 낳는다.

'인식적 단절'을 통해 이제 학생들은 단절을 경험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뉘게 된다. 전자는 이제 건강한 활동가로 성장하게 되며 그중 대부분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생회로 정파로 활동공간을 바꾸어 간다. 또 그들이 주로 학회에서 후배들을 다시 자신들이 밟았던 경로로 이끌어간다. 학회활동을 하는 분명한 목표와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은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적극적이다. 후자의 경우 자신이 선택한 다른 삶의 경로를 위해 학회를 떠나기도 하지만 대체로 학회에 남아서 선택의 역할을 해나간다. 그들은 전자의 '지지줄'이 된다.

이것이 80년대 후반을 거쳐 만들어진 학회운동의 '완성'이다. 여기서 학회의 위치와 역할은 첫째로 활동가 재생산의 장, 둘째로 각종 실천활동(집회, 시위)의 동원 단위로 암암리에 규정된다.

3. 학회운동의 몰락

대체로 위에서 서술한 학회-학생운동의 구조는 그 기본줄기가 90년대 중반까지도 이어져 내려왔으며 지금까지 잔존해 있기도 하다. 따라서 학회운동의 파산에는 외적으로 대학사회의 변화와 내적으로 학생운동의 무능력이 작용하였다고 하겠다.

학생회 연합체가 학생운동의 맹주가 되면서 학생회선거는 정파들의 주도권다툼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학회에 대한 정파의 장악력은 갈수록 높아져 갔다. 재생산의 장이자 동원단위로서 학회의 중앙은 갈수록 심해졌다. 그 속에서 학회는 의미있는 몇가지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대한 설명력, 대응력이 갈수록 약화되었고 새로운 신입생들을 짓누르는 소비주의와 학점 중심주의에 대해 제대로 반응할 수가 없었다. 그동안 신입생들은, 그리고 대학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는가.

우선 대학생들의 집안환경은 갈수록 중류층 이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또, 그들이 받은 교육은

지극히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반발심을 느끼지만 한편으로 그 교육의 실증주의적 전제들은 대체로 의심없이 받아들여진다. 교육 외에 대학생들이 입학이전에 충분한 인격적 수양을 쌓거나 비판능력을 훈련받을 기회는 전혀 없다. 그런 생활 속에서 그들은 대중문화의 홍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익숙해진다. 문화적 취향 및 생활의 지향점은 매우 다양화되는데 그중에는 그것 자체로 어떤 사회적 인식을 내부에 담아낼 수 없는 것이 많다.¹³⁾

하늘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 등록금을 주로 가족에 의존하고 성년의 통과례를 늦게 거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으며, 독립성에 대한 강한 열망 때문에 이를 불만스럽게 여기면서도 막상 그 불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그들은 손꼽히는 명문대에 입학했고 그때까지의 입식교육에서 수위를 달려온 학생들이다. 좌절을 경험해 본 적이 드물기 때문에 그들은 자의식과 자신감이 강한 편이고 외부세계의 복잡함과 모순성에 직면했을 때에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들의 경험세계는 가정, 학교, 교우관계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며 고단하고 위험한 육체노동과 같은 경험을 거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학생들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기 보다는 사물의 논리를 재구성하는 것을 통해 그것에 접근해간다. 이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겪는 최초의 문화적 충격이라면 예전처럼 '말빨세고 신념에 가득찬' 선배나 공권력과 충돌, 제도교육과 180도 뒤바뀐 지식들에서 느끼는 속았다는 감정같은 것이 아니라 갑자기 들이닥친 주체할 수 없는 자유와 대학생활의 일상성이 주는 실망일 것이다.

그들의 생활공간은 분절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 분절화는 공적 교육구조와 학생들의 경험세계 사이의 괴리에 조응하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강의, 외국어 학원 등의 생활공간과 학회활동은 서로 다른 공간이며 그의 세계를 구성하는 여러 공간중의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학회는 '강의실에서 들을 수 없는 지식을 전수받는 곳', '세미나하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들에 떠밀려가면서 이제 학회를 규정짓고 추동하던 급진성과 운동성은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다. 현실을 청산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으로서의 학습이 아니라 교양의 습득과 책임기의 즐거움이 학회활동을 유지시키는 추진력이 되고 있다. 물론 그렇게도 학회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과거의 정의에 비추어본다면 학회라기보다 친목의 요소가 강화된 스터디그룹에 더 가깝겠지만.

▶ 가능성 하나 - 주체실천형 학회

따라서 학회가 아직도 정치적이고, 또 운동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학회의 다른 가능성을 발견해내고 현실화시켜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주체실천형 학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미 제시된 하나의 가능성인 것이다.

▶ 가능성 둘 - 대학교육에 대한 급진적 문제제기 집단

"교육이 가치로울 수 있는 유일한 점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해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의미에서이다. 학교의 임무는 선동이 아니다. 학교의 본분은 위험하고 병든 세계

13) 90년대 들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동아리, 소모임의 대부분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전형적인 것으로 광고동아리)

를 계획시키기 위한 지식·기술·개념들을 사람들에게 준비시키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교육의 과정(process of education)과 해방의 과정(process of liberation)은 같은 것이다.¹⁴⁾

4. 학회, 들여다보기

4-1. 세미나에 대한 반성

3명의 학우가 앉아있다. “왜 이렇게 안와?”, “나도 바쁜 사람인데 시간을 이렇게 안 지키면 어떡하나?”, “OO형도 아직 안왔네!” 잠시후 한 명씩 띄엄띄엄 등장한다. 드디어 학회교사 등장. “아, 애들아 미안미안, 자 시작하자, 책 다 읽었어?” 서로의 눈치를 살핀다. “저, 어제 늦게까지 술을 마시느라구요, 2페이지 밖에 못 읽었어요.”, “책을 어저께 샀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읽었는데 아직 반밖에 못 읽었어요.”, “그럼 발제를 시작하자.” 하나씩 떠들떠들 줄발제를 하고 빠진 부분은 교사가 보충한다. “자 그럼 문제제기 해봐.” 모두들 고개를 꼭 숙이고 책장을 뒤적거리며 무언가 열심히 찾는다. “문제야 문제야 어딴니?”, 한참동안 건디기 힘든 적막이 흐른 후 한 아이가 입을 연다. “저기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응! 그것은 ...잘잘잘...” 약 10여분만에 걸친 교사의 연설이 끝났다. 아까보다 더 무거운 적막이 흐른다. 이후 교사의 질문, “너희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니?”, “잘 모르겠어요.”, “나쁜 것 같아요.”, “쉽게 결정내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등등.

모두가 모이기까지 1시간 30분, 1시간 가량의 발제시간, 약 1시간 동안의 토론, 그 중의 1/3은 침묵, 1/3은 교사의 연설이었다. 이렇게 세미나가 끝나고 평가의 시간이다. “다음부터는 안 늦을게요.” “책을 잘 읽어올게요.” “그런대로 잘 된 것 같아요.” 한마디씩 하고 뒷풀이로 간다.¹⁵⁾

이 글은 벌써 8년전의 학회의 모습을 적은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적힌 세미나 풍경이 갖는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은 8년 후의 우리를 위해서도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세미나에 대해서 학회교사들이 갖는 어려움은 크게 두가지 원인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교사가 위에서 적은 문제점들을 의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역량/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미나를 적절하게 준비, 개입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학회원들이 주제와 관련한 특수한 개인적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사회적 고리들과 연결시키지 못할 때 대화가 공전되거나 독백이 되기 쉽다. 이때 교사가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할 경우 대화의 매개를 찾지 못하거나 정해진 결론으로 쉽게 이동해가게 된다. 이것은 학회론을 공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학습주제에 대한 일정 수준의 교양, 학습목표와 그에 도달하는 경로로서 학습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훈련의 문제이다.¹⁶⁾

14) 양리 지루, 『교육이론과 저항』, 성원사

15) 90년도에 서울대 대동계에서 공연된 촌극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인용은 교지편집위원회, 『살속에 뿌리내려 투쟁으로 열매맺는 학생회』, 『관악』 91년 여름 p. 36-37

두번째 문제는 매너리즘이다. 학회에서 하는 다른 활동들이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세미나에 과부하가 걸리다보니 세미나를 별달없이 진행하는 것에 온통 마음을 쏟게 되고 주위의 다른 학회들을 봐도 우리 학회와 별로 다를 것이 없고, 더욱이 학회가 항상 위태위태하게 운영되다보니 세미나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별도로 공부할 엄두를 내기 어렵다. 고학번 학회가 없는 이상 물어볼 선택도 흔치 않고..., 그런데 이 두번째 문제는 더 심각한 결과와 연결되어 있다. 학회 학습이 그 학습과정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기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의 문제로만 사고될 때, 학회는 제도교육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학회가 진보적인 학습의 장이라고 할 때 그 말에는 학회가 보수적인 교육의 틀에 항상적으로 의의제기를 시도한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다. 진보적인 학습의 장으로 학회가 가지는 특질을 세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자.

▶ 커리큘럼으로서의 교사 : 커리큘럼은 단순히 세미나에 사용할 책의 목록정도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학회에서 커리를 쓴다는 것은 “학회원들이 실제로 무엇을 학습하고 경험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 학회교사는 어떻게 세미나를 운용할 것이며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까지가 구체적인 세미나 진행과정속에서 계획되고 실행되고 다시 그 결과를 평가하여 피드백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학회원들과 학회교사, 그리고 세미나 내용이 세미나 진행 과정속에서 지속적인 상호연관에 놓여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커리를 쓴다는 것과 커리를 운용한다는 것이 분리될 경우 세미나가 잘 굴러갈 턱이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¹⁷⁾

따라서 교사는 살아있는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 있다. “잘된다”는 학회가 많은 경우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난 학회교사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교사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학회에서도 그 역량이 제대로 전수되는 경우는 드물다. 무엇보다도 그 학회교사 자신도 체계적인 전수를 통해서 역량을 쌓은 예가 드물기 때문이다. 기술이 아닌 공부하는 방식의 체계적인 전수, 그것이 우리의 과제다.

▶ 과정으로서의 학습 : 학습은 정해진 결론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내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목적없이 자생성에만 기대는 것도 아니다. “어설론 설교와 설부는 재단”을 대체한 것이 “현학적인 관심과 방향없는 표류”라면 그것 역시 대안일 수는 없다. 형식 문제는 시대정신과의 교감 이되 그것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에 의해서, 학습을 통해 재구성되는 것이고, 그 재구성의 끝까지 않는 이야기로서 학습이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는 학습이 이데올로기 투쟁의 공간임을 의미한다.

▶ 대안적 질서를 찾는 교육형식 : 많은 세미나들이 활발하게 발언하는 사람들과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로 구분된다. 왜 그럴까? 주의깊게 관찰해보면 세미나는 특정한 ‘언어’를 배제하며 이루어진다. 자신의 감정같은 것을 숨아내고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일반화, 추상화시켜서 일관된 논

16) 1학년 세미나의 진행을 주로 2학년들이 떠맡게 되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80년대의 학회들의 경우 3,4학년 이상이 1학년 세미나를 맡았다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17) 학회평론 편집부, 『학회와 세미나 그 교육학적 반성을 위하여』

리로 표현하는 식의 발언들이 세미나 속에서 암암리에 요구되고 그런 능력이 뛰어날 수록 더 많은 발언과 더 많은 존중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자신의 삶과 무관한 관찰자의 시선에서 지식을 습득/조작하도록 한 입시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조혜정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자.

흥미롭게도 학생들은 추상화 수준이 높으면 그 나름대로 쉽게 소화하는 방식을 갖고 있다. 구태어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 볼 필요없이 공식을 외우듯 머리 속에서 처리해 버리는 것이다. 사실상 이것은 입시 위주의 교육 체제에서 숨쉬듯 해오던 것이라 이 치열한 입시전쟁에서 살아남은 학생들은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어려운 텍스트를 고덕없이 요약해낸다. 물론 이것은 전혀 바람직한 학문하는 방법이 아니나 학생들 자신이 무엇인가 어려운 것을 배웠다는 뿌듯한 느낌을 갖기에 충분하다. 대부분의 사회과학 공부가 지금까지 그런 재미 속에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¹⁸⁾

이것이 일반화, 추상화 능력이 필요없다는 이야기는 물론 아니다. 그러나, 비판적 추론양식이란 1차적으로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생애(biography)와 의미체계를 탐구할 수 있도록, 나아가서는 그들의 삶에 압력을 가하는 구조적, 이데올로기적 힘들에 대해 스스로 자각하고 해방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야 한다. 학회는 해방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해방적으로 공부하는 장소라야 한다.

4.2. 실천활동 - 학회의 잃어버린 고리

학회에 대해 언급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실천-학습의 연계고리 상실이라는 문제이다. 단순히 실천활동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보다는 실천과 학습을 연결시켜주는 요소가 — 머릿속에서든, 물질적으로든 — 사라져버린 것이다.

실천의 교육적 효과란 무엇인가. 모든 실천활동은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을 과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제기된 주제, 주장을 광범위하게 선전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 목적을 위해 스스로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그러나 스스로를 변화시키게 된다. 앞서 서술한 80년대 후반의 의식화 경로에서 집회/시위가 갖는 교육적 효과를 생각해보자. “교문싸움의 과정에서 신입생은 교문을 뚫고 나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낀다. ... 그렇지만 신입생은 구호, 노래, 숨막힘, 긴장, 격렬, 좌절, 초조함, 적개심 등의 행동과 느낌을 통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¹⁹⁾ 이때 집회는 두가지 효과를 가진다. 먼저 정당성없는 국가권력의 폭력적 상징과의 충돌, 출세지향적이고 경쟁적으로 틀어쥐진 지배질서로부터의 벗어남과 개방의 느낌. 중요한 것은 “교문을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다. 꺾이지 않았어도 공연히 움츠러들게 만드는 가부장적인 국가의 권위에, 동료들과 함께(!) 맞서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지금의 집회/시위가 이같은 구실을 하는 경우는 소수일 뿐이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학회에서의 학습과 집회/시위가 긴밀한 논리적, 현실적 연관을 갖는다는 것이 더

18) 조혜정, 『글읽기와 삶읽기』, 또 하나의 문화 p21

19) 김영철, 『80년대 대학생의 문화화과정』, 『학회평론』 7호

이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주된 이유가 된다. 다층적인 사회적 적대들의 존재, 거리의 정치의 효력 상실의 덧붙여질 수 있겠다.

사실 이즈음의 학회에서 신입생들이 집회(혹은 실천활동)에 대해 보이는 입장은 보통 “아직은 잘 모르겠으니 충분히 공부해 본 뒤에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에는 대학생의 이론지향적인 면모가 한 이유가 된다. 또, 집회를 비롯한 실천활동들이 대체로 신입생에게 자기 결정권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주체로서 직접 만들어가며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없는)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할 경우에도 신입생들은 학생운동의 낯은 관습처럼 유지되어온 규모의 정치—대중 동원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가 갖는 억압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학회에서 이론과 실천의 상보적 관계가 다시 복원되기 위해서는 학습의 정치적 성격과 실천의 교육적 성격이 (광의의) 커리큘럼 속에서 하나로 만나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그 이론과 실천의 접점을 특화시켜서 구체적인 영역에서의 실천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앞서 서술한 <주체실천형 학회>로서 학회의 대안일수도 있겠다.

학회가 목적하는 자기성찰은 자기의 성찰이면서 동시에 자기에 대한 성찰로 존재할 때만 의미를 갖는다. 자기에 대한 성찰은 스스로를 주제로 했을 때에만 진정한 성찰성을 획득할 수 있고, 타자에게 끊임없이 스스로를 개방하는 과정을 생략한 성찰작업은 독단의 위협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스스로의 전 존재가 총총하게 짜여진 사회적 모순과 질곡 속에 얼마나 튼튼하게 얽혀져 있는지를 느끼지 못한 채 예정된 경쟁과 지루한 일상 위로 미끄러진다면, 세미나가 그 가벼움위에 얹힌 것일 하나 이상이 될 수 있겠는가?

5. 학습의 정치와, 실천의 교육학

5.1. 학회지원센터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학회운동의 내외적 변화에 따른 세미나의 질적 저하, 학습-실천의 연결고리 부재—을 개별 학회에서 극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학회의 집행단위는 대체로 2학년들로 짜여져 있고 그들이 다른 단위와 교류하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

도움이 될만한 곳이라면 학생회 학술부이겠는데 1년단위로 구성원과 축적된 결과들까지 교체되는 상황에서 학술부가 학회에 대한 장기적인 사업계획이나 실사를 진행하기는 불가능하다. (2학기부터는 사실상 활동이 정지된다는 점도 덧붙일 수 있겠다.) 정의/정치조직은 이미 학회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을 공유하기에는 너무 먼 곳에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학회에 대해서 장기적인 연구, 조사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 그에 기반해서 학회의 생존전략을 입안하고 그에 기초한 지원사업을 펴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지원단위의 건설일 것이다.

학회지원센터의 상은, 비유하자면 연구/실험실 겸 전화국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학회에 대한 자료, 커리큘럼을 축적, 유통시키고 학회교사들을 교육시켜주며 실천적인 프로그램들과 연동시키는

것이 그 기본적인 작업이라면 학생사회에서 학회의 역할과 위치, 생존방식, 발전가능성을 연구하고 새로운 학회활동의 상을 광범위하게 고민, 실험하는 것이 지원단위가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필요성이 조직을 건설하지는 못한다. 사실상 핵심적인 문제는 학회지원센터를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건설,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가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다. "아무도 모른다." 수년전 학회연합의 건설이 시도될 때의 인적 자원과 개별 학회들의 호의적 관심, 참여, 이런 것들조차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 뿐더러, 학생운동 정파나 학생회에서 기대할 것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우기 학회연합을 괴롭혔던 문제, 연합체운동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자를 한해마다 주체가 바뀌는 학생자치단체의 사이클에서 어떻게 발굴 육성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학회지원센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서 지원센터는 자신의 상품성을 증명해야 한다. 그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도약"이 될 것이다.

다만 몇가지 예비작업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

5.2. 실천과 학습의 재구성, 약간의 몽상

여기 적는 것은 어떤 이에겐 이미 진부한 타령일 수도, 또 어떤 이에겐 실현불가능한 그야말로 몽상에 지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학회활동가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이 온전한 의미에서의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할 때, 부족하나마 생각해볼 수 있는 참고사례로 적어본다.

▶ 강의평가 — 전공학회의 경우

'가방줄이나 사람줄이나'를 놓고 다루는 수강신청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학보에서도 다룰 정도가 되었다.(연세춘추 9월7일자) 그러나, 회선의 증가나 사전 수강신청제 등이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강신청의 문제는 사실상 들을만한 강의가 없다/모른다는 문제이다. 대학의 공적인 교육구조는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완고하고 보수적이고 학생들과 단절적일 뿐더러, 학생들의 참여를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화된 강의평가는 사실상 그 제도에 대한 회의 이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있다. 내용이 공개되지도 않을 뿐더러 평가 항목도 그 과목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이나 정보를 주기에는 지극히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공적인 교육구조와 학회를 비롯한 비제도적 교육공간은 아무런 대화통로도 없이 단절되어 있다.

필요한 것은 '강의에 대해서 내맘대로 떠들기'이다. 상상해보자. 꼭 강의평가가 정식화된 설문 문항에 따라 다수 학생의 의견 청취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강의를 듣는 학생이 스스로 평가항목을 만들고 글을 써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발표하면 그게 바로 강의평가가 아닌가? 학생들마다 평가의 잣대가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어떤 학생은 교수의 정치적인 성향을, 또 다른 학생은 더많은 수업참여기회를, 또는 교재 선택방식이나 학점 평가의 기준을 문제삼을 수도 있다. 학생들이 학점 잘 주는 수업에만 몰린다면 그대로 솔직하게 적어야 한다. "나는 취입이 절박하기 때문에 학점이 제일 중요하다. 따라서 좋은 강의란 학점이 후한 강의이다." 바로 여기! 어떤 강의를 좋은 강의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평가가 꼭 강의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사회학과 수업을 전공으로 듣는 나간

은 경우에는 수강편람을 펴면 일단 몇몇 교수님들의 수업은 일단 제외하고 수강신청을 시작한다. 떠들어 보자. 아무개 교수님은 퇴출시켰으면 좋겠다고, 혹은 이런 과목이 이리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그리고 학회에서 토론해보자. 수강할 과목을 같이 정하고 수업내용에 대해서 같이 평가하고 통신이든 대자보든 그 내용을 공개하자.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평가를 쓰게 만들자. 이런 인신공격도 버릇없음도 아닌 당연한 학습권의 실천이다. 대학의 숨막히는 권위주의와 침묵을 뒤집어 버리자. 대학은 교수들의 '양로원'이 아니다.

▶ 주제별 학회교재 발간 — 주제실천형 학회의 경우

대학생들의 세미나 내용이 책으로 출판되던 시절이 있었다. 출판이 '운동'으로 지칭되던 때, 대학생이면 누구나 '껍데기를 벗고서'라든가 '철학에세이'같은 교과서로 대학생들을 시작했다. 역설적인 것은 서점마다 책들이 홍수를 이루는 요즘, 오히려 인식과 실천의 접합을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책들을 찾아보는 것이 더욱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교과서'들이다.

대학생용 인권교재, 불심검문 반대용 교재, 환경운동 교재, 언론비평 교재, 여성운동 교재, 북한동포돕기운동 교재, 기타등등..... 무수히 많은 분야가 아직도 미개척인 상태로 남아있다. 꼭 대학생용일 필요도 없다. 교재를 만드는 과정자체가 훌륭한 세미나가 된다. 환경운동 교재를 만든다면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 '지구를 살리는 50가지 방법'같은 당장의 실천방안을 중요시하는 캠페인성 교재인가? 환경파괴의 구조적 정치적 성격을 강조할 것인가? 혹은 연극대본을 만들어보거나 세미나 내용을 대화형식으로 정리해서 포함시켜 볼 것인가? 혼자 하기 힘들다면 관심이 있는 다른 단위와 함께 교류하고 연대하자. 사회단체와 함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학회원들이 성큼 성장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소중한 성과가 될 것이다.

▶ 교육극, 세미나에 대한 반성

브레히트의 교육극은 아마추어 연기자라 연기실천이라는 자기학습의 과정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자세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객 없이 자기자신을 위해 연기'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객은 존재하지 않으며 고정된 대본도 없다. 모든 연기자들은 모든 배역을 교대로 맡아서 연기한다.

이 교육극의 형식은 현재 학회에서 이루어지는 세미나 형식이 갖는 교양중심의 평론가적 한계를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세미나가 꼭 과방에서 책읽고 토론하는 식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 않은가. 대학 4년간 진보적인 이론을 공부한 사람보다도 철거현장을 한번 다녀온 사람이 오히려 더 치열하고 건강하게 자신의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일상에서의 경험이 '철거촌'이 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일상을 철거촌처럼 '낯설게' 바라보는 경험을 학회에서 제공하는 것의 문제이다.

대학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유령을 불러와서 대면시키는 것, 그리고 학회원들이 교대해가면서 그 유령들의 역할을 연기해 보는 것은 어떨까? 중요한 것은 '낯설게하기(Verfremdung)'의 문학이론을 학습하기 이전에 '낯설게하기'를 경험하는 것이며 그런 한에서 교육적 실천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 뒷풀이, 일상에서 출발하는 문화적 기획

과거의 학회활동에서 혹은 신입생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강요하다시피 술을 마셔대는 것은 통과례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통과례는 다시 밤을 새우는 대화들로, 하나됨을 확인하는 장으로 대학내내 이어진다. 그러나, 갈수록 뒷풀이는 다음날의 '외국어학당'과 밀린 리포트를 걱정하는 '합리주의파'와 전설적인 술꾼 선배들을 추종하는 '먹고죽자파'가 충돌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간다.²⁰⁾

뒷풀이의 의의는 "평소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삶의 고민들을 열린 대화, 관계맺음의 장 속에 푹 떨어놓음으로써 '함께 길을 가기 위한' 연대의 끈을 확인하는데 있다. 하기에 뒷풀이는 앞으로의 학회활동과정 속에서 무엇으로든 채워지고 복원되어야 할 공간이다."²¹⁾ 그렇다면 뒷풀이는 문화적 기획으로 사고되어야 하지 않을까? 밑의 글은 아주 작은 시도하나가 뒷풀이를 전혀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모임은 어떤 것보다도 성원들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 마음을 탁 터놓고 자신의 고민을 말할 수 있는 진지한 분위기가 꼭 필요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한 곡씩을 부르고 그 노래를 좋아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어릴 적을 회상하며 동요를 부르는 이, 자신이 걸어온 길을 일대기적으로 늘어놓은 이, 대학에 들어온 후의 현재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사람, 재수할 때의 외로움을 이야기하는 사람 등등. 자발적인 이야기 분위기 조성이라는 목표를 넘어서 서로 가슴 훈훈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6. 마지막 - '절망을 쏘아올리면 희망이 온다'

이상의 서술을 통해 우리는 학회운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 미래에 대해 거칠게 훑어보았다. 마지막으로 학회간 연대가 행사 중심으로 사고되거나 조직화를 우선하여 제안되는 것(일단 모여서 고민을 나눠보자?)에 대해서 몇가지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학회들이 안고있는 문제가 내부적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학회연합, 혹은 그와 유사하게 어떤 그림표를 미리 상정해놓고 거기까지 가면 문제가 해결될테니 일단 역량을 모아보자고 하는 것이나 학회들이 어려움을 나눌 행사를 열어서 거기서 고민을 나누어보자고 하는 제안은 그렇지 않아도 쇠진해진 학회를 더 힘빠지게 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러한 외구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대체로 경험적인 것인데 "일단 모여보자"고 해서 준비없이 모인 학회활동가들이 연대의 이익을 발견하기 보다는 자기 학회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기가 일쑤이고, 새로운 행사를 기획하는 것은 일정에 대한 강박속에 새로운 부담을 하나 더 얹어주는 것으로 끝나곤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학회에 대한 외부적 개입이 필요하다면 '비판가

20) 과거의 뒷풀이 문화는 아주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식으로는 절대 이해하지 않길 바란다. 과거의 뒷풀이도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중에는 지금과 별 차이없는 문제들도 있었다.

다만 뒷풀이라는 형식이 오랜 세월 사랑받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려는 것 뿐이다.

21) 김진욱, 「뒷풀이 문화, 새로운 전복의 기획을 향하여」

능한' 분석과 계획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지점에서 개입과 지원 능력을 입증해 보여야 할 것이다. 학회 위에 옥상옥(屋上屋)을 짓는 식의 발상은 관료적인 해프닝으로 끝나기 쉽다.²²⁾

이 글의 한계는 위에서 비판한 움직임들보다 더 명확해 보인다. 개인적인 단상에 주로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나마 대안으로 제시된 지원단위 역시 당위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회들이 저마다 천차만별의 구성과 활동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히 준비하지 않고 서야 일반론을 벗어나기 힘들겠지만 굳이 덜익은 글을 써내는 것은 발판이 있어야 도약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 글이 비판을 통해서든 풍부한 통찰을 통해서든 최소한 학회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발판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너무 늦었다거나, 학회라는 놈이 이 글에서 그려보이는 휘황찬란한(?) 미래로 갈 희망은 아무데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다음의 글귀를 권하고 싶다.

"현자(賢者) 코이너씨는 어떤 계곡을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두 발이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순간 자신이 걸어가던 그 계곡이 사실은 바다에 접한 만(灣)이며 밑물이 밀려올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즉시 발을 멈추고 혹시 배가 있는가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배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곱팍팍고 서 있었다. 그러나 배라고는 전혀 시야에 들어오지 않자 구조받으려는 희망을 포기하고 물이 더이상 올라오지 않기만을 바랐다. 물이 턱까지 차 올라왔을 때에야 이 희망마저 포기하고 헤엄치기 시작했다. 그는 그제서야 자신이 한 척의 배였음을 깨달았다." -베르톨트 브레히트, 「코이너씨 이야기」

물이 목까지 차오르는 막막함 속에서도 다시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보자. 나는, 우리는 스스로 배가 되고자 얼마나 노력했는가, 졸업장 공장으로 화해가는 대학에서 무력하게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지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스스로 배가 되고자 하는 노력에 앞서는 모든 희망과 절망은 한낱 선부른 몽상에 불과할 것인데, 항상 그렇듯이 미래는 실현되지 않은 현재일 뿐이기 때문이다.

22) 그간 이루어졌던 학회연합 시도들 중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성과를 남긴 서울대 '과학기술 학회연합'의 경우 왕성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3년만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과기학연에서 일했던 88학번의 평가) 첫째, 단위의 학습과정이 과기학회라고 해도 일반 학회와 별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독자적인 주체형성과정이 부재했다는 점, 둘째, 과도하게 단위 학회에 기반하려고 하여 "불안정하고 사정이 각양각색인" 학회들과 불균형을 빚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영문 글-1)

자치와 연대를 위하여...

제 35대 문과대 학생회

"만약 당신이 나를 도우려 여기에 오셨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가
당신의 해방이 나의 해방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함께 일해 봅시다."
- 멕시코 치아파스의 어느 원주민 여성 -

지난 2월 18일 - 2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약 300여명의 세계 민중, 노동운동가들이 모여, "자유무역과 세계무역기구에 반대하는 지구적 민중행동" 제1차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 국제회의의 연원은 1996년 멕시코 라칸돈 정글에서 열린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와 인류를 위한 제1차 대륙간회의"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멕시코 치아파스주의 원주민운동체인 '사파티스타'는 1994년 1월 1일, 북미자유무역협정(NFTA)의 발효를 계기로 봉기를 일으키면서, 사회주의권의 몰락이후 절망과 패배감 속에 빠져있던 전세계 민중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제공했다. 자치(self-governance)와 연대(solidarity)라는 새로운 정치적 정수, 초국적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항하는 전투적인 투쟁, 그리고 전세계 민중들에 대한 '연대투쟁'의-도와달라는 것이 아닌, 함께 투쟁하자- 호소는, 그들을 멕시코의 어느 한 지역에 존재하는 '원주민운동체' 이상의 의미를 갖게 했다. 이들은 일견 모순될 수도 있는 두 개념, 자치와 연대를 지난 수년간 실현해왔다. 자신들의 자치만이 아니라, 멕시코 및 전세계의 수많은 공동체들의 문화적, 정치적 자치를 옹호하고, 그들의 고통이 자신들과 다르지 않음을, 같은 연원을 갖고 있음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연대'를 호소하고 실현해왔다.

이러한 정치적 정수는 1996년 라칸돈 정글에 모인 수천명의 전세계 민중운동가들에 의해 확인되었고, 이듬해인 1997년 스페인에서 제2차 대회가 열렸다. 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및 자유무역협정들에 반대하는 전세계 민중운동전선의 투쟁과 저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조정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제조직'이 아닌 '국제적인 조정기구(네트워크)'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

한 역사 속에서 탄생한 네트워크가 '자유무역과 세계무역기구에 반대하는 지구적민중행동'(Peoples' Global Action)이다.

제1인터내셔널에서 맑스주의에 의해 무정부주의자들이 축출당했으며, 제2인터내셔널(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은 코민테른(제3인터내셔널)과 분화되었다. 코민테른은 전세계민중들의 저항을 촉진하고, 그들 삶을 위한 투쟁을 적극 지원하기보다, '사회주의 조국 방어'라는 이데올로기 속에 세계민중들의 투쟁을 억압하고 말았다. 이러한 역사는 보다 강력한 이데올로기, 보다 강력한 중앙집중식 조직이 국제연대투쟁의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인가라는 물음에 심각한 회의를 갖게 한다.

지구적민중행동(PGA)은 철저하게 '탈중심(decentralization)과 자율(autonomy)'을 운영의 기본원리로 한다. 지방적 수준, 민족국가적 수준, 문화적 수준 등 모든 수준에서의 공동체들의 자율과 자치를 옹호하고, 그것을 억압하는 신자유주의 공세와 억압적 기구들에 대한 투쟁을 상호지원한다. 또한 지구적민중행동(PGA)은 강령(platform)이 없다.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선언문(manifesto)이 있을 뿐이다. 현시기 세계의 모든 민중운동, 저항운동세력이 공동으로 투쟁해야 할 대상과 공동 행동 전략을 정식화하고 있다. 초국적기업과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다기한 자유무역 협정들과 초국적 기구들(WTO, IMF, WB 등)이 그것들이다.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등 모든 대륙에서, 그리고 노동, 농민, 원주민, 환경, 실업, 원주민, 무주택자 등 모든 부문별 운동조직 및 개인들이 참여했다. 세계화에 의해 각 대륙, 각 부문들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가, 그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등에 대해 우리는 서로 정보와 의견을 교환했다. 신자유주의는 제3세계 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제1세계 민중들의 삶도 절망에 빠뜨리고 있었다. 실업과 사회적 소외, 무주택의 문제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 서고 있다. 북반구 국가들에서 최근 실업자운동, 빈곤에 반대하는 운동, 무주택자들의 저항 및 점거투쟁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공세의 북반구 민중들에 대한 파괴적 효과를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세계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제3세계 민중들이 분명하다. 전통적인 농업부문, 자치 공동체들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노동자들은 극도의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아동노동, 여성노동, 전임금노동 등 제3세계 노동자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현실은 '절망' 그 자체이다. 또한 수많은 원주민공동체들이 초국적기업의 탐욕스러움에 의해 그들의 토지, 그들의 자원, 그들의 문화를 빼앗기고, 그들 삶 전체가 절멸당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초국적자본에 의한 제3세계 각국의 생산-소비의 사회축적구조가 완전히 파괴되어, '민중들의 삶을 위한 사회/경제시스템의 복원'을 사실상 절망에 가까운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점이다. 생존을 위한 식량 재배 토지들은 초국적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커피농장'으로 바뀌어졌고, 토지, 물, 삼림 등 우리들 삶을 지원하는 것들조차 자본가들은 자신들을 위한 '상품'으로 만들어버렸다. 한마디로 지구상의 모든 것을 자본의 이윤추구에 종속시키려는 전략이 바로 세계화이며, 지구화이며, 신자유주의이다.

이 지구상에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공세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 특히 IMF와 DJ정권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한국 민중 및 노동자들의 목을 점점 옥죄어 오고 있다. 우리의 고통이 남미 치아파스주 원주민의 고통과 같은 연원을 갖고 있고, 우리의 해방이 그들

의 해방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투쟁이 이곳 한반도에서 진행되더라도, 우리의 관점은 항상 지구적이어야 한다. 우리만의 일시적 이익을 위해, 제3세계 민중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전가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 이제 세계 민중들과의 연대투쟁은 책 속에서만 논해질 것이 아니다.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한다. 경쟁이 아닌 연대의 원리로 신자유주의 공세에 당당하게 맞서자.

“우리는 민중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경쟁과 경쟁력이라는 원칙을 거부한다. 대신 우리는 존엄과 평등, 정의 그리고 자유라는 틀 속에서의 상호 협력과 연대의 원칙을 지지한다.”(지구적 민중행동 선언문 중)

■ 전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

제네바 현장 보고서

1.

이 회의의 명칭은 People's Global Action against "Free Trade" and WTO 즉, 자유무역과 세계무역기구에 반대하는 지구적 민중행동이다. 우리가 이 회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청년생태주의자(KEY)'가 작년에 일본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에 참가한 후 가져온 팜플렛을 통해서였다.

그즈음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PICIS)', '정보연대SING', '청년생태주의자(KEY)'는 작금의 한국의 경제위기는 국내 경제구조의 모순 뿐만 아니라, 초국적 자본에 기인한 바가 크며, 현재의 위기(민중운동의 위기이기도 한)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연대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가칭)'한국국제연대실천단'을 꾸렸다.

그리고, PGA 회의에 참가하는 것이 민중운동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 민중운동 단체와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이 회의에 참가한 것은 무척 의미있었으며,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투쟁을 통해서 이 성과들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이 글은 10일 동안 제네바에 머물면서 바라본 PGA 회의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이다.

2.

PGA 본회의는 2월 23일에서 25일까지 였으나, 2월 18일부터 여러 주제를 가지고 라운드테이블이 열렸다. 라운드테이블의 주제는 '민중과 세계시장(People vs Global Market)', '기업권력(Corporate Power)', '성(gender)', '문화, 매체 그리고 교육(Culture, media and education)', '원주민(Indigenous People)' 등이었다. 참가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었다. 인원은 약 10~20명 정도였으며, 진행은 처음 모여서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토론할 것인지 함께 정하고, 사회도 돌아가면서 맡았다. 즉, 논의주제와 장소 외에 미리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만드는 자료집도 물론 없었다. 이곳에서 미리 준비된 자료는 PGA의 조직원리, PGA 선언문 초안, 라운드 테이블 개략, 본회의 일정 등이 전부였으며, 그런 것들은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팜플렛과 인터넷을 통하여 입수할 수 있었던 것들이었다. 제네바에 가서도 여러 언어로 번역된 똑같은 자료만을 접할 수 있었을 뿐, 사전에 라운드테이블에 제출된 자료 등을 미리 얻을 수는 없었다.

여러 라운드테이블이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모두 참석할 수는 없었다. 그 점이 무척 아쉬

운데, 주최측에 각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리된 것이 있다면 공유될 수 있도록 요청할 생각이다. '민중과 세계시장'에서는 WTO와 다자간투자협정(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등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국제조약에 사회적 조항을 끼워넣기 위한 로비의 실효성(대부분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었다), 각 지역의 투쟁사례 등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다. 여기서 이창근씨가 한국의 경제위기 상황과 민중운동의 대응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고, 사파티스타의 사례도 발표가 되었다. '기업권력'에서는 무역과 투자에 관한 국제협정에 초국적기업들의 로비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가 있었다. 우리가 가져간 '총파업투쟁속보 vol.2' 비디오를 상영하였으며, 그후 한국의 상황에 대한 간략한 발제와 질의응답이 있었다. '문화, 매체 그리고 교육'에서는 주로 대학생들이 참여를 하였는데, 대학이 신자유주의적인 사회변화의 영향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운동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원주민' 라운드테이블에는 뉴질랜드 마오리족, 동티모르, 인도, 버마 등에서 주로 참여하였는데, 이들의 상황에 대한 예기를 들으며, 신문의 과편화된 기사 속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절박함을 읽을 수 있었다. 이번 PGA 회의의 주된 논제는 초국적 자본의 지구적인 확장과 그에 대한 대응이었으나, 물리적이고 야만적인 폭력에 맞서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러한 회의의 분위기가 오히려 부유한 나라의 예기로 들리는 듯 했다.

본회의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본회의의 논의주제는 'PGA 선언문 초안에 대한 토론과 개정', 'MAI를 조인하기 위한 4월 OECD 각료회의와 5월에 이곳 제네바에서 열릴 WTO 각료회의에 지구적으로 공동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토론, '2년 후에 다시 열릴 PGA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위원회(Convenor's Committee) 및 5월에 전지구적 투쟁을 세계에 알릴 언론팀의 구성' 등 이었다. 본회의 기간 동안에는 참가자가 300명 정도 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여서 토론하는 것은 힘들었고, '실업', '여성', '문화', '원주민' 등 10개 정도의 작은 단위로 나뉘어(주제별로 나누기는 했지만, 본회의의 논의주제에 대해 제한없이 토론이 되었다.) 그날의 논의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저녁 때 다시 모여서 대표자가 논의내용을 발표한 후, 자유토론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나눠서 토론 하기 전에, 의견수렴의 방식 등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며 토론을 벌이기도 했지만, 최대한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이곳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언어는 영어와 스페인어였으며, 서로 순차통역이 되었다.

라운드테이블과 본회의에서 논의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보고서로 넘긴다. 여기서는 회의 기간에 걸쳐서 들었던 느낌 몇가지만을 예기하도록 하겠다.

하나, 이 회의의 이름부터 그렇지만, 이 회의의 가장 핵심적인 논의주제는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자간투자협정(MAI)이라는 것이다. WTO는 자본의 지구적 확장을 주도하는 국제기구이며, MAI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본에게 자유와 권력을 안겨다 줄 국제협정이다. 그리고, 전세계의 민중운동은 이러한 자본의 지구적인 확장에 대해 직접적이며 동시적인 반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내적인 투쟁에 집중해왔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민중운동진영도 초국적 자본에 대해서 직접적인 투쟁을, 그리고 전세계의 민중과 동시적인 투쟁을 벌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진다. 이미 우리는 IMF를 통해서 '몸으로' 그것을 체감하고 있지 않은가.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멕시코 사파티스타의 투쟁이라든가, 인도의 시민불복종 운동 등이 전세계적인 관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PGA 회의도 사파티스타를 중심으로 한 2번의 대륙간 회의의 연장선에서 기획이 된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투쟁이 주목을 받는 것은 단지 그 치열함이나 성공(?)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대안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율적이고, 민주적이며, 자본을 끌어들이지 않고도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것을 위한 철학이 있다. 때문에 대안을 상실한 서구 사회에서 오히려 그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움직이는지 아직 잘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감동을 준 것은, 어쨌든 그들은 자본주의라는 높은 벽을 넘어, 그것에 대한 투쟁을 넘어, 그들은 나름대로의 대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IMF 체제 속에서,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압박함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또다른 대안이란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

마지막으로 예기하고 싶은 것은 전세계 민중운동 진영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것은 물론 현재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금융위기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작년 초의 강력한 총파업 투쟁에 기인한 것이다. 그들은 현재의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의 민중운동 진영이 또한번 작년과 같은 투쟁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 상황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인터뷰 요청에 응했다. 우리는 민주노총 내부에서 노사정합의안을 거부했고, 앞으로 강력한 파업투쟁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결국 그들에게 힘있는 얘기는 해주지 못한 듯하다. 하지만,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민주노총 외에는 또 다른 투쟁단위가 없다는 안타까움이었다. 우리는 토론만 하면서, 민주노총의 투쟁을 기다리고만 있었는가. 민주노총이 그만큼 현재 한국의 민중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다른 운동영역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듯하다.

3.

이 회의에는 세계각지의 다양한 단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하였다. 라운드테이블은 수요일(2월 18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16일에 제네바에 도착하였다. 우리가 처음 갔을 때는 2~30명 정도였는데, 라운드테이블 기간동안 100명 정도로 불었고, 본회의가 다가올 수록 사람들이 늘어나 본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300명 정도에 이르렀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핀란드, 체코 등의 유럽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세네갈 등 아프리카에서, 미국, 캐나다 등 북미와 멕시코, 파나마, 페루 등 남미에서, 그리고 인도,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에서 참여하였다. 러시아에서도 40여명이 버스를 타고 도착하였다. 참여단체도 노조, 사회단체, 학생, 기자 등 다양했으며, 연령별로도 10대부터 6~70대까지 천차만별이었다.

하지만, 이 회의에 참여한 단체가 각국의 주도적인 민중운동 단체만은 아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멕시코의 사파티스타나 유럽의 A SEED, Play Fair Europe!, Green Peace, 인도의 농민운동단체 KRRS, 필리핀의 KMP 등은 영향력 있는 단체이지만, 기타 작은 그룹에서 그리고 개인단위로도 많이 참가했다. 이것은 그만큼 PGA 회의가 이 회의의 원칙으로서 작은 그룹에게 오히려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PGA의 조직원칙과 선언문을 읽어보면 이 점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 이탈리아 등의 몇개 노조에서도 참여를 했으며, 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총과 연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곳에서 와서 우리는 주최측(?)을 찾기 힘들었다. 거의 모든 것들이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다. 숙박은 squatter(빈 건물을 점거해서 살고있는 사람들)들에 의해서 제공되었으며, 참가자들이 식사를 했던 Usine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 식사와 차, 커피 등을 제공하였다. 등록을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으며, 회의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서 회의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기도 했지만, 자원봉사자들의 대거 참여에 의해 회의가 운영된다는 것이 신선한 느낌을 주었다.

4.

우리가 숙박했던 곳은 Rhino라는 곳이며, 이곳에서 2~30분 정도 걸어가면, 등록장소 및 라운드테이블 장소로 사용되었던 Artamis가 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식사장소 및 라운드테이블 장소로 사용되었던 Usine이 있다. 여기서 10분 정도 강을 건너 걸어가면 본 회의 장소로 사용된 Maison du Faubourg라는 곳이 있다. 2개의 건물이 있는데, 한곳은 노조사무실로 사용되며, 다른 한 곳은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극장처럼 2층 구조로 약 500명 가량 수용할 수 있는 넓은 홀이 본 회의 장소였다. 복도에는 책상위에 각 단체들이 가져온 자료 및 팸플릿 등이 배포 혹은 판매되었다. 본 회의 때 회의장 벽에는 각 단체에서 가져온 갖가지 그림과 글씨가 써여진 플랭카드가 붙여졌다. (그 플랭카드를 보면서 우리도 상상력을 발휘해서 플랭카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라운드테이블은 대학건물, Usine, Artamis 등에서 분산 개최되었다.

Rhino는 2개의 건물로 되어있다. 이 건물에는 동티모르, 뉴질랜드(마오리족), 인도, 캐나다에서 온 참가자들이 함께 묵었다. 1층에는 BISTROK이라는 바(bar)가 있는데, 이 근처 제네바 대학의 대학생들이 주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러 주로 온다. 우리는 이 바에서 아침식사를 하였다. 그런데, 이 건물은 squatter들이 점거(squart)한 건물이다. 벌써 9년째 살고 있다고 한다. 현재 squatter들이 조합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 건물을 사려고(혹은 임대하려고) 정부와 협상중이라고 한다. 이곳에는 이렇게 squatter들에게 점거된 건물이 많다. 많은 참석자들이 이런 건물에 숙박하고 있으며, Artamis와 Usine도 모두 점거된 것이다. squat에 대한 예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다. 도대체 남의 빈 건물을 점거해서 산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이라도 가능한가? 비어있는 건물은 사용되어야 마땅하다. 그것은 침탈이 아니라, 권리이다. 그것을 불법으로 보는 것은 사적소유라는 고정된 관념 속에서 바라보았을 때 뿐이다. 항상 시작은 어려운 것이지만, 이제 그들은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바꾸었다.

우리는 Rhino의 3층에 있는 방을 사용했다. 이 층에도 몇개의 방에 squatter들이 자신들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고, 우리들이 묵었던 방도 누군가 쓰고있던 것이었다. 벽에는 사진들이 정렬되지 않은 채로 붙어 있었고, 이 방 뿐만 아니라 다른 방들과 화장실 등에도 사진들이 붙어있다. 전통은 간접조명을 사용해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가구들은 허름한 것이었지만, 그림있는

타자보 등을 띄워놓아 깔끔해보였다.

Artamis는 공장으로 사용되었던 듯 넓은 부지에 창고비슷한 빈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으며, 건물의 벽에는 기묘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여기에는 등록장소로 사용된 공간 외에도 바(bar), 서점, 인터넷 카페 등이 있었다. 이 인터넷 카페(Cyber tea)에서 우리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한국의 친구들에게 메일을 보낼 수 있었다.

Usine은 200평 정도 되는 건물인데, 300명 이상의 참석자들이 이곳에서 식사를 하고, 식사 외 시간에는 라운드테이블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저녁때는 영화상영이나(우리가 한국에서 가져간 '해고자'를 이곳에서 상영하였다), 마임 공연이 있었고, 밤에는 댄스 파티 등이 열리기도 하였다. 이곳에서 식사 및 커피 등을 서비스한 사람들은 모두 자원봉사자이다.

하루는 squatter들이 여는 파티에 갔었다. 역시 점거된 건물 댄 목대기 층이 파티 장소로 사용되었다. 그렇게 세련되게 치장된 것은 아니고 허름한 장소였지만, 파티를 즐기는데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의자가 별로 없어서 사람들은 서서, 혹은 바닥에 앉아서 서로 얘기를 나누었다. 밤 10시 경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점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으며, 11시가 지나자 댄스가 왔다. 스테이지 같은 곳에 댄스가 자리를 잡고 연주하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은 그 앞에서 서서 그들의 연주를 즐겼다. 뒤에서는 하나둘씩 춤을 추기 시작했다.

5.

몇 가지 사정으로 우리는 수요일에 제네바를 떠났다. 우리가 떠난 날 제네바에서는 WTO 앞에서 시위가 있을 예정이었다. 나중에 매일로 상황을 알아본 본 바에 의하면,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되었으며, 4시간 여 동안 제네바 시내 교통을 마비시켰다고 한다. 전날 우리도 시위 준비(플랭카드 만들기, 간단한 퍼포먼스 연습 등)에 참여를 했었는데, 본 시위에 참여를 못해서 무척 아쉽다.

화요일 공식회의에서 논의된 PGA 차원의 공동대응방안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4월 OECD 각료회의에 맞춰서 MAI에 대한 반대 시위가, 그리고 5월 WTO 회의에 맞춰서 WTO에 대한 반대 시위가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벌어질 것이다.

우리도 물론 PGA 회의에서 돌아온 이후, 회의에 대한 정리작업을 포함하여 MAI나 WTO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이곳에서의 싸움은 결국 우리의 몫일테니까.

금년 봄은 전지구적으로 '뜨거운 봄(Hot Spring)'이 될 것 같은 예감이다!

■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 ■

(참고 글-2)

Think Globally, Act Locally!

98년 상반기 '국제연대', 학생운동은 무엇을 하였고
하반기를 예비하는 투쟁은 어떠한 것인가?

(이 글은 6회 청년학생한마당의 주제마당 가운데 하나였던 '서울국제민중회의 설명회'에서 제출되었던 글입니다.)

1. 학생운동의 현황-국제연대의 문제의식이 제출되고 받아들여진 맥락

98년 학생운동은 또다시 새로운 것을 찾아 헤메었다. 한총련의 역사적 해소는 문제의 원인이 아닌 결과였다. 학생운동 진영에게 있어 최소한의 통합력조차도 만들어지지 못하는 상황은 연대의 근거를 해명하지 못하는 것에 다름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연대'는 여러가지 편차를 드러내며 이해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국제연대라는 말은 이러한 연대의 근거마저도 상실된 학생운동 진영에게 '새로운 것' 이상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함에도 우리가 제기하는 국제연대투쟁의 상은 단순히 하나의 주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기존의 관념에 대한 한계와 극복을 논의하는 근본적인 작업의 실마리일 수도 있다. 물론 이는 본적인 체계를 완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중운동의 차원에서 어떻게 대중과의 융합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의 기준에서이다.

하여 이 글에서는 우선적으로 상반기 학생운동에 있어 국제연대라는 하나의 화두가 제기했던 효과에 대한 간략한 언급으로 시작할 것이다. 이에는 국제연대투쟁이 단순히 하나의 새로운 주제로 인식되는 여러 편향에 대해서도 역시 짚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위 반제투쟁에 대한 간략한 지적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제투의 파잉결정이라는 연명을 중심으로 학생운동의 패러다임으로서 국제연대투쟁이 어떻게 접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간략한 평을 서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위의 평가와 가능성의 제시를 통해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학생운동과 국제연대투쟁의 접합지점을 살펴볼 것이다.

2. 한계

이 글은 우선 제 6회 청년학생한마당의 하나의 주제마당으로 설정된 '국제민중회의 설명회 & 토론회'에서의 토론글로 위상을 갖고 있다. 이는 제 6회 청년학생한마당의 전체적인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생운동의 질서재편의 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문제제기 하려하는 좌파의 전체적인 문제설정이 구체적인 행사 관에서도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¹⁾

하지만 이는 면밀한 판단을 요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국제연대투쟁을 통해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실물적인 효과는 무엇인가? 현시기 학생운동이 국제연대라는 화두를 전드리면서 얻고자 하는 효과는 단순히 관점의 정정인가? 또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고리로서 사고되는 것인가? 이 글에서는 지금의 학생운동이 현실에서 상반기 제출된 국제연대투쟁의 문제의식과 이에 대한 효과들을 기반으로 하여 한계지점과 교훈, 그리고 앞으로의 실물적인 투쟁을 예비하는 내용을 다룰 것이다.

3. 전망들

3.1. 국제연대는 새로운 영역운동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국제연대는 하나의 주제 또는 영역으로서 인식되는 편향을 지적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학생운동의 위기라는 현실진단 하에 제기되어왔던 무수한 '새로움'의 실험들, 함에도 이러한 실험들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영역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는 학생운동의 합력을 창출에 있어 많은 난관에 부딪혀 왔다. 실제로 하나의 영역조차 구축하지 못한 많은 담론들이 제기되어왔으며 이를 관념적으로 어떻게 서로 관계맺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만이 무성했을 뿐이다. 부문계열은

1 물론 8월이라는 시기를 놓칠 수는 없을 것이다. NL대오의 통일투쟁이 최고조에 치달는 시기라는 의미에서 그러하며 올해 98년은 DJ정권의 출범 원년으로서 소위 '햇볕론'으로 드러나는 남북관계의 변화가 8월 정세에 대한 잠재적인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함에도 불구하고 6회 전국청년학생한마당을 냉정하게 본다면 좌파대오의 '합력'은 반NL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것인가? 좌파대오의 대중운동에 대한 실력은 NL대오가 선점하고 있는 남한 사회에 있어서의 민족문제와 반제의 문제에 대한 반경향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가?

실제로 기층단위의 활동가에게 있어서는 청년학생한마당의 성격은 8월의 구체적인 정세 속에서 투쟁을 조직하는 공간으로서 기층에 각인되기보다는 좌파 학생운동의 합력을 창출하는 공간으로서 사고되는 경향이 크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DJ정권 하에서 좌파학운은 어떠한 실현을 벌여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통일적으로 사고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실현을 통해 좌파학운이 청년학생한마당을 통해 어떠한 합력을 창출할 것인가의 문제로 사고되어야 한다.

2 물론 어떠한 효과를 산출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단정적이다. 그리고 설부르게 재단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함에도 우리가 어떠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것은 이러한 효과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98년 우리에게 이론이 갖는 의미는 진리의 담지 체계로서 이론이 아닌 현실의 계급투쟁과 접점을 가질 수 있는 이론의 의미인 것이다.

등 등에서 드러나는 평가의 지점이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98년 상반기 학생운동에 제기된 '국제연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여진 편향이 존재한다. 오히려 기존의 고전적인 변혁론에 대한 정정을 가하고 새로운 주체형성의 계기를 사고하고자 했던 '국제연대'의 지점에서의 풍부화된 실천은 그 자체로서 협소한 틀로서 국한되어버렸다.

하지만 이는 국제연대 자체의 문제점이라고 하기에는 과도한 측면이다. 오히려 국제연대가 실천적으로 풍부화될 수 있는 단일한 전선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전술 속에서 다기다종한 투쟁들의 관계맺음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3.2. 국제연대 투쟁은 일국을 벗어난 제국주의에 대한 대적전선 설치의 문제이다?

국제연대투쟁의 주타방은 일국을 벗어나는 것이며 실제로 97년 말을 경과하며 남한사회에 강제된 IMF는 이러한 초국적자본의 대표자이기에 이러한 초국적자본에 대한 타격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국제연대 투쟁은 곧 초국적자본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입장이 발견된다.

이러한 입장은 남한사회의 계투지형에 있어 국제계투의 과잉결정을 사고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국제연대투쟁을 통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피지배대중의 기본적인 권리가 무화되는 지점은 어떠한 것인가를 밝히는 것을 통해 저항주체형성의 경로를 밝히고자 한 것이었다. 모든 투쟁은 대중투쟁이라는 말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대중의 사상으로 전화되지 못하는 이데올로기는 자신의 급진성을 몇몇의 활동가로 가두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오히려 관건이 되는 것은 DJ와 IMF간의 협약이라는 형상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 국제계투의 과잉결정을 전국적 단일한 전선의 구축의 과정에서 계급대중이 저항하고 있는 고용안정쟁취와 정리해고분쇄 그리고 실업대책수립이라는 즉각적인 구호들과 어떻게 통일적으로 파악할 것이며 이를 반동적인 사회재편에 대한 역방향의 정치로 실물화시켜낸 것인가라고 할 것이다.

3.3. 이러한 편향은 실제로 IMF사회재편이라는 98년 상반기 남한의 정세 속에서 반제인가 대정권 투쟁인가라는 왜곡된 논점을 형성하였다.

IMF식 사회재편이 강제되는 상반기의 상황은 실제로 '21세기 선진복지통일한국'이라는 '국민적 경쟁국가'의 논리를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지배이데올로기에 있어서 YS 및 몇몇 정치인의 탓으로 좌초된 꿈이라는 도식을 붙여넣어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며 또한 '탈국민적 자본유치국가'의 정권에 대한 저항 정서를 모든 외세에 대한 반대라는 식으로 굳히기에 즉, NL대오의 정체성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94년 쌀투쟁시 보여졌던 모습과 같이 민족의 식량 자주권을 지켜내기 위하여, 같은 맥락하에서 민족의 경제주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초국적 자본을 필두로 한 제국주의 반대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와 연동되어 실질적으로 상반기 정세 속에서 IMF에 대한 반대투쟁을 벌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주요하게 경제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반대투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 주류를 형성하였다(좌익 진영의 선도적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하는 실천을 벌여내지 못함으로써)고 평가할 수 있다.

자본의 운동은 전세계적인 반면에 자본의 이데올로기는 피지배계급을 분할하며 동원한다는 사실을 생각해볼 때, 별거없는 자본의 공세라고 일컬어지는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투쟁은 필연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상반기 제출되었던 국제연대의 문제의식이 노리고자 했던 관점의 정정은 어찌보면 이렇게 단순한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전세계의 자본의 공세를 보다 공세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취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적인 흐름에 맞서기 위하여 전세계인민들의 투쟁을 묶어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다.

함에도 이러한 투쟁은 일국가 내에서 그러한 초국적 자본의 이해와 결탁한 제반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화를 구축하고 있는 주도적 세력이 국가 정권이라는 사실을 간과 혹은 아주 작은 부분으로 치환하는 오류를 범하였고 하기에 또 한 편의 극단에서는 국가정권의 역할과 성격만을 문제 삼고 추상수준이 높은 초국적 자본에 대한 주타방을 설치하기 보다는 당면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적 위기와 결부하여 대정부 투쟁의 시급함과 긴박함을 주장하는 입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는 현시기 전선 설치의 문제가 단순히 국내적 전선과 국제적 전선의 대별구도를 만드는 것이어서 안되며 또한 그 둘의 기계적 융합이 되어서도 안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향후 우리의 전선설치에 있어서 상반기 진행되었던 초국적 자본에 대한 직접 투쟁에 대한 것과 대정권 투쟁인가에 대한 왜곡된 논쟁구도를 다시금 형성하는 일을 없어야 할 것이다³⁾.

4. 가설

4.1. 국제계투의 과잉결정과 이를 통해 전선설치의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진행되어야 한다.

... 그러나 현실적 난점이 존재함은 인정하여야 한다. 그것은 바로 직접적인 세계적인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정치전선의 설치가 난망한 한국사회의 계급투쟁지형 및 주체의 상황, 그리고 직접적인 국제적 전선의 설치가 가지는 전략적 함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적으로 전선의 설치를 즉각적으로 국제적인 전선과 국내적인 전선으로 기계적으로 분리한다든지, 혹은 억지로 융합하는 형태로 사고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으며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한국적 수용의 갈등적 과정에서의 정치적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포착하고 정치전선의 성격을 명확히 '반신자유주의'로 묶어내려는 노력일 것이다.

3) 이와 연동하여 지난 시기 '고용안정 쟁취와 민중생존권 사수를 위한 수도권 학생-공동 투쟁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형성된 '총파업 사수'와 'IMF협약 철폐'라는 왜곡된 논쟁구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를 느끼며, 변화하는 정세속에서 적합한 정세전술권이 부재한 상황이 어떠한 실천적 오류를 낳는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하게 반추해야 할 것이다.

하기에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명백히 현 시기 전선의 성격을 '반 IMF 반 김대중 정권'으로 잡아야 하며 이 속에서 총체적으로 반민중적 신자유주의적 질서재편에 대한 반대투쟁을 벌여내야 할 것이다. 대학 사회 역시 이러한 자본의 질서재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라고 할 때, 이 속에서 노동운동 및 타 민중운동들과의 연대도 고민되어야 하고, 학생운동 고유의 실천 영역도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4.2. 학생운동의 실천양태에 대한 고민이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문제의식이 포착되었을 때 이것이 유의미한 것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인가의 기준은 오로지 그것이 대중운동으로 전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운동주체에게 있어서는 국제연대의 문제의식을 어떠한 자기내용으로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학생운동의 실내용으로 구성해낼 수 있을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운동의 구체적인 실천양태로서 대중운동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한 논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현재 학생운동에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IMF 통제체제 하 대학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반대의 문제가 단순히 한국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국제연대의 문제의식 하에 어떠한 연대망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국제민중회의의 문제의식이 단순히 한국의 민중운동단체를 하나의 일주체로 그리고 다른 주체들이 만나는 문제만으로 사고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국제계투의 과잉결정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한국사회의 계투지형에 대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가령 대학의 구조조정의 문제로 국제적인 연대투쟁을 사고하고자 했을 때 구체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효과는 어떠한 것인가?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학우대중들의 변화양상을 능동적으로 파악하는 가운데 이러한 개입의 방향각이 설정되어야 한다. 실제로 계급관계의 압도적인 열세 속에서 학생운동 진영은 지배이데올로기에 역방향을 창출할 수 있는 대중과의 결합양식에 대한 고민에 있어 지속적인 정체를 노정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극복방안으로서 90년대 민중연대의 양태로서 1단위 1연대운동의 문제의식이 제출되어 온 바, 이러한 문제의식이 핵심적으로 문제삼고자 한 것은 다름아닌 학생운동의 현실에 대한 긴장관계의 설정의 문제이며 또한 다양한 저항 이데올로기의 수평적인 연대를 봉쇄하는 지배적인 학생운동의 양태에 대한 전화의 문제설정이라고 할 것이다.

요컨대, 국제연대의 문제의식을 예각화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층의 활동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이 어떻게 환류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저항주체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활동양태 및 문제제기가 현시기 학생운동의 지배적인 현상을 어떻게 전화시켜낼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5. 구체적인 투쟁의 방식으로서의 국제연대투쟁

위와 같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현 시기 국제연대투쟁의 실질적인 의미를 찾는 다는 것은 여전

히 난망한 과제일 수 있다. 그것은 상반기 우리가 거쳐왔던 과정을 통해 쉽게 확인되는 바이며, 함에도 불구하고 현 시기 우리는 이러한 고민의 실천적 외화를 당면한 서울국제민중회의의 일정으로 부터 강제받는 부분이 존재한다. 하기에 우리는 보다 장기적 관점 속에서 하반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맥 속에서 국제연대 투쟁과 학생운동이 주되게 잡아가야 할 흐름에 대한 지적의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리지는 못하는 현실이며 하기에 우리는 일정 국제민중회의에 결합해 가는 대중적 흐름을 창출함으로써 이후의 투쟁까지 이르는 과정을 밟도록 한다.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라는 연명이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수많은 노동대중이 파업의 경험을 통하여 계급적 의식성을 획득해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장 9월 9-12일로 예정된 국제민중회의에 대한 대중적 결합을 통해 이후 우리의 실천의 방향성이 보다 예각화될 수 있을 것이기에.

끝나지 않은 소송: 주체와 윤리의 문제

김 향(신문방송학과 '91)

0.

저 맑스의 위대한 단순화가 다른 시대를 위해 고독한 기다림을 참고 즐기는 마키아벨리의 후예들에게 최선의 미덕이 되기를 바라면서..

1.

맑스가 150년 전 '굴고 녹슨 모든 관계들은 오랫동안 신성시되어 온 관념들과 함께 해체되고, 새롭게 형성된 모든 것들은 정착되기도 전에 낡은 것이 되어 버린다'고 말했을 때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미, 항상, 새로운 것'을 모토로 하는 부르조아 사회의 '운명적 힘'이다. 맑스는 이 '운명적 힘' 속에 내재하는 반의 가능성을 보았다. 이 가능성에 내깃돈을 건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일일이 나열할 수 있으랴. 하지만 가장 극한적으로 그 가능성에 도전한 두 사람의 유령이 눈 앞에 나타난다. 벤야민과 레닌의 유령이.

벤야민은 모든 것을 끌어버리는 과거로부터 오는 바람을 '진보'라고 부른다. 그리고 벤야민은 눈을 '뒤'로 돌린다. 앞에 등을 돌리며, 역사의 진보라는 바람을 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며 바람에 맞서 폐허 속에서 잔해들을 수집하기. 벤야민 처럼 항상 곱사등이에게 걸려 넘어지는 불행아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 밖에 없었으리라. 이 방법은 하이데거-아렌트의 전략과 궤를 같이 한다. 기나긴 여정 끝에 온 서구의 역사 속에서 은폐되고 폐허로 남은 잔해들에서 '근대'를 사유하기. 이것이 벤야민이 역사의 수집을 통해 노리는 전략이다. 물론 그는 스페인 국경에서 곱사등이에게 발이 걸려 죽음을 맞이했지만, 벤야민의 후예들은 그의 급진적 전략을 아직도 수행 중이다. 진보의 바람에 맞서면, 미래에 등을 돌리고 말이다.

우리는 또 다른 전통을 알고 있다. 레닌,트로츠키,게바라의 전통을. 이들은 진보의 바람, 혹은 부르조아 사회의 운명적 힘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 했다. '상황'을 창출하는 것. 레닌의 카우츠키 비판이 보여주는 것이 이들의 역사-시간 인식이다. 레닌의 비판은 시간을 인과적으로 설정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동간적으로 역사-시간을 설정하고, 그 간격에 따른 인과의 사슬 엮기, 이것

이 인과적으로 역사-시간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정된 역사-시간의 선은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레닌은 참을 수 없었다. 레닌은 역사-시간이란 '상황'이라고 보았다. 동간적의 선으로 이어지는 철도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여러가지의 사건들이 조우하는 도박판 같은 공간으로서의 역사-시간. 이것이 레닌의 역사-시간 의식이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지혜'이고 '운 fortuna'이다. 또한 어떤 원칙에 기초한 연대의 원리가 아니라, 고독한 자들의 우발적인 조우가 새로운 창출한다. 알튀세르가 마키아벨리의 고독을 빌어서 말하는 바이다. 드보르의 '상황을 창출하라'는 연명은 레닌,트로츠키,게바라의 전통을 마니페스트하는 셈이다.

맑스주의 운동(용어의 가장 광범위한 한계 설정을 전제로 한다면) 속에서 이 두가지 모티브는 극한에 있었기에 서로 만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극한적 모티브의 조우, 즉 미래에 등을 돌리고 잔해를 수집하는 꼼꼼함과 미래에 눈을 돌리고 상황을 창출하는 적극성의 조우를 두명의 위대한 맑시스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러시아 지성사와 문명사에 깊은 통찰을 가졌고, 그것을 미래에 투영하는 비대한 능력을 가졌던 트로츠키. 맑스주의 안에서 부르조아적 속성을 발견하고, 스피노자라는 이단아를 통해 '맑스주의를 위한 철학'을 기획했던 알튀세르.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부르조아 사회의 '운명적 힘'으로 인해 산산히 부서지고 또한 은폐된 역사의 단편들의 재보를 추적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맑스주의 운동의 극한적 모티브를 조우시킨 맑스주의 운동 속에서의 이단아들이다. 이들의 비극적 죽음은 이 극한적 모티브들이 만났을 때에 야기되는 비극적 결말을 보여 주는 생상한 증언이리라.

트로츠키는 사라져 가는 과거 러시아의 위대한 유산과 혁명을 조우시키려 노력했다. 단순한 생산 공동체로서의 소비에트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가 도달할 수 있는 극한까지 혁명을 진행시키기. 도스토예프스키로 대변되는 러시아 문학, 그리고 서구의 예술적 성과물들. 트로츠키에게 인간의 창조성과 가치가 그 한계까지 고양된 시도는 이러한 예술 속에서였다. 그는 사회주의 운동이 폐허로 만들어 갔던 위대한 잔해들을 수집해서, 무산계급의 정치적 혁명과 유럽문화의 정수를 결합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랬을 때만이 인간의 가치는 그 극한까지 고양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세계의 인민들은 자신의 감성과 이성의 최고상태로 자신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존재들이 되어야만 할 터였다. 하지만 그 비용은 터무니 없게 비쌌다. 스탈린은 그 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혁명을 아름답게 만들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리라. 그런 의미에서 스탈린이 혁명의 미장이라면, 트로츠키는 혁명의 예술가였다. 스탈린에 의해 혁명의 동상으로 화석화된 레닌의 비극과 달리, 트로츠키는 새로운 사회의 건설비용을 터무니 없게 많이 요구하는 비극적 예술가였던 것이다.

또한 알튀세르의 '맑스주의 비판'은 해체적 사유에 대한 비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알튀세르는 해체의 보편성generality-특수성particularity(국민-개인)의 문제설정을 일반성universality-독자성singularity(대중-개인)의 문제설정으로 전화하려 했다.¹⁾ 이로써 그는 개인의 독자성이 침해 당함

1) 보편성과 특수성은 인간 일반과 인간의 관계와 같다. 즉 어떤 인간이든 상관이 없고, 단지 인간 일반의 표상체로서의 인간을 뜻하는 것이 보편성과 특수성이다. 반면 일반성과 단독성은 나와 너의 관계이다. 나와 너는 절대로 동일화할 수 없는 개체이다. 물론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많다. 하지만 '나'의 단독성은 '단지 나'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이것은 '너'라는 '단지 너'일 뿐인 타자와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여기서 일반성은 나와 내가 있는 세계의 단일성이며, '나'와 '너'는 더 이상 분할될 수 없는 절대적 개체이다. 즉 보편성과 특수성은 초월적 지위와 그 표상체라는 모델이고, 일반성과 단독성은 단일 세계 속에서의 개체들이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이 없이 대중반란을 이해할 수 있었다. 즉 보편성 속에서 억압되는 특수성이 아니라, 일반성 속에서 일회적 단독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개인'을 맑스주의 비판의 결과물로 사고한 것이다. 결국 그에게 문제가 된 것은 보편성 속에서 침해당하는 특수성, 즉 국가와 당에 의해 침해당하는 개인의 독자성을 구출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조아와의 대비 속에서 대칭적으로 사유되는 피억압계급이라는 군중들이 아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조아 사회라는 일반성 속에서 비대칭적으로, 즉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개인들이다.

트로츠키는 러시아와 유럽문화의 위대한 예술적 전통에서, 알튀세르는 근대철학의 精緻한 독해를 통해서 역사의 잔해들을 수집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갱신하는 '운명적 힘' 속에서 계속 회귀하는 혁명의 毒素들을 보았다. 이 毒素들을 제거하기 위한 상황의 창출과 毒素를 포착하기 위한 잔해의 수집은 이들의 전략 속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모티브이다. 『선언』 150주년을 맞이 하는 올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들의 모티브가 아닐까? 화석화된 맑스주의 담론에서 억압된 것을 재탈환하기 위해서 새로운 해석을 요청해야 하고(알튀세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정치적-문화적 단편들 속에서 미래를 구상하기(트로츠키). 이를 위해 『선언』을 근대라는 커다란 컨텍스트 속에서 독해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2.

1848년, 이 무렵은 유럽 전역에서 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였다. 또한 유럽에서 보자면 '다른 곳'인 동아시아에서도 커다란 사회적 격변이 일어나던 시기였다. 남은 질서와 관념체계가 사라지려 했고,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유럽과 '다른 곳'에서의 격변은 따로 동떨어져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었다. 이 시기의 격변은 전세계적인 사태였던 것이다. '다른 곳'에서 이 사태는 western impact로 정의될 수 있다. 동아시아의 신분체제와 세계질서는 이 충격에 의해 커다란 위협을 받게 되었고, 동아시아에 고유한 과정을 통해 근대세계로 편입되게 된다. 물론 이 편입이 동아시아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격변은 19세기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유럽에서 저 가공할 만한, 모든 것을 집어 삼키는 근대적 힘이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지구상에서는 '세계문명'이 예고되었다. 즉 이미 단일한 지역의 테두리 안에서 안주하는 문명은 14-15세기 경에 종말을 고할 운명이었다. 그것이 맑스가 바라본 자본주의의 힘이었다.

그러므로 14-15세기 이후로 이미 세계는 사이드의 말대로 '겹치는 역사, 섞이는 영토'의 시대로 접어들었던 것이다. 19세기는 이 세계의 완결성을 획득하는 시기였다. 헤겔은 정확히 이 사태를 자신의 철학적 사유 속으로 끌어들었다. 의식의 정신으로의 통합으로 대변되는 역사의 종말은 서구근대, 아니 '세계문명'의 도래를 사변적 힘으로 대변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세계문명'의 보편성과 '지역문명'의 특수성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물론 헤겔이 이런 용어를 사용했는지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다. 헤겔은 이 사태를 개인의 차원에서는 의식

실재론과 유명론의 논쟁에서 유래하는 존재론의 두 줄기이다. 근대철학에서 후자는 경험론으로 흡수됨으로써, 그 고유한 의미를 상실했다. 알튀세르가 후기에 철학적 사유로 재탈환을 시도하는 '불확실성, 혹은 우발성의 유물론'은 이 존재론을 지시한다. 이 용어는 이 글에서 특별한 설명 없이 계속 사용되지만, 특별한 의도에서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

과 정신, 정치의 측면에서는 시민사회와 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아렌트의 말대로 지구인이 화성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생기지 않는한, 헤겔의 보편과 특수성의 대립은 정확히 '세계'라는 보편성을 한계로 가지고 있다. 이 한계 속에서 헤겔의 사변적 힘은 보편적 세계와 지역적 특수성을 변증법적 원리에 의해 통일시킬 수 있었다. 그것이 현실로 드러난 사건이 프랑스 혁명이며, 나폴레옹의 유럽 재패였다. 헤겔은 이 속에서 독일의 완성, 더 나아가 유럽의 완성, 궁극적으로는 세계의 완성을 본 것이다.²⁾

헤겔의 이 엄청난 체계 속에서 헤엄쳐 빠져 나오기란 쉽지 않다. 청년헤겔학파들도 헤겔의 테두리 내에서 세계라는 보편성을 사유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의 역사철학 속에는 모든 남은 것,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모든 것 마저 삼켜버릴 수 있는 가공할 만한 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상상적이고도 소중한 진리로 우리에게 친숙한 것은 인간의 일이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리라. 사람이 그렇고, 가족사가 그렇고, 사회적 대소사도 그렇다. 여기에 법칙을 부과하려는 노력이 헤겔의 위대한 사변이다. 하지만 그 법칙의 부과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결정해줄 수 있는 잣대는 어디에도 없다고 해야한다. 왜냐하면 헤겔의 사변은 '법정의 모델'을 토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항상 사물의 배치에 의한 결과물이다. 하나의 관점이 세계를 기하학적으로 안정된 공간으로 구성한다는 원근법적 착각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즉 원근법은 사물들을 하나의 가능한 방법으로 배치하는 방식이고, 소실점은 그 결과물이다. 이 소실점의 대척점에 있는 인식주체의 시선은 사물의 배치에 의해 가능한 것이지, 그 역은 아니다. 그러므로 인간주체의 시점이 사물을 원근법적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것에 다름아니다. 니체가 원근법주의라고 지칭한 것은 이 사태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원근법적 질서 안에서는 주체가 부재하는 원인으로 나타난다. 이 부재하는 원인이야말로 '법정

- 2) 오해는 마시라. 이 위대한 사변적 체계가 관념론이라고 비판받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변유를 심각하게 생각해본 사람이라면 물질과 관념의 근본적 차이짓기는 불가능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소비에트 공산 맑스주의 철학의 근본적인 폐착은 유물론의 문제를 '인식론'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데에 있다. 알튀세르의 철학적 비판은 결국에는 '인식론 비판', 즉 '부르조아 근대철학 비판'이다. 주관과 객관을 설정함으로써 '나'와 타자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결국에는 나르시시즘적 시도로 귀결된다. 사르트르가 '유대인이란 결국 남에게 유대인이란 보여지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때에 유대인은 철학적 사유 속에서 어떤 역할도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 즉 유대인이라는 객관, 즉 타자는 주관 속으로 포섭되는 것이다. 주관으로의 이 '영집회귀'는 근대문화 속에 내재하는 나르시시즘을 철학적으로 서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객관이란 주관의 물리리로 전락하게 된다. 물질과 관념을 객관으로 설정했을 때에도 똑같은 사태가 반복된다. 지라르가 격렬하게 지적했듯이 욕망이란 타자의 욕망이다. 즉 욕망이란 나와 대상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타자 그리고 대상물과의 관계이다. 그래서 항상 이 대상물은 부재한다. 물질과 관념을 세계의 근원으로 그리려는 시도는 이 욕망의 체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다. 물질과 관념의 선차성 문제 이전에 물질과 관념을 객관, 즉 대상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부재하는 보편성을 상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차성 문제로는 헤겔 비판을 수행할 수 없다. 헤겔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편과 특수, 변증법적 체계가 실은 배제와 부재화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존재론의 문제이지, 인식론의 용어로 재색된 관념론의 문제가 아니다.

의 모델이다. 법정은 항상 알리바이의 연쇄에 의해 담화가 구성된다. 원고의 알리바이, 피고의 알리바이, 또 알리바이-알리바이-알리바이... 누구도 이 부재증명의 보편적 타당성을 확증할 수 없다. 배심원이든 판사이든 소송의 임시종결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카프카의 『심판』에서 법정엔 선 주인공은 근대인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다. 누가 소환했는지, 또한 그에게 알리바이의 연쇄가 어떤 효용을 갖는지, 아무도 모른다. 단지 그는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목소리에 의해 그의 생사가 결정될 뿐이다. 구로사와 아키라의 『라쇼몽』도 이 법정의 모델을 극렬하게 보여준다. 『라쇼몽』에서 진실이 확정되는 것은 죽은 여자의 혼령에 의해서이다. 즉 부재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의해서만이 판단의 타당성이 확증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확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구로사와 아키라는 명쾌한 화면으로 보여준다.

헤겔이 보편성 속으로 흡수한 특수성은 카프카의 불쌍한 주인공과 같다. 헤겔에게 근대국가의 형성과 궁극적으로 세계문명의 완성은 고대 폴리스의 원리인 '실체적 보편성'과 기독교적 원리인 '주체적 개별성'의 통일로 가능해진다. 결국 '국민 nation'으로의 '사적 개인 private individual'들의 통합이 그것이다. 하지만 '국민'이란 무엇인가? 누구도 그것을 모른다. 요한 네스트로이의 말대로 '국민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이 말의 뜻을 모르면서 이 말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사적 개인들은 '나는 국민이다'라는 판결을 받는다. 이 판결은 헤겔의 보편성에 의해 선고된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태가 끝나지 않는다. 위에서 말했듯이 선고를 하는 판단의 타당성은 아무도 확증할 수 없다. 헤겔이 지난하게 변증법적 운동을 서술하고 있는 것은, 법정에서의 검사의 주장과 같다. '주인-노예--인정주쟁--의식-정신'... 이 알리바이의 연쇄들은 헤겔이 법정에서 행하는 혐의의 입증과정이며, 그 판결은 헤겔의 승리로 귀결된다. 하지만 헤겔이 끝내버린 이 소송을 계속 행해온 것이 헤겔 이후의 철학이다. 근대인은 계속해서 소송을 걸어 왔고, 이 소송이야말로 근대인들의 주체적-윤리적 요구이다.

위에서 말한 '법정의 모델'은 결국 근대의 주체적-윤리적 문제설정에 관한 재판과정이다. 루소가 시작했고 프랑스혁명이 강력한 증거물로 채택된 이 소송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푸코가 말한대로 근대의 비판은 '이렇게 통치당하려 하지 않는 의지'이다. 즉 계속 항소하는 의지야말로 근대의 비판인 것이다. 이 비판은 '어떻게 자기를 주체화할 것인가? 또한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라는 주체적-윤리적 문제설정이다. 루소의 자연인 homme과 시민 citoyen의 구분에서 시작된 이 주체적-윤리적 문제설정은, 개인이 어떻게 사회 속에서 주체로 살아나가고, 또한 자신의 욕구를 실현-통제할 것인가를 사유하는 것이다. 하버마스, 아렌트의 공/사 public/private 구분, 비트겐슈타인의 가족이론, 푸코의 주체화의 문제설정 등등은 모두 이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소송물들이다. 그러므로 헤겔이 보편성으로 끝내버린 소송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근대인이 벗어날 수 없는 '쇠의 우리 iron cage'인 것이다. 우리는 『선언』에서 이 소송의 또다른 버전을 볼 수 있다. 바로 계급의 문제설정을 들이대면서 이 소송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변호사가 맑스이다.

3.

'지금까지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이 언명은 변호사 맑스가 선택한 최초의 변론이다.

의식과 정신의 역사도, 구세주의 도래의 역사도 아닌 계급투쟁으로 역사를 정의하는 맑스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전의 역사 시기들에서 우리는 거의 어디서나 각종 신분들로의 사회의 완전한 분열, 즉 각종 사회적 지위들이 잡다한 등급으로 나뉘어진 것을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대, 부르조아지의 시대는 계급 대립을 단순화시켰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사회전체가 두 개의 커다란 적대적 진영으로, 서로 직접 대립하는 두 개의 커다란 계급들로 더욱더 분열되고 있다: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로. 계급의 문제설정은 대립의 문제설이다. 맑스는 역사를 대립의 역사로 보고 있다. 자유민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장인과 직인 등등의 대립의 역사. 하지만 맑스는 근대 사회의 계급대립을 특화시킨다.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대립은 이전 시대의 계급대립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계급 대립을 단순화시켰다는 맑스의 언명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복잡과 단순의 대비가 맑스의 의도는 아닐게다. 맑스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맑스가 단순화시켰다고 말한 계급의 분할은 좀더 복잡한 의도를 나타내주는 말이다. 이 의도를 추적하는 것, 이 추적을 통해 맑스가 보여준 근대인의 주체적-윤리적 문제설정의 다른 버전이 드러날 것이다.

맑스의 의도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맑스의 또 다른 소송장인 『헤겔 법철학 비판』(1843)을 참조해야 한다. 여기서 맑스는 당시 독일이 처한 상황과 혁명을 위한 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것은 맑스가 당시 독일 인민들을 '국민'의 문제설정이 아닌 '계급'의 문제설정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헤겔의 역사철학에서 보편성의 지위로 이끌어 올려진 것은 '독일'이라는 단일 국가이다. 하지만 이 '독일'이라는 단일 국가는 통합된 다음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의 민족국가와 순차적으로 통합되는 상위의 보편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헤겔은 '독일'이 완성될 때 '세계문명'도 완성될 것으로 사유했다. 왜냐하면 독일은 유럽의 여러 독특한 하위문화들 중의 하나이고, 이 특수한 하위문화가 보편성으로 통합된다는 것은 동시에 여타의 특수한 하위문화들이 보편성으로 통합된다는 뜻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은 유럽의 여타 하위문화들과 다른 특성을 갖는다. 루이 뒤몽은 이런 맥락에서 독일민족을 '문제의 민족'으로 규정했던 것이다. 1차대전, 2차대전, 90년의 독일 통일이 세계사 속에서 결정점을 형성했다는 것은 독일민족이 문제의 민족임을 잘 드러내준다. 유럽문화 속에서 내면의 소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었고, 바그너라는 국제적이면서도 독일적인 음악가를 가진 나라도 독일이었다. 내면성과 세계성, 그리고 민족성과 국제성은 유럽근대를 채색하는 문화적 이분법의 정수이고, 루이 뒤몽은 독일이 갖는 이 모순성을 통해 유럽근대를 독해하려 한 것이다. 헤겔의 문제의식 자체가 루이 뒤몽이 이야기한 문제의 민족이라는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일게다.

맑스도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법철학 비판』의 서설에서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의 독자적 세계로 구성된 정치적 현대의 결점으로서의 독일은 정치적 현대의 일반적 한계들을 내던지지 않고서는 독일에 특유한 한계를 내던질 수 없을 것이다." 꼼꼼히 보자. '하나의 독자적 세계'란 프랑스 혁명으로 가능해진 보편적 인간의 삶터다. 즉 유럽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을 담은 보편적 '유럽'이라는 세계이다. 이 속에서 '정치적 결점으로서의 독일'은 정신의 풍요와 물질의 빈곤이다. 즉 독일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유럽의 보편적 질서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다. 하지만 독일의 문제성은 이 후진성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유럽의 보편적 질서에서 이탈하려는 경향이 독일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맑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문제가 정치 경제 혹은 부에 대한 사회의 지배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독일에서는 국민 경제 혹은 국민에 대한 사적 소유의 지배라고 되어 있다”. 물론 맑스는 프랑스와 영국이 유럽의 보편성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독일이 도달해야 할 목적으로 유럽의 보편성을 보고 있지는 않다. 단지 유럽에서 정치-경제로 불리운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가, 국민이라는 정신적 통합성과 소유의 문제로 귀결되는 특수성을 보임을 지적하고 있다. 즉 계급의 문제설정이란 보다는, 국민으로 재산을 소유한 인민들을 통합하려는 경향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 한계’는 유럽의 보편적 한계, 즉 계급의 문제이며, ‘독일에 특수한 한계’는 국민이라는 정신적 통합의 문제이다. 맑스는 여기서 단계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즉 국민적 정신성의 문제에서 계급의 문제로의 순차적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는 맑스가 부르조아지의 지배-프롤레타리아트 혁명, 즉 독일을 일단 부르조아적 사회로 만들고 계급혁명을 도모하자는 단계론을 주장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맑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이념으로 치장되어 있더라도 문제는 이미 단 하나, 즉 계급투쟁의 문제임을 실파하는 것이다.

‘자신의 생산물의 판로를 무단히 확장하려는 욕구는 부르조아지를 전 지구상으로 내몬다. 부르조아지는 도처에서 뿌리를 내려야 하며, 도처에서 정착하여야 하고, 도처에서 연계를 맺어야 한다.’ 『선언』에서 맑스는 이렇게 말한다. 이는 나중에 『자본』에서 ‘16세기의 세계무역과 세계시장의 형성으로부터 자본의 근대적 생활사가 시작되었다’는 말과 공명한다. 결국 맑스가 지적하는 것은 자본, 즉 부르조아 사회의 ‘단일 세계성’이다. 즉 해제가 보편성으로의 통합으로 말한 세계문명의 완성은 이미 자본의 형태로 성취되어 있는 것이다. 맑스의 급진성은 여기에 있다. 맑스는 해제와 마찬가지로 세계의 완성을 이미 보았다. 정신이 아닌 자본으로 말이다. 독일에서 아무리 국민의 통합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그것은 가면에 다름 아니다. 이미 문제는 국가 차원을 넘어선 세계의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맑스에게 근대사회의 계급대립은 단순한 것이다. 자연인-시민, 시민-공민, 개인-국가... 어떤 주체적-윤리적 문제설정도 계급대립의 문제설정으로 단순화된다는 것. 이것이 근대사회의 운명적 힘이 가진 가공할 파괴력이다. 이 단순화된 계급 대립은 부르조아지의 패배로 끝나게 될 것이다. 맑스가 주체적-윤리적 문제설정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키는 것은 여기서 부터이다.

『선언』에서 중요한 부분은 왜 부르조아지의 지배력이 종말을 고하게 되는가에 대한 분석에 있다. 위에서 말한 맑스의 계급대립의 문제설정은 맑스의 세계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다. 알튀세르가 맑스가 위대한 대륙을 발견했다고 한 것, 즉 역사유물론의 대륙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위의 세계이해를 발견했다고 하는 점이다. 알튀세르는 이 발견을 상대화시키려 했다.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대륙을 발견했던 것과 동일한 가치를 두면서 말이다. 이 상대화로 알튀세르가 노리려 하는 것은 맑스의 역사인식과 해제의 역사인식의 차이이다. 그리고 이 차이가 말로 맑스주의를 위기에서 구출하기 위해 필요한 수순이었다.

이 차이를 알튀세르 스피노자를 경유해서 밝힌다. 스피노자는 ‘신은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이자, 초월적 원인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신은 초월적이지 않고 내재적이라는 언명은, 신은 자연이자 세계라는 것이다. 그것은 ‘유일한’ 세계이다. 즉 일체가 이 세계 속에 속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에 대한 초월적 지위를 갖는 보편자를 부정하는 것이다. 알튀세르가 스피노자를 경유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해제적인 보편성을 말살하려 하는 시도.

공식 맑스주의에서 토대와 상부구조를 파악하는 방식은 해제 식이다. 토대와 상부구조를 내부와 외부로 설정하고 그것을 일체로 보는 관념이 해제 식의 파악 방식이다. 여기서 토대는 보편성이고 상부구조는 거기에서 파생되는 특수성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다수의 대립(성, 알, 인종 등등)을 계급대립 속으로 해소하는 것, 즉 계급대립을 초월적 위치로 설정하면서 다른 대립들을 보편성 속으로 해소하려는 방식이 그것이다. 하지만 알튀세르는 맑스의 체계에서 내부와 외부가 존재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일단 계급대립의 문제설정이 확립되면 그 외부의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계급대립이 모든 대립에 대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계급대립 외부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세계에 대한 초월적 지위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맑스가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고 한 것은 관념에 대한 물질의 우위가 아니라 표상성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알튀세르가 표현적 총체성과 구조적 총체성을 대립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초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일체의 결과물들은 표상이 되고 그 고유한 단독성은 사라져 버린다. 하지만 계급대립을 구조적 총체성으로 파악하게 되면, 초월적 위치는 사라지고 가 심급의 고유한 단독성이 부각된다. 이것이 중층결정이 노리는 효과이다. 최종심에서의 결정이라는 테제는 계급대립의 초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대립의 단일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 알튀세르는 계급대립의 단일한 세계, 즉 외부가 없는 세계를 상정함으로써 맑스주의의 경제주의-인간주의를 비판한다.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주체적-윤리적 문제설정도 이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선언』에서 맑스는 부르조아 사회는 그 내부에 스스로의 죽음을 초래하게 될 위험요소를 만들어 냈다고 말한다. 바로 프롤레타리아트를. 그렇다면 프롤레타리아트는 무엇인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이다. ‘프롤레타리아는 재산이 없다: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그의 관계는 부르조아적 가족 관계와의 공통점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 현대의 공업노동, 즉 자본 아래로의 현대적인 예속은 프랑스에서처럼 영국에서도, 독일에서처럼 아메리카에서도, 프롤레타리아에게서 일체의 민족적 성격을 빼앗아 버렸다. 법률, 도덕, 종교 등은 프롤레타리아에게 있어서는, 그 뒤에 많은 수의 부르조아적 이해관계를 숨기고 있는 그만큼 많은 수의 부르조아적 편견들이다’. 자본 아래로의 예속, 그것은 부르조아라는 보편계급에 의한 프롤레타리아트라는 특수계급의 통합도 아닐 뿐더러,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보편계급으로의 인민의 동일화는 더더욱 아니다. 이 사태가 지적하는 것은 단지 하나, 즉 계급대립이라는 세계의 단일성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이 내부에 있는 것이지, 외부에서 초월적으로 세계를 통합하는 ‘타자’가 아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이 세계 속의 단지 인민일 뿐이지, 혁명적 의식을 가진 철의 전사들이 아니다. 또한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조아지와 관계 속에서만 그 존재를 확인한다. 이 관계는 계급대립이라는 단일한 세계 속에서의 일반성이다. 그러므로 프롤레타리아트는 단독성을 지닌 하나의 개체이다. 맑스의 주체적-윤리적 문제설정은 바로 이것이다.

루소가 시작한 소송, 그리고 해제가 종말을 고한 근대의 주체적-윤리적 문제설정을 맑스가 전환하는 방식은 ‘단순화하기’이다. 이 단순화란 다름 아닌 ‘계급대립이라는 단일한 세계’의 설정이다. 루소의 ‘에밀’은 어떻게 시민적 주체화가 불가능하게 되고, 인간은 모두 자연인으로 돌아와야 하는지를 설파한다. 여기서 루소는 근대사회의 ‘운명적 힘’의 파괴력에 꼬리를 말고 자연으로 도망가버린다. 해제는 루소가 피신시킨 근대인들을 다시 법정으로 소환한다. 그리고 초월적 보편성의 이름으로 이들을 국민으로 판결한다. 하지만 이 판결은 청년해결학과 다수의 인문학자들에 의해 계속 항소에 걸리고 만다. 키에르케고르, 슈티르너, 토크빌 등등이 그 대표적인 소송인들이

다. 맑스는 이 모든 소송의 종결을 원했다. 하지만 초월적 지위의 설정을 통한 잠정적 해결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맑스는 알았다. 그는 초월적 지위의 설정을 거부하고, 스피노자를 따라 문제의 단순화를 택했다. 계급대립이라는 단일한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단독성은 거기에서 비롯된다. 이들의 타자관계는 항상 대립이며 부정이다. 여기에는 어떤 소환도 뒤따르지 않는다. 오히려 맑스의 소송을 망쳐버린 것은 문제를 복잡화시킨 이후의 사람들이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사물화된 지위가 세계의 총체성을 획득하는 인식주관의 가능성을 갖는다고 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트를 초월적이고 보편적인 지위에 올려놓은 사람들의 책임인 것이다. 레닌과 트로츠키는 프롤레타리아트를 이렇게 파악하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놀랍게도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연민과 애정이 없다. 단지 이들은 계급대립이라는 단일한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타자관계, 즉 일반성만을 보았다.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은 이에 대한 증거물이다. 그러므로 맑스의 소송은 아주 우습게 끝난다. 단지 계급대립이라는 단일한 세계성과 프롤레타리아트의 단독성, 이 두가지가 맑스가 해결의 잠정적 해결을 완전한 해결로 끝내는 것이다. 그 종결은 근대인의 주체적-윤리적 문제설정이 빠졌던 아포리아를 아주 심겁게 끝낸다. 세계는 초월적 지위로 설명될 수 없고, 단지 일회적인 단독성, 즉 단일함으로 설명된다는 아주 쉬운 인식의 전환으로 말이다.

4.

맑스의 상거운 소송은 우리에게 근대의 지 난해하고도 우매한 소송이 결국에는 해결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준다. 쉬운 예로 IMF를 예로 들어 보자. 구조조정은 한국이라는 일국가의 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다. 하지만 어떤 구조조정이어야 하는가에서 문제는 오리무중이 되고 만다. 단독성을 가진 각각의 개체들(개인, 노동계급, 자본 등등)은 절대로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구조조정이라는 대의는 부정할 수 없다. 이는 '한국'이라는 보편성과 '이익집단'이라는 특수성이 절대로 통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맑스의 단일한 세계상은 이 사태를 파악해주는 것이라. 즉 어떤 보편성으로도 통합될 수 없는 단독적인 개체들만이 존재하는 이 세계의 외부없음을 말이다. 그래서 '한국'은 보편성이자, 외부인 절대타자인 것이다. 라캉의 난해한 말들은 개체의 '말' 수준에서 이 분열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맑스가 심겁게 끝내버린 소송에서 우리는 주체적-윤리적 문제설정의 다른 방향을 탐지할 수 있다. 들뢰즈-가타리가 자본주의의 분열증 분석에서 보여준 바는 이에 대한 가장 급진적 해석일 것이다. 들뢰즈-가타리는 욕망을 결핍의 기표로 보지 않는다. 위에서 말해왔듯이 욕망이 타자의 욕망이고, 이것은 결국 보편성에 대한 허무한 요청이라면 근대사회는 유지되지 않는다. 즉 끊임없이 분열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욕망을 기계라고 한다. 계속 생산하는 기계. 그리고 이 기계는 사회적인 배치 arrangement를 통해 각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 이 난해한 이야기가 지칭하는 사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욕망-기계인 개인들은 무한정 자신의 욕망을 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회적인 배치를 통해 사회에 흡수된다. 그래서 무한한 욕망 추구의 무질서와 사회적 질서화가 동시에 가능한 것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이것이 들뢰즈-가타리가 말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분열증이다. 맑스가 말한 계급대립의 단일한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개체가 욕망의 선을 따라 이탈하면서 다시 체계에 흡수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이 보편화되지

도 않으면서 해체되지도 않는 계급대립의 단일한 세계의 속성이다. 계속 이탈하면서 흡수되는 단일한 세계성. 이 세계에서 개인은 어떤 주체화와 윤리화가 가능한가? 이 질문을 계속하려면 주체와 윤리의 보편타당성을 설정하려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단독적인 개인들의 '자기 주체화, 윤리화'가 문제시되어야 한다.

푸코와 폴 베인스의 테마가 보여주는 것은 주체적-윤리적 문제설정의 전환이다. '개인이란 동물 때 중의 하나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자신의 이미지에 가치를 연결시키는 존재이다.' 푸코와 폴 베인스의 대화를 통해 제출된 이 테마는 맑스가 쉽게 비껴간 보편성의 문제설정과 궤를 같이 한다. 이들에게 윤리나 주체화의 문제설정은 보편 타당성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이 자기 스스로에게, 그리고 자기를 둘러싸는 모든 사람들과 단일한 세계에게 정당한 고유성을 돌려주는 것이 이들의 문제설정이다. 세계의 바깥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면,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고유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즉 내부의 소멸과 외부로부터의 창조적 문제설정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의 일회적 공연에 부여하는 열정이 필요한 것이다. 푸코가 아토타를 인용하면서 무대를 윤리의 문제설정 속으로 포섭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한 미국 사회학의 이단적 전통의 맥을 잇는 리처드 세넬트의 작업들 속에 담겨 있는 윤리적 가능성도 평가되어야 한다. 그의 윤리는 '연기'이다. 연기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다. 단지 그 역할 만이 중요할 뿐이다. 그래서 그 역할은 그 고유성에 충실하다. 그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디드로로 대표되는 프랑스 계몽주의의 이단적 전통이 여기에 스며있다. 이러한 이단적 전통에 대한 수집은 억압된 것의 재탈환과 미래에 대한 상황창출을 위해 필요한 것이리라.

5.

이 글에서 주체와 윤리의 문제를 중심으로 맑스를 재독해한 것은 나의 개인적인 경험과 후회(결코 반성이 아닌), 그리고 사색에서 비롯되었다. 90년대를 수놓은 저 난해하고 우매했던(근대의 주체적-윤리적 문제설정이 그랬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포스트 모던의 담론에 깊숙이 머리와 심장을 내맡긴 모두가 남긴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나에 대한 나의 질문이었다. 하지만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 10년 가까이 시간을 반성과 성찰로 침잠한 결과는 무엇인가? 그래서 적극적인 잔해의 수집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 잔해의 수집을 통해 얻은 테마가 주체와 윤리의 문제이다. 포스트 모던 담론이 이야기했던 테마들은 단순한 것이었다. '탈중심화, 타자성'. 이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90년대의 담론이 조금이라도 미래의 상황을 창출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주체와 윤리라는 문제설정이 필요한 듯 했다.

과도한 정치사회의 해체모니가 80년대를 규정했다면, 90년대는 시민사회의 부상으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민사회의 부상이 갖는 적극적 의미를 어디에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딜레마이다. 그것은 시민운동의 역량 부족이나, 소비문화의 창궐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세계로의 가능성을 사유하고 실천하는 운동전영의 무능력함과 게으름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 무능력함과 게으름이란 자기 주변의 작은 단편들을 수집하는 노력의 부재이다. 90년대 담론에 천착한 이유는 그 때문이다. 너무나도 쉽게 변해왔고, 속아온 그 담론들에게 다시 눈을 돌리

면 위에서 말한 두가지 간략한 테마로 그 거품이 축소되었다. 그런데 그 테마들은 시민사회의 부상과 맞물려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시민사회의 부상에 힘을 실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시민사회의 주체화와 윤리의 창출이 시급하게 요청된다는 문제가 그것이다. 그래서 나에게서는 근대성을 관통하는 주체와 윤리의 문제를 다시 정리해야 하고, 그 속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아포리아인지, 그리고 그 극복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벤야민과 레닌의 모티브를 조우시키는 일이었다. 물론 더 많은 조우의 가능성은 도처에 있다. 『선언』 150주년이 무언가의 계기가 되어 그 조우가 도처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150주년을 기념하고자 한다.